

등록번호

여성인권-자료집-2025-002



2025 세계시민연대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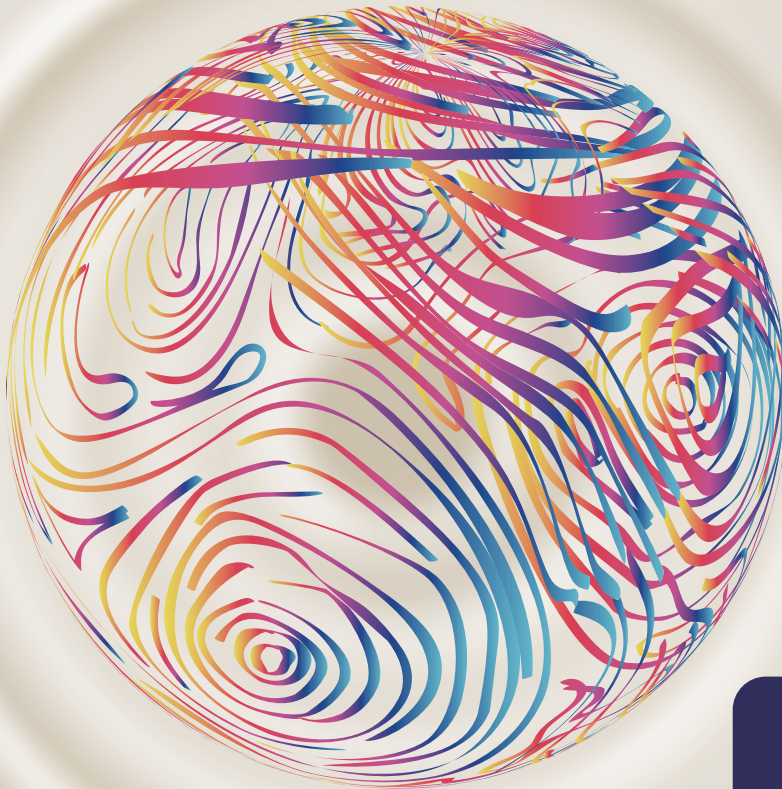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Global Citizenship and Solidarity

경계를 넘는 연대:
폭력의 증언에서
평화의 언어로

Echoes Across Borders:
From Voices of Pain to the Language of Peace

2025. 9. 26.(FRI) 13:00~18:00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컨벤션 3층 로얄홀
Peace&Park Convention 3FL. Royal Hall
The War Memorial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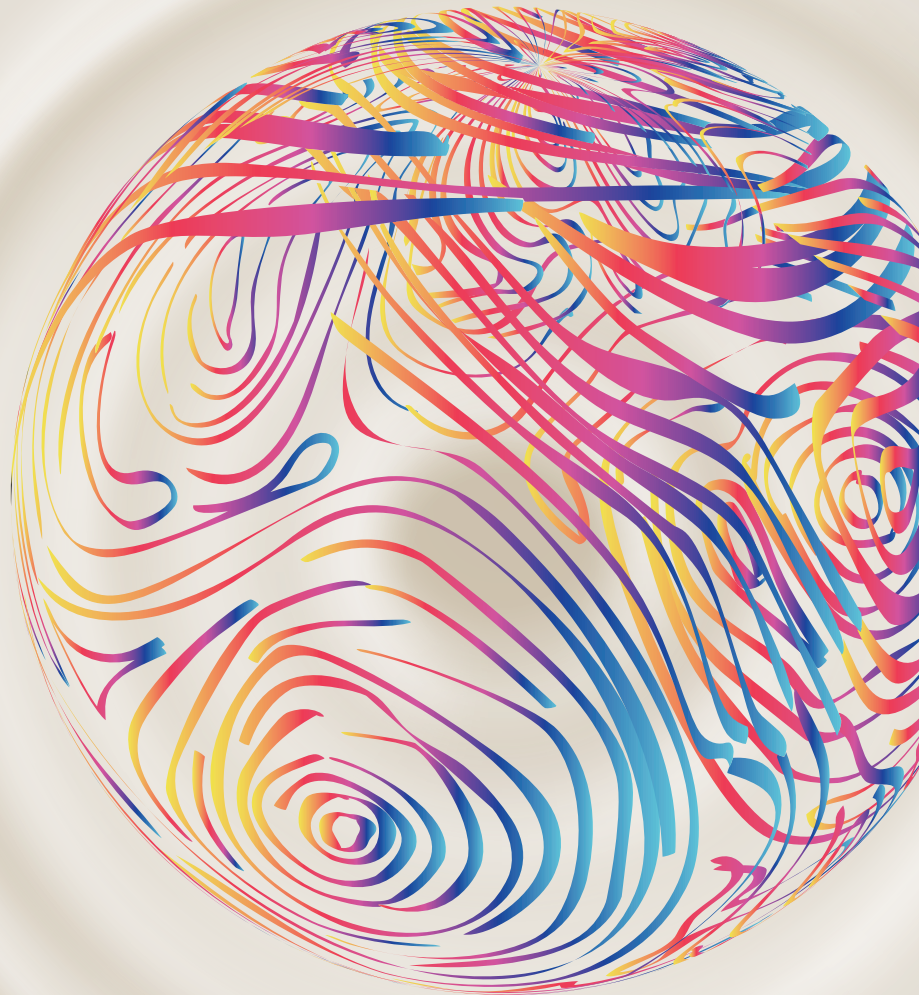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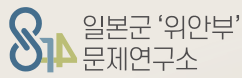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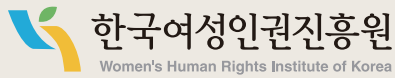
프로그램북
Program Book

2025 세계시민연대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경계를 넘는 연대:
폭력의 증언에서
평화의 언어로

2025. 9. 26.(FRI) 13:00~18:00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파크컨벤션 3층 로얄홀



목 차

행사개요	4
기획취지	5
인사말	7
프로그램 안내	10
연사소개	12

제1부 – 정의의 서막: 법과 증언의 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법적 투쟁의 시작과 역사적 증언의 토대를 조명 사회 :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풀리지 않은 전쟁범죄, 아시아 통합의 계기, 평화로 향하는 관문 Barry A. Fisher 플레시먼애퍼서 파트너 변호사
발표	터널 끝의 빛: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향한 한국의 법적 투쟁 Timothy Webster 웨스턴뉴잉글랜드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류광옥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제2부 – 국제 정의의 확장: 기억에서 규범으로

한 국가의 인권 문제가 세계적 여성인권 담론으로 확장된 과정 고찰 사회 : 신혜수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발표	아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성노예 문제에 대한 초국적 운동의 기회 구조 형성과 활용 Mary M. McCarthy 드레이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발표	기림비와 사회운동 프레이밍: 세계 ‘위안부’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Celina Hollmichel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토론	조시현 식민지정의연구소 소장

제3부 – 현재로의 전환: 전시 성폭력과 지속 가능한 연대

과거사로 인식되던 ‘위안부’ 문제를 현재 진행형의 성별 기반 폭력으로 재구성하고, 미래 연대의 방향을 모색 사회 :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명예교수	
발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평화 시기의 제도적 성폭력 Caroline Peta Norma 로열멜버른공과대학교 글로벌·도시·사회학부 선임강사
토론	심아정 독립연구활동가
토론	Nozomi Tanaka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연표	

2025 세계시민연대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경계를 넘는 연대:
폭력의 증언에서
평화의 언어로

행사개요

행 사 명 : 2025 세계시민연대로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주 제 : 경계를 넘는 연대: 폭력의 증언에서 평화의 언어로
일 시 : 2025. 9. 26.(금) 13:00 ~ 18:00
장 소 : 전쟁기념관 내 피스앤크컨벤션 3층 로얄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계시민연대를 통해 발전해 온 과정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1991년 김학순 님의 최초 공개 증언을 시작으로 약 30여 년간 국가의 경계를 넘어 이어져 온 연대는 학문 간 경계를 넘는 다학문적 접근으로도 확장 발전해 왔다.

<경계를 넘는 연대: 폭력의 증언에서 평화의 언어로>를 주제로 개최되는 2025년 국제 컨퍼런스는 세계 각지의 연구자와 활동가들이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과 정의의 관점에서 사유하고, 세계시민이 연대하며 걸어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장으로 기획되었다.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닌 현재진행형의 인권 이슈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컨퍼런스는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의의 서막: 법과 증언의 장

제1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의 역사를 되짚으며, 국제인권과 규범 형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피해자들이 국가의 부정과 침묵에 맞서 어떻게 법정 투쟁을 이어왔는지 조명하고, 이 과정에서 세계시민연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핀다. 나아가 축적된 사례들이 글로벌 인권 아젠다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도 성찰한다.

국제적 정의의 확장: 기억에서 규범으로

제2부는 세계시민사회의 대응과 연대 사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현재성을 입체적으로 조망한다. 단일 사건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시 성폭력과 관련된 국제법, 나아가 국제규범 발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며, 전시 성폭력에 대한 인식 전환이 내포한 주요 쟁점을 논의한다.

현재로의 전환: 전시 성폭력과 지속 가능한 연대

제3부는 과거사로만 인식되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오늘의 인권문제로 재조명하며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국가 성별·계급·인종 등 다차원적으로 얽힌 이 문제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미래세대에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토론하며, 향후 지속 가능한 연대의 방향을 살펴본다.

2025년 국제 컨퍼런스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특정 국가나 집단의 과거를 넘어, 국제사회의 정의와 규범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시작된 세계시민사회의 움직임이 미래세대와 함께 기억되어, 전시 성폭력 재발을 막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연대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전략사업팀

인사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는

2025년 9월 26일, 「2025 세계시민연대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올해 국제 컨퍼런스는 “경계를 넘는 연대: 폭력의 증언에서 평화의 언어로”라는 부제 아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세계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국제화되어 온 과정을 성찰하고, 이 문제가 오늘날 어떤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1991년, 침묵을 깨고 증언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는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책임의 언어로 전환시켰고, 그 흐름은 한일 시민사회의 연대를 거쳐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민사회로 확장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 연구자들이 35년 넘게 이어온 연대는 이 문제를 단지 과거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닌, 오늘날 여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는 2023년부터 3개년 기획사업으로 「시민연대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그 마지막 해로서 '세계시민 연대'를 중심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과제가 무엇인지를 되짚고, 기억과 정의, 책임과 평화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향후 전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가능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비롯된 역사적 진실이 오늘날 세계 시민사회 속에서 어떠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미래 세대에게 기억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신 보 라



2025 세계시민연대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경계를 넘는 연대:
폭력의 증언에서
평화의 언어로

2025. 9. 26.(FRI) 13:00~18:00
전쟁기념관 내 피스애파크컨벤션 3층 로얄홀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3:00 ~ 13:30	개회사
	기조연설 공감과 연대, 함께 올려주는 힘 차인표 작가

제1부

정의의 서막: 법과 증언의 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법적 투쟁의 시작과 역사적 증언의 토대를 조명

시간	프로그램
13:40 ~ 15:00	사회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풀리지 않은 전쟁범죄, 아시아 통합의 계기, 평화로 향하는 관문 Barry A. Fisher 플레시먼애펜피셔 파트너 변호사
	발표 터널 끝의 빛: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향한 한국의 법적 투쟁 Timothy Webster 웨스턴뉴잉글랜드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류광욱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질의응답
Coffee Break	

제2부

국제 정의의 확장: 기억에서 규범으로

한 국가의 인권 문제가 세계적 여성인권 담론으로 확장된 과정 고찰

시간	프로그램
15:10 ~ 16:30	사회 신혜수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발표 아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성노예 문제에 대한 초국적 운동의 기회 구조 형성과 활용 Mary M. McCarthy 드레이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발표 기림비와 사회운동 프레임: 세계 '위안부'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Celina Hollmichel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토론 조시현 식민지정의연구소 소장
	질의응답
Quiz Break	

제3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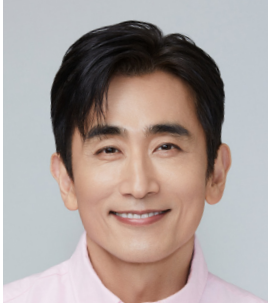
현재로의 전환: 전시 성폭력과 지속 가능한 연대

과거사로 인식되던 '위안부' 문제를 현재 진행형의 성별 기반 폭력으로 재구성하고, 미래 연대의 방향을 모색

시간	프로그램
16:40 ~ 18:00	사회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명예교수
	발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평화 시기의 제도적 성폭력 Caroline Peta Norma 로열멜버른공과대학교 글로벌·도시·사회학부 선임강사
	토론 심아정 독립연구활동가 Nozomi Tanaka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종합토론
18:00	폐회

연사소개

기조연설



차인표

작가

주요경력

- 2025년 제14회 황순원문학상 황순원신진상(소설 '인어사냥') 수상
- 2024년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필수 도서(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선정

주요저서

- 『인어 사냥』 (2022)
-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2021)
- 『잘가요 언덕』 (2009)

1부 세션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경력

- 한국젠더법학회 회장
-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회장 등 역임

주요저서

- 『평등, 차이, 정의를 그리다』 (2019)
-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위하여』 (2004)

사회



Barry A. Fisher

플레시먼애펜피셔 파트너 변호사

주요경력

-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홀로코스트 사건 변호인
-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 한국 포함 아시아 피해자 대표 변호인, 국제회의 연사 등 활동

주요수상

- 2021년 올해의 국제 변호사상
- 2008년 노근리 평화상
- 1997년 아미쿠스 폴로니아에상

발표



발표

Timothy Webster

웨스턴뉴잉글랜드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요경력

- 도쿄와 뉴욕에서 국제 분쟁 해결 업무 수행
- 베이징과 충칭에서 중국 교육 기관 및 법률 관계자 대상 자문
- 예일 로스쿨,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파리 대학교, 국립 대만 대학교 및 아시아, 유럽, 북미의 기타 기관에서 아시아 법 교육
- 미국 비교법 저널, 하버드 국제법 저널, 스탠포드 국제법 저널, 버지니아 국제법 저널에 논문 게재



토론

류광옥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주요경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일본) 대리인단
-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한국) 대리인단
- '위안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피고 외교부) 대리인단
-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피청구인 한국) 대리인단

연사소개

2부 세션



사회

신혜수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주요경력

- 유엔인권정책센터 상임대표
- 성매매추방범국민운동 상임대표
-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주요수상

- 2010년 제10회 비추미 여성대상 해리상
- 1996년 제1회 세계여성인권상



발표

Mary M. McCarthy

드레이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주요경력

- 미국 아이오와주 드레이크대학교, 정치 및 국제관계학과 교수
- 아시아 - 태평양 저널 : 일본 포커스 공동편집자
- 前 미국 아이오와주 드레이크대학교, 정치 및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 前 미국 아이오와주 드레이크대학교, 정치 및 국제관계학과 조교수



발표

Celina Hollmichel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주요경력

-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피네모어대학 교수 펠로우십 진행 중

주요활동

- CITI 프로그램, 사회·행동과학 연구 수료
- 조지워싱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북한 프로그램 이수
- 하버드대학교 정부 및 동아시아학 학사 우등졸업
- 조지워싱턴대학교 컬럼비아 특훈 펠로우십과 하버드 웨더헤드 국제관계 센터 윌리엄스 로지 국제정부 및 공공정책 펠로우십 수여



토론

조시현

식민지정의연구소 소장

주요경력

- 식민지정의연구소 소장
- 前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 前 건국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 前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부교수

주요저서

- 『군함도, 끝나지 않은 전쟁』, 김민철 외 공저 (2017)
- 『2015 '위안부' 합의 이대로는 안된다』, 김창록 외 공저 (2016)
- 『한일간 역사현안의 국제법적 재조명』, 김부자 외 공저 (2009)



사회

김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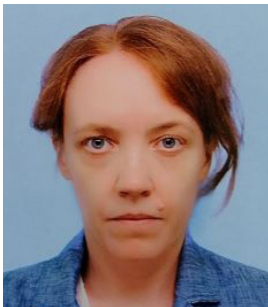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명예교수

주요경력

- 한국여성재단 이사
- (사)또 하나의 문화 이사장
- 前 아시아여성학회 학회장
- 前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 객원교수

주요저서

-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 권은선 외 공저 (2024)
- 『코로나 시대의 페미니즘』, 권김현영 외 공저 (2020)



발표

Caroline Peta Norma

로열멜버른공과대학교 글로벌·도시·사회학부 선임강사

주요경력

- 히토츠바시 대학 객원 연구원
- 로열멜버른공과대학교, 글로벌·도시·사회학부 선임강사
- 前 히토츠바시 대학 객원 부교수
- 前 로열멜버른공과대학교, 글로벌·도시·사회학부 강사

주요수상

- 2017-2020년 디스커버리 신진 연구자상



토론

심아정

독립연구활동가

주요경력

- 국제법X위안부 세미나팀
- 극동군사재판 판결문/기소장 번역 공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 일본국회의사록 (2014-2016)번역 책임연구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 2025 정의기억연대 김복동 연구지원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증언 영상 해제 및 콘텐츠화 공동연구원 (정의기억연대)

주요저서

- 『폭력에 대항하는 법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언어, 기억, 그리고 연대』, 도미야마 이치로 외 공저 (2024)
- 『수용, 격리, 박탈 - 세계의 내부로 추방당한 존재들, 동아시아 수용소와 난민 이야기』, 신지영 외 공저 (2024) 로지 국제정부 및 공공정책 펠로우십 수여



토론

Nozomi Tanaka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주요경력

- 일본 신시대 아시아 피스 아카데미 (NPA) 조사연구원
- 前 평화외교공공단활동 (PPDC) 일본측 운영위원
- 前 외교부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평화외교공공단활동 (PPDC) 일본측 단원
- 前 한국연구재단 이대연구프로젝트 연구원

주요활동

- 2021년 일본 게이센여자학원대학 대학원 평화학연구과 석사논문 우수논문 선정

2025 세계시민연대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경계를 넘는 연대:
폭력의 증언에서
평화의 언어로



제1부

정의의 서막: 법과 증언의 장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법적 투쟁의 시작과 역사적 증언의 토대를 조명

사회

양현아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풀리지 않은 전쟁범죄 - 아시아 통합의 계기, 평화로 향하는 관문

Barry A. Fisher | 플레시먼애펜피셔 파트너 변호사

발표

터널 끝의 빛: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향한 한국의 법적 투쟁

Timothy Webster | 웨스턴뉴잉글랜드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

류광옥 |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일본군 '위안부' 문제 : 풀리지 않은 전쟁범죄— 아시아 통합의 계기, 평화로 향하는 관문

배리 A. 피셔, Fleishman & Fisher, 로스앤젤레스

서론

21세기가 시작된 지도 2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년 전부터 지난 세기의 마지막 10년 동안 미국 법원의 역사적 판결은 대규모 집단 소송과 다국적 협상의 물꼬를 트며, 결국 일본의 전쟁 동맹국이었던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홀로코스트 배상 문제 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국제 인권 변호사로서 소수 민족, 인종, 종교, 정치적 약자를 대변해 왔으며, 미국 내 모든 홀로코스트 집단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배상 협정의 협상팀 일원으로 국가 대표들과 함께 직접 서명하였고, 스위스 은행과의 합의를 포함해 100억 달러가 넘는 배상금을 확보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 유럽은 21세기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전쟁 가해국이었던 독일은 1990년에 통일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는 여전히 전쟁과 식민지 과거의 포로로 남아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지났고, 독일 통일 역시도 40년이나 지났지만 한국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분단 상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한 채 지난 과거의 참상을 현재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 일본, 중국, 한국등에서 법적 분쟁을 야기했고,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기 위한 대규모 시위와 정치적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져 있듯이 일본이 저지른 잔혹행위의 참상은 매우 끔찍하고 광범위했습니다. 중국인, 한국인, 그리고 다른 이들이 학살, 강간, 731부대의 생화학전과 아우슈비츠를 방불케 하는 '생체실험'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차원의 만행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제 노동과 '위안부' 제도입니다. 수세기 전의 참혹했던 아프리카 노예무역 이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규모의 노예선을 운항하며, 일본은 수천 명의 여성, 아동, 남성, 그리고 여러 나라의 전쟁포로들을 그들이 지배하던 광대한 태평양 지역을 가로질러 한국, 중국, 필리핀, 버마, 네덜란드령 동인도/인도네시아 등으로 강제 연행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공장·탄광·군 위안소 등의 일본 정부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철도·해운 회사들이 가담해 이익을 챙겼으며, 그 재원은 일본이 점령국에서 약탈한 자산으로 채워진 국고에서 나왔습니다.

독일이 전쟁에서 저지른 만행은 일본에 비하면 그 기간이 짧습니다. 1931년 9월 18일 일본의 중국 침략으로 시작된 아

시아·태평양 전쟁은 아시아 대부분과 태평양 지역 전반을 포괄했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져 1945년에야 종전되었습니다. 1931년 중국 침략은 이미 25년 넘게 일본의 지배 아래 있던 조선의 명성황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지배권을 장악한 것의 연장선이었습니다.

1999년, 제가 워싱턴, 베를린, 비엔나를 오가며 서틀외교에 참여하던 시절, 일본의 독일 유사 범죄 피해자들에게 관심을 돌렸습니다. 저는 홀로코스트 사례처럼 다국적 법률가와 전문가, 활동가, 피해자들이 함께하는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활동들은 추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제가 일본 전쟁 범죄, 특히 ‘위안부’ 문제에 주목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모든 활동은 전적으로 무보수로 수행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나의 동기는 무엇이었으며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저의 어머니의 고향 폴란드는 수세기 동안 전쟁의 격전지였고, 적대적인 국가들 사이의 교차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한국에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역시 역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희생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20세기에 발생한 러일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은 한국과 폴란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각 분쟁의 종결에는 조약이 뒤따랐지만, 이들은 모두 자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된 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희생되었습니다.

예컨대, 1905년 일본과 러시아 간의 포츠머스 조약은 일본의 조선(한국) 우월권을 승인했으며, 1939년 독일-소련 불가침 조약은 독일과 러시아가 폴란드를 분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의 지도자를 제거하고 지배권을 장악했듯, 러시아는 카틴 숲 학살에서 폴란드 지도부를 살해했습니다.) 1945년의 얄타 협정 또한 전후의 한국과 폴란드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점령을 피해 오래전 도피해 중국 또는 소련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들 및 일본의 강제 노동에 참여하거나 북한에 있는 이들은 통일된 한반도 혹은 심지어 남한으로의 귀환조차 불가능한 디아스포라 상태에 영락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세계 각지로 흩어진 한국인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했지만 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한인 디아스포라가 만약 조직적으로 연대한다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엄청난 동력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폴란드 역사 또한 러시아 제국에 의해 병합되고 일부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넘어가 제1차 세계대전 종료까지 이어진 것으로 시작된 거대한 디아스포라를 포함하며, 대이주(Great Emigration)라고 불리는 폴란드 역사의 한 시대를 포함합니다).

일본 전쟁 범죄 중에서도 제가 특히 ‘위안부’ 문제에 주목한 이유는, 그 부당함과 참혹함이 너무도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수용소 내 강제 성노예와는 다른 성격이지만,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대한민국·북한·중국·대만·필리핀·네덜란드·인도네시아 등 피해국 모두의 보편적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독일과 오스트리아 피해자들을 지지했던 국가 및 인권 단체들로부터도 동일한 지지를 받을 것이라 보았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한국, 북한, 중국, 대만이 함께 직면하는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이들 국가 간의 단결을 기대했고 더 나아가 한국의 통일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왜곡된 전쟁 역사의 부당함에 대해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인했던 것처럼, 종전 이후 동서 진영 간의 냉전이 급속히 전개되었으며 일본이 잔인하게 한국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가운데 한국과 관련된 진실은 희생 양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허구로 가득 차 있음에 따라 한국전쟁 이전 남한에서 발생했던 사건들뿐만 아니라 노근리 학살과 같은 한국전쟁 당시 잔혹 행위들 또한 은폐되었습니다. 정복자의 시선으로 기록된 역사 속에서 진실이 희생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홀로코스트 사건을 맡으면서 동시에 저는 일본 전쟁 범죄 문제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1999년 말,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중국·한국인 피해자 단체들과 접촉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중국 디아스포라 단체인 “세계 제2차대전 아시아 역사 보존 연맹(Global Alliance for Preserving the History of WWII in Asia, 이하 GA)”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이 단체를 디아스포라 한국인을 위한 훌륭한 모델로 보았습니다. 1999년 9월, 저는 GA 대표 이그네이셔스 딩(ignatius Ding)과 도쿄에서 일본의 공익 변호사와 배상 단체 리더들을 만나 변호사·학자·활동가·피해자들로 구성된 다국적 팀을 결성해 일본의 전쟁 범죄를 다루는 법적·정치적 전략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일본 변호사들은 이미 1991년부터 지난 8년간 한국인 ‘위안부’ 피해자인 김학순 할머니를 위해 소송을 진행해왔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기에, 저와 딩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1999년 12월, 제가 전쟁범죄와 배상에 관한 국제 시민포럼 (International Citizens’ Forum on War Crimes and Redress)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도쿄를 방문하였을 때는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흘간 열린 이 역사적 회의에서 우익 세력이 확성기를 들고 반대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저는 유일한 미국인 연사로 참여했습니다.

홀로코스트 사건들에서 저와 동맹관계였던 시몬 비젠탈 센터 (Simon Wiesenthal Center)와 그 지도자 에이브러햄 쿠퍼 (Abraham Cooper)가 이 도쿄 회의에 불참하고 지지를 표하지 않은 일은, 어쩌면 미래의 난관을 예고하는 신호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회의 직후, 독일과의 협상에서 돌파구가 열렸고, 저는 베를린으로 날아가 매들린 올브라이트 (Madeleine Albright) 미 국무장관과 독일 외무장관이 참석한 회의에 합류했습니다.

새로운 세기와 소송

새로운 천년인 2000년은 다사다난하면서도 매우 희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전까지 중국의 피해자 단체들은 대체로 정부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했습니다. 2000년 초에 저는 베이징에 가서 여러 학자와 변호사, 그리고 왕 쉬안 (Wang Xuan)을 비롯한 주요 활동가들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상하이사범대학의 쑤즈량(Su Zhiliang) 교수는 중국 ‘위안부’ 여성연구소(Chinese Centre for Comfort Women Research)를 설립한 지 얼마되지 않은 2000년 3월, 중화인민공화국 최초로 일본 관련 전쟁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첫 번째 컨퍼런스는 중국 ‘위안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Symposium on Chinese Comfort Women)로써, ‘위안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고, 저는 이 컨퍼런스에 초청된 유일한 미국인 연사였습니다.

이 심포지엄에서 저는 중국과 한국, 북한,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학자와 변호사,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남북한 사람들이 놀라울 정도로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마치 같은 해 개봉한 박찬욱 감독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또한 북한 음악을 처음 접했는데, 민속음악학을 공부했던 저로서는 그것이 북한과 러시아의 깊은 관계를 이해하는 창이 되었습니다. 이 만남은 이후 제가 평양을 여러 차례 방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금수산태양궁전 내부 참배와 주체사상 체험을 통해 북한의 정신과 영혼을 직접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쉰 교수님이 주최하신 컨퍼런스 논의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배상을 위한 국제연대협의회(International Solidarity Council for Redress, (the ISCR))'를 출범하였고, 저는 이후 활동에도 활발히 참여하였습니다. 중국, 한국, 북한,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등 각국 대표들이 참가했고, 그중 일본의 뛰어난 활동가 아리미츠 켄(Arimitsu Ken)은 코디네이터로 참여하여, 이 후 전략회의와 소송 과정에서 수년간 매우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2000년도는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잇따른 해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저는 미국 법원에 제출할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 사건을 준비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의 변호사와 피해자 단체들과 협력해 100건이 넘는 피해 진술서를 수집·검토했고, 그 결과 황금주-일본 '위안부' 피해자 집단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원고는 한국인 6명, 중국인 4명, 필리핀인 4명, 대만인 1명으로 구성된 15명의 피해자였습니다. 2000년 9월 18일, 일본의 만주 침략일과 같은 날, 미국 워싱턴에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같은 시각 주미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시위가 열렸고,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세계 뉴스 발표회에는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피해자들과의 원활한 협력을 위해, 저는 GA,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The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나눔의 집 (House of Sharing)과 협력하여 피해자를 만나 소송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릴라필리피나(Lila-Pilipina)와 아시아여성인권센터(Asian Centre for Women's Human Rights)와도 협력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함께해 온 저의 친구이자 동료인 작가이자 영화감독인 김대실(Dai Sil Kim-Gibson)도 그 중 한 분입니다.

변호인단에는 일본 변호사협회장을 역임했던 코켄 쓰치야(Kohken Tsuchiya) 회장, 제 친구인 타카하시 토루(Takahashi Tohru), 한국의 장완익 변호사와 최봉태 변호사님께서 참여했습니다. 최봉태 변호사님은 훗날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순징(Sun Jing) 변호사와 강지안(Kang Jian) 변호사, 대만에서는 훗날 대만 법무부 장관이 된 왕칭핑(Wang Ching-Feng)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2000년 말, 저는 황금주 할머니 사건을 담당하며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 Military Sexual Slavery)에서 여러 변호사와 목격자를 만났습니다. 이 증언들은 90년대 요시미 요시아키(Yoshimi Yoshiaki) 교수의 중요한 논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같은 해, 중국 하나오카 학살 피해자들을 대신해 제기된 일본 법원의 가지마(Kajima) 소송이 논란 속에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스파르타쿠스'와도 같은 강제노동자 봉기 지도자 쟈 쉰(Geng Zhun)을 직접 만나, 함께 베이징대학교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발표했습니다.

부당한 결말: 미국 정부의 반대

제가 황금주 할머니 소송에서 겪은 일들은 홀로코스트 관련 소송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2001년 공화당 부시 행정부가 출범하자 미국 정부는 모든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노동 사건에서 일본 편을 들고 황금주 할머니를 포함한 피해자들을 외면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피해자들에게 미국이 배상을 장려했던 것과는 극명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미국의 권고에 따라 과거사를 인정하고 상당한 배상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책으로 꼽히는 '난징대학살(Rape of Nanking)'의 저자 아이리스 장(Iris Chang)과 저는 미국 신문에 기고한 논평에서, 미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는 사실을 비판하며 "이 여성들은 미국 정부가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일본과의 분쟁 해결 협상을 도와줄 것을 기대했다"고 썼습니다. 또한 미국은 국제 무대에서 인신 매매를 금지하고 여성 인권을 증진하는 국제법을 지지하면서 유럽 피해자를 지지하는 한편 아시아 피해자들에게는 등을 돌리는 이중잣대를 보였습니다.

제가 미국 정부 입장을 처음 극적으로 체감한 사건이 부시 행정부 초기의 오노다(Jeong v. Onoda) 소송입니다. 이 사건은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고령의 한국인 남성인 정재원씨를 위한 소송이었습니다. 정재원씨는 전쟁 동안 오늘날의 북한 지역에 있는 일본 회사에서 강제 노동을 겪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 그 기업은 로스앤젤레스의 주요 호텔을 소유한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직후, 제가 관련 사건에서 심리를 진행하던 중, 항공편이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변호사가 워싱턴에서 극적으로 등장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요청했으며 판사에게 일본의 손을 들어달라고 호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주 법원 판사는 공화당 소속의 보수 성향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곧바로 보복이 뒤따랐고, 그는 부시 대통령의 연방 법원 판사 임명 후보 명단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째, 일본 내 소송에는 전혀 협조하지 않던 북한 정부가, 정재원-오노다 사건에서는 제가 평양에서 증인을 만나는 일을 지원했습니다. 둘째, 도쿄의 변호인단과 함께 일본 기업으로 하여금 도쿄 기록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사 기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역사적인 법원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저는 두 명의 동료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한 명은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법학 교수 중 한 명인 잭 골드스미스(Jack Goldsmith, 현 하버드 로스쿨 교수이자 전 부시 행정부 백악관 법률고문), 다른 한 명은 어윈 체머린스키(Erwin Chemerinsky, 현 UC 버클리 로스쿨 학장)로 진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제노동 피해자를 지지하는 강력한 법정 친구 의견서를 공동제출했지만, 결국 황금주 할머니 소송과 동일한 근거로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 설명하겠습니다만, 이에 앞서 먼저 다국적 배상 운동 단체와 변호사들의 협력으로 진행된 몇 가지 다른 사건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제기했던 제 소송 중 하나도 결국 황금주 할머니 사건과 같은 결말을 맞았습니다.

미쓰이광업 소송(Zhang v. Mitsui)은 2005년 제가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으로, 중국의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대리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허베이성과 하이난성에 살고 있는 6명의 고령의 장애인 남성이 원고였고, 이들은 베이징의 변호사 쑨징(Sun Jing)과 함께 로스앤젤레스에서 증언했습니다. 쑨징은 활동가 왕쑤(Wang Xuen) 및 GA와 함께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2002년에는 제가 1999년 도쿄 첫 방문에서 알게 된 저명한 일본 변호사 코켄 쓰치야(Kohken Tsuchiya)와 로스앤젤레스 이웃이자 친구인 731부대 전문가 셸던 해리스(Sheldon Harris) 교수를 포함한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중국 하얼빈에 위치한 일본군 비밀 부대인 731부대의 생물·화학전 연구소의 중국인 피해자들을 대리했습니다. 도쿄 법정에서 배상금은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받았지만, 일본 정부가 치명적인 병원체를 퍼뜨리고 끔찍한 이른바 생체실험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법원의 선언적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그 실험에는 탄저균, 장티푸스, 콜레라 배양, 그리고 페스트에 감염된 곤충을 중국 이우(Yiwu)를 포함한 여러 마을들에 살포하는 행위가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왕쑤와 함께 이우(Yiwu) 마을을 방문하여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을 직접 만났었습니다.

올해, 전쟁 종식 80주년을 맞아 731부대의 생체실험을 고발하는 영화 731(731 Biochemical Revelations)이 중국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당시 731부대에 배속되었던 일본군 병사 95세 히데오 시미즈(Hideo Shimizu)의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중국 법원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일본의 ‘죽음의 함선(Death Ships)’이라 불리는 해상 운송선이 강제노동 피해자를 실어 날랐다는 사실에 주목해왔고, 피해자 단체들과 GA에도 일본의 해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GA의 압박 속에 미쓰이해운 재벌을 상대로 중국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는 일본이 강제노동에 동원하기 위해 중국 선박을 몰수한 사건을 다룬 것이었습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012년에 2,6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확정하였으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 상하이 법원의 명령에 따라 미쓰이 소속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압류되는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고, 사건은 신속히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앞서 미국 정부가 적대적 입장을 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재원-오노다 소송 이후에 저희가 “위안부” 소송을 진행하며 수년간 다져온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황금주 할머니는 대법원에만 두 차례 방문하는 등 6년 동안 연방 소송과 상소법원에서의 법정 다툼을 이어 가셨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저는 대한민국 외교부를 방문해 소송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1965년 한일기본조약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입장 표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모든 단계에서 수많은 법적 쟁점과 방어 논리가 다루어졌으나, 결국 미국 정부의 특별 예외 주장 하나가 사건의 향배를 갈랐습니다. 이에 대해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에게 미국 연방 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여 ‘국제법 또는 미국 조약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불법행위청구법(Alien Tort Statute)에 따라 제기되었습니다. 이 법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다른 외국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피고측은 일본이 외국주권면제법(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에 따라 면제인지 여부, 상업적 예외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해당 소송에서 정식 당사자가 아니었고 참여 권한도 없었음에도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미국은 입법·사법·행정 3권 분립 체제이므로, 외교정책에 민감한 문제는 사법부가 개입할 수 없는 정치적 문제이며, 이는 대통령의 전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안부' 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사법부가 심리할 수 없는 정치적 사안으로, 대통령의 배타적 권한 영역에 속한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히로시마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되며 막을 내렸듯이, “위안부” 소송 역시 일본군 피해자들이 미국 법정에서 전시 만행에 대한 배상을 구할 길을 찾지 못한 채, 미국 정부가 던진 법적 폭탄으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이는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쟁 직후 일본에서 제기된 최초의 피해자 소송, 즉 시모다(Shimoda v. Japan) 소송입니다.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생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일본은 미국과의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역설적으로 일본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원폭 투하가 “정당했다”는 논리를 펼쳐야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그 주장을 택했고, 진주만 기습일과 같은 날인 1963년 12월 7일에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것으로 대통령 권한을 확장하고 강화하려는 노력과 궤를 같이합니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극단적인 수준으로 치솟았고 지금까지도 대법원에서 묵인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라면 극단적이라고 여겨졌을 이른바 단일 행정부 이론(Unitary Executive Theory)을 사실상 수용하여, 행정부·군·사법 집행 등 모든 기관이 한 사람에게 종속되고 독립적·초당적 기관의 견제를 받지 않는 권한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 이론은 대통령이 미국 도시에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내포합니다. 마치 트럼프가 당선되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한국에서 시도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의심스럽게도 미국의 부정선거 거부 운동 ‘스탑 더 스틸(Stop the Steal)’의 한국판과 어떤 식으로든 조율된 것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기소를 “숙청(purge)”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똑같은 표현을 브라질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 기소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위헌이라고 판결한 항소법원 판결에 대해 긴급히 연방대법원 심리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바로 황금주 할머니 사건과 다른 여러 사건에서 전개되었던 논리와 같습니다. 즉, 법원은 대통령이 외교 문제 관련하는 어떤 일에도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는 무역도 포함되며, 지금 보우소나루와 관련된 사태에 대한 보복으로 부과된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50% 관세도 그 예입니다.

결론적 고찰: 앞으로의 길

마지막 결론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한국, 일본, 중국과 미국의 수많은 변호사들이 제기한 일본의 전쟁 범죄 피해자 소송 사건은 모두 국제 배상 운동의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구성 요소였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운동에는 다국적 조직과 활동가, 정치인, 변호사들이 참여하였으며 이들의 노력은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전 세계 공무원과 시민들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기타 만행에 대한 역사적·정치적 인식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1999년에 시작된 이래로 오늘날까지 26년간 이어지고 있는 배상 운동은 다국적이고 다층적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운동에 참여한 중국과 한국 활동가들은 4100만 건의 서명을 모아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부당하게 차지하는 것을 막는 대규모 청원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의 NGO들은 일본계 미국인 하야시 혼다(Honda) 의원이 주도한 미국 의회 121호 결의안과 121 연합(121 Coalition)으로 알려진 강력한 연합체와 같이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배상을 요구하는 각종 유엔 및 의회 결의안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121 연합에는 김현정(Phyllis Kim) 대표의 원코리아포럼(One Korea Forum)과 현재 AOK 액션원코리아(Action One Korea)를 이끌고 있는 정연진 대표의 바른역사정의연대(Historical Justice Now) 등 미국과 한국, 중국 NGO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열린 시위에는 제가 참여한 도쿄 야스쿠니 신사 앞 시위도 포함됩니다. 그곳에는 강제로 징집된 조선인들이 안치되어 있지만, 신도 교리 때문에 사후에도 천황을 수호하는 존재로 여겨져 여전히 가족에게 송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과가 컸던 것은 전 세계에서 진행된 ‘위안부’ 기림비 건립 운동입니다. 일본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 기념비들은 현재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미국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동상은 샌프란시스코의 ‘평화의 소녀상(3 Women Column of Strength)’으로 한국인과 중국인, 필리핀인 ‘위안부’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교외 글렌데일 공원의 작은 동상 하나는 가장 큰 법적 분쟁을 불러왔는데, 홀로코스트 부정론과 궤를 같이하는 대표적 ‘위안부’ 부정론자 가세 히데아키(Hideaki Kase)가 주도한 일본 우익 세력이 수백만 달러를 투입했음에도, 저는 이 사건의 연방 재판과 항소 과정에 참여해 일본 측이 패소하도록 했고, 동상은 오늘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저는 북한 관계자들의 진정성을 느꼈고 긍정적인 신호도 여럿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평양 호텔 연회장에서 남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가족과 상봉하는 것을 목격했고 서울 공항에서는 북한 사람들이 고려항공 비행기를 타고 가족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모든 낙관적인 전망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최근 일본 선거에서 우익이 승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편을 들며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8월 25일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과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가 한국의 문제이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는 무지한 발언을 내놓았으며 이는 러시아의 침략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자체가 문제라고 했던 그의 발언과 유사합니다. 또한 트럼프는 미군 기지는 대한민국이 임대한 땅이 아닌 미국이 소유한 땅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임대한 군사기지로 보고 2012년에 무력으로 합병하여 러시아로 편입한 푸틴의 사고방식과 유사합니다. 더 나아가 트럼프는, 한국인들을 마치 마피아 범죄자 취급하며, 현대자동차의 수십억 달러 규모 공장 건설이 그의 미국 투자 요구에 순응한 결과라는 식으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푸틴의 통제를 받는 김정은에 대한 애정과 지지를 다

시금 드러내며, 네 번째 '브로맨스(bromance)'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했는데, 이는 한반도의 분단과 군사적 대립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하나 꼽자면, 트럼프와 푸틴 간의 일종의 거래로 인한 변화입니다. 즉, 우크라이나를 중동과 맞바꾸는 형태로, 푸틴이 이란의 패권 지원을 철회함으로써 이란이 북한에 의존하던 미사일·핵개발 협력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북한은 다소 여유를 얻어 2000년대 초와 같이 남북관계에 다시 관심을 둘 여지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최근 한국을 둘러싼 정세는 미래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던집니다. 그럼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는 역사적, 정치적 의식을 고양하고, 만행을 인정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노력을 배가할 때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민족이 오랫동안 겪어온 피해와 분단의 악몽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위안부'라 불린 여성들이 가진 공통된 공포가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백만 한국인 디아스포라가, 중국 디아스포라가 구축한 글로벌 연맹처럼 조직적으로 연대한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한국 정부가 주도해 글로벌 한인 디아스포라 연맹(Global Alliance of Koreans in Diaspora)을 창설하고, 중국 디아스포라 연맹과 협력해 다국적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평화로운 아시아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 한인들이 오래도록 간직해온 통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해외 교포들 사이에서 모두 불려온 1932년의 유명한 노래이자 저 역시 연주한 경험이 있는 '타향살이'에 담긴 꿈을 실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터널 끝의 빛: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향한 한국의 법적 투쟁

티모시 웹스터,
웨스턴 뉴잉글랜드 대학교
초국경법 교수

2025 세계시민연대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5년 9월 26일
전쟁기념관(서울시)

개요

- 초국적 인권 소송
- 초국적 인권소송은 왜 일본과 미국의 위안부들을 구제하지 못했는가?
- 한국 판결: 전환점인가?
- 결론

초국적 인권 소송

- Sikkink : 일본(1990~2000년대)과 한국(2010~2020년대)에서 나타난 전쟁 피해 배상 소송의 “정의의 연쇄 현상 (justice cascade)”
- Koh : 초국적 공법 소송은 당사자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확립하며, 국제 규범을 수용함
- 대부분의 국제기구와 법률 전문가들이 여성 편에 서 있는데도, 법원은 왜 ‘위안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가(혹은 들어주지 않았는가)?”

3

왜 초국적 인권소송은 왜 일본과 미국의 ‘위안부’들을 구제하지 못했는가?

- 여성 인권운동가들의 우려: 법은 여성을 무시/종속시켰고, 여성 보호의 수단으로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함
- 면제: 주권국가 및 외국국가는 재판권에서 면제됨
- 시효 문제: 증거 부족·소멸시효로 청구 기각
- 조약상 권리 포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배상 포기의 선례가 됨
- 삼권분립: 배상 문제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와 입법부의 영역

4

일본 내 소송

원고	나라	위안부 피해자 수	제기연도	1심재판	항소	일본대법원	기각사유
김학순	한국	8/40	1991	2001	2003	2004	1심: 주권면제로 기각 항소: 주권면제 기각
하선녀 (Ha Sun-nyo)	한국	3/10	1992	1998	2001	2003	1심: 제한된 범리로 원고 승소 항소: 입법 재량(삼권분립) 인정, 그러나 청구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 에도 불구하고 유지됨
Henson	필리핀	46/46	1993	1998	2000	2003	1심: 주권면제 및 소멸시효 항소: 원심 유지
송신도	한국	1/1	1993	1999	2000	2003	1심: 주권면제 항소: 주권면제 기각
Ploeg	네덜란드	1/8	1994	1998	2001	2004	1심: 일본-네덜란드 조약에 따른 권리 포기 항소: 원심 유지
Li	중국	4/4	1995	2001	2004	2007	1심: 주권면제, 소멸시효 항소: 1972년 공동성명 에도 불구하고 청구 존속
Guo	중국	2/2	1996	2002	2005	2007	1심: 주권면제, 조약상 권리 포기 항소: 권리 포기 인정, 주권면제 기각
Wan	중국(산시성)	10/10	1998	2003	2005	2005	1심: 주권면제 항소: 권리 포기 없음, 주권면제 기각
Gao	대만	9/9	1999	2002	2004	2005	1심: 주권면제, 소멸시효 항소: 원심 유지
Chen	중국(하이난)	8/8	2001	2006	2009	2010	1심: 주권면제, 소멸시효 항소: 주권면제 기각

5

미국내 소송

- **황금주 할머니 - 일본 (미국 D.C. 연방항소법원, 2005)**
 - 국제 강행규범 위반에도 불구하고 주권면제
 -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미국 법원에서의 청구권을 소멸시킴

6

한국의 판결

- 3건의 한국 소송 모두 일본 정부 상대 소송에서 승소
 - 서울지방법원 (2021): 2016 가합 505092
 - 서울고등법원 (2023): 2021 나 2017165
 - 청주지방법원 (2025): 2024 가단 52192
- 일본과 미국의 재판을 거쳐, 법원을 정의 실현의 장으로 다시 세움
- 인권법에서는 강행규범 위반에 대해 국가면제를 적용하지 않음
- 법원이 법치주의 원칙을 강하게 천명

7

한국 판결의 문제점

- 외국 판례 인용의 선택적 적용 – 이탈리아, 브라질, 우크라이나 등 동정적 판례만 선택 ('취사선택적 접근')
- 식민지배: 위법한가, 혹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인가?
 - 2009 다 68620 (2012)과 같은 일부 전쟁 피해 배상 소송은 일본법을 배제하고, 한국법을 적용해 판결
 - 위안부 사건은 여전히 1940년대 일본법을 근거로 판결
- 국제법 위반 여부 명확화 필요

8

결론

- 과거 법원들이 위안부 사건을 기각했기에, 한국 법원의 승소 판결은 여성 인권·국제법·국가주권에 대해 중대한 의미를 지님.
- 또한 전쟁과 식민지배 이후 인권과 법치주의를 재정립하려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함.
- 그러나 새로운 협상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을 것임.
- 이들 판결은 개별 피해자 구제보다는 성폭력에 관한 국제 법리 발전에 더 큰 의미가 있음.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법정에서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

류광옥 (법무법인 양재, 민변 ‘위안부’문제 TF)

1. ‘위안부’ 피해자들의 법정투쟁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일본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과 그 유족들이 일본을 피고로 하여 “위안부 제도를 창설하고 위안소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을 의사에 반하여 동원하여 위안소에서 노동하도록 한 행위”가 불법행위임을 확인하고, 그 법적책임이 일본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소송말입니다. 이 소송은 2016년에 두 차례, 그리고 2023년에 한 차례 제기되어 총 3건의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피해자들의 법정투쟁의 대표로 들기 위하여 우리는 한가지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것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피해자들에게는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점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기 위해서, 오로지 당사자들의 이익과 의사를 중심으로 사고하기 위하여, 식민지배와 제국주의에 대한 국제인권법의 흐름속에서 이 판결을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소송이 피해자들에게 남아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주저하였던 것은 국가면제론이라는 높고 공고해 보이는 법적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에 앞서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인권의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판단보다는 외교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간의 협상과 외교적 노력을 최후까지 기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역설적이게도 이것이 배리피셔 변호사의 발제문에서 언급한 북한, 중국, 대만 등 피해자단체들과의 연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3. 이 토론문에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하려 합니다. 2002년 9월 5일을 시점으로 하였을 때 20년이라는 기간동안 이루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글에서 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봐 주기를 바랍니다.
4. a. 2000년 이전의 ‘위안부’ 피해자들의 투쟁장소는 일본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일본(사회와 정부)을 직접 상대하고,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투쟁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은 소송과 소송외적인 방식으로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죄에 대하여는 정부각료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으나, 배상에 대해서는 일본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모두 해결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국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입장에 동조를 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렇다고 한일청구권협정에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롯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 b. 2002년 9월 5일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는 일제강점기 피해자 99명은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1952년부터 1965년 한일회담 관련 회의록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의 내용, 구체적으로는 ‘위안부’

- 피해자 등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까지도 포기된 것이 맞는지, 회의록을 통하여 밝혀보자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를 이유로 들어 거부결정 하였습니다.
- c. 2002년 10월 11일 외교부의 정보공개거부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04년 2월 13일 법원은 “일부에 대하여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d. 법원의 정보공개결정 이후 정부는 일부가 아닌 문서 전부의 공개결정을 하였고, 더불어 한일청구권협정은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한 것”일 뿐, 일본군 위안부 문제등은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5. 한국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하였지만, 정부의 실무적인 방침은 “일본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질적인 배상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109명은 한국정부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포함한)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이 2006년 7월 5일이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것은 2011년 8월 30일이었습니다. 말장난처럼 당연한 결론이 사법부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헌법소원의 당사자였던 피해자 109명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들을 수 있었던 피해자는 64명에 불과했습니다.
6.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이후에 있었던 일은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히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2011년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에 협의를 요청한 일, 2013년 한국의 피해자들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조정을 신청한 일, 2014년부터 시작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 등등은 그 사실관계와 사회적 평가가 아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특히 2011년이후에 발생한 위 일들이 이른바 ‘위안부’ 합의로 불리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의 발표문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언젠가는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역사는 반드시 반복된다.”는 생각으로 이 시기에 있었던 일들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이 글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 a.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이후, 피해자들과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 합의의 내용을 묻는 소송과 합의의 본질을 묻는 소송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의 내용을 묻는 소송은 두 건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이고, 합의의 본질을 묻는 소송은 헌법소원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은 (한국정부를 피고고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었습니다.
- b. 위 소송 정보공개청구소송은 모두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한 사건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패소하였고(대법원 2019두41324), 나머지 한 사건도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당시의 사회적 상황(박근혜 탄핵) 등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는 정보가 비공개처리(대통령 기록물 지정) 되었습니다.
- c. 헌법재판소는 2015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이 합의는 피해자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d.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심에서 패소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종결되었는데, 피해자들과 한국정부간 “2015년 한일 합의는 피해자중심주의 원칙에 반한 것으로. 이 합의로 인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이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며, 향후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하여 나간다.”는 합의(조정)가 이루어졌습니다.
- e. 이 소송들은 모두 2016년 초반에 제기되어 2023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8.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기된 것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위안부’ 피해자들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법부를 통해 인정받고, 더불어 그 법적책임이 가해국인 일본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9. 2002년의 정보공개청구소송, 2006년의 헌법소원의 신청과 2011년의 헌법재판소 결정, 2013년 조정신청, 2015년 12월 28일 이후에 제기된 정보공개청구소송, 헌법소원, 한국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들을 모두 치러낸 이후에야 일본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한국의 법원에 일본을 피고로 한 재판을 제기한다는 것은 법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어려운 일이라는 현실적 고민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사법적 판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본질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10. 두 분의 발제문에도 그 본질적인 고민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제기 이후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위안부’ 문제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라는 국가의 현재 위상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일본은 전범국으로의 비난을 받기는 커녕 오히려 전쟁의 피해자로 그려지고 있고, 한편으로는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있어 “반일프레임”은 피해자들과 지원단체를 줄곧 괴롭혀 왔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의 가해자는 일본이다”라고 외칠 때, 한편으로는 “우리는 반일을 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여야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온전히 자신들의 피해를 법원에 드러내기 전에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한국사회의 불편함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법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11.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들은 일본에 대하여 사죄와 배상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습니다.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사죄와 배상이라는 내용보다는 “최종적인 해결”이라는 형식을 고집하여 왔고, 이러한 일본정부의 끈질긴 노력은 2015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시도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은 국제사회가 그 피해사실을 끝없이 되새기며 오랫동안 기억하는 일이며, “불가역적” 해결이라 함은 전쟁을 포함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성의 인권을 국가(정권)가 폭력으로 침해하는 행위는 강행규범에 반하는 범죄행위이고, 그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고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을 국제적 규율로서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최종적이며 불가역적 해결”이 아닌 “입막음”의 의미로서의 “해결”은 더 이상 시도되어서는 안됩니다.

12. 두 분의 발제자의 의견처럼 저도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진보하여 왔는지는 회의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피해자측이 이 문제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성숙하여 왔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확장되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아무도 해주지 않으니까요)
- a. 이 글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듯이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에게 꾸준히 요구한 것은 “사죄와 배상”입니다. 피해자들의 요구에 대해 일본은 1회적인 사죄와 금전의 지급으로 이 문제가 종결될 것이라고 기대하여 왔습니다. 일본의 단편적인 사죄나 금전지급이 “면피성”에 불과하다는 것이 문제이기도 했지만, 피해자들은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해결은 “기억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사죄와 배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b. 한국에서의 소송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제기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찾으려 한 권리는 기득권이 아닙니다. 한번도 가져보지 못한 권리를 스스로 그 근거를 세우고 내용을 채워, 이것이 우리의 권리이다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식민지배와 제국주의의 문제, 여성인권의 문제, 국가폭력의 문제, 그리고 전쟁범죄책임의 문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빚어진 일이지만 과거와 현재를 거쳐 단 한번도 멈추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의 다양한 소송들을 통하여 인류가 안고 있는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c. 법적 쟁송, 소송이라는 점에서 제한하여 보자면 지난 수십년간의 법적투쟁은 “피해자의 법리”를 구축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면제의 법리, 그리고 무력분쟁에서의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법리, 그리고 (일본재판에서의) 시효의 법리와 국가배상의 법리 등 기존의 법이론들은 하나같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실현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위 법리 중에는 피해자들이 주장한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도 있고 배척된 것도 있습니다만, 배척된 주장조차도 이후 다른 사건들에서 반복되고 있어 언젠가는 새로운 법리로 만들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3. 지난 40여년은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시기였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담당하였던 사건의 2016년 소 제기당시의 원고 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1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판결이 난 2023년에는 원고 중 피해 생존자는 1명에 불과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현재 6명에 불과합니다. 피해자들의 세월의 덧가로 다다른 지금의 현실의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피해자들이 이루어 놓은 문제해결의 기반과 씨앗이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큰 나무로 자라나기를 기다려 봅니다.

2025 세계시민연대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경계를 넘는 연대:
폭력의 증언에서
평화의 언어로



제2부

국제 정의의 확장: 기억에서 규범으로

한 국가의 인권 문제가 세계적 여성인권 담론으로 확장된 과정 고찰

사회

신혜수 |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발표

아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성노예 문제에 대한 초국적 운동의 기회 구조 형성과 활용

Mary M. McCarthy | 드레이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발표

기림비와 사회운동 프레임: 세계 '위안부'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Celina Hollmichel |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토론

조시현 | 식민지정의연구소 소장



초국가적 기억 행동

주체

- 초국적 행위자들

구조

- 규범적 변화
- 분쟁 지역 여성과 소녀들의 고통

과정

- 국가 및 전 지구적 차원의 활동
- 풀뿌리 조직, 연대와 협력
- 유엔 및 외국 정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 대한 호소

성과

- 국가 서사에 맞서는 대항 서사(counternarrative)창출

주체: 초국가적 행위자

- 기억 기업가(memory entrepreneurs)
 - 집합적·공적 기억을 만들어내려는 활동가들

주체: 초국가적 행위자

- 기억 기업가(memory entrepreneurs)
 - 집합적·공적 기억을 만들어내려는 활동가들
 - “페미니스트 인도주의자들” (소청희 ([2001] 2015))
 - “여성의 권리는 곧 인권이다”

주요 목표

- 변화 (Change)
- 인정 (Recognition)
- 보상 (Compensation)
- 정부 책임성 (Government Accountability)
-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Honor, Dign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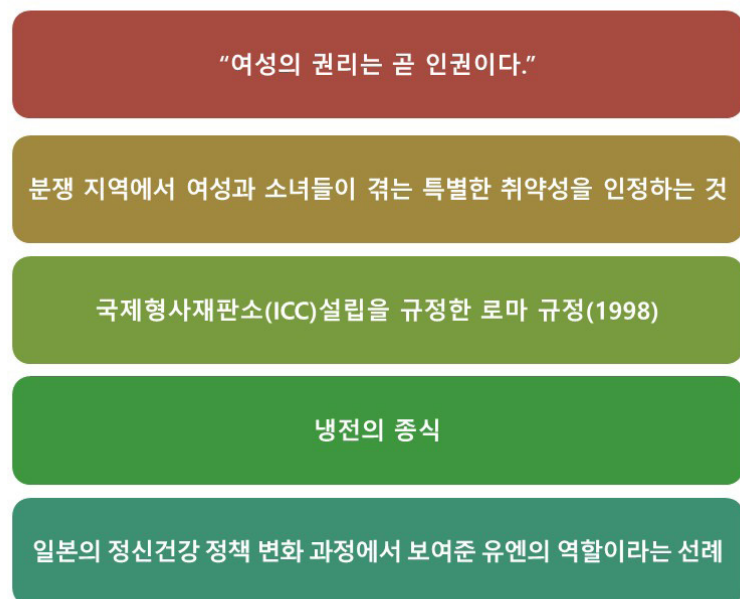
목표 달성의 장애 요인

- “남성 중심적 성차별”
- 인종차별
- 국제법적 지원의 부족
- 어느 정부도 역사적 정의에 적극적이지 않음
- 국가가 역사 서사의 해석 독점
- 취약한 시민사회
- 남성 중심의 지배적 담론

구조:
국제·초국가적
기회 구조의 개방



구조:
국제·초국가적
기회 구조의 개방



과정

- 유엔 인권위원회 (UNCHR)
- UNCHR 산하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에 관한 작업반
- UNCHR 산하 차별 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 1996년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 1998년 맥두걸 보고서

성과

“위안부 제도는 관련 국제 인권기구와 메커니즘이 채택한 기준에 따라, 명백한 성노예제이자 노예 유사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1996)

“일본 정부는 중대한 인권 및 인도법 위반에 대해 여전히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위반 행위 전체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
(맥두걸 보고서, 1998)

유엔을 비롯한 국제 사회 전반의 담론에 변화를 이끌어냈다.

국경을 초월하는 서사

- Sierp & Wüstenberg (2015: 324):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서사의 형성과, 이를 성공적 혹은 실패로 이끄는 개인 및 제도적 행위자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
- 인권의 언어
- 인간적 이야기들

국경을 초월하는 서사

- 위안부 문제 행동 및 교육 단체(CARE; Comfort Women Action for Redress and Education)의 김현정(Phyllis Kim)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사건 자체의 정당성 때문만이 아니라,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서사

- 위안부 문제 행동 및 교육 단체(CARE; Comfort Women Action for Redress and Education)의 김현정(Phyllis Kim)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위안부 문제가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사건 자체의 정당성 때문만이 아니라, 할머니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 “청문회는 큰 홀에서 열렸지만, 모두 수용할 수 없어 여러 방으로 나누어 중계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부정론자들이 이용수 할머니를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바로 눈앞에 계셨는데도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가슴 아픈 순간이었습니다. 에릭 마(Eric Mar)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은 눈물을 참지 못했고, 또 다른 의원 데이빗 캄포스(David Campos)는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하면서도, 부정론자들에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라고 세 번이나 외쳤습니다. 결국 결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머니들의 힘입니다.”

초국가적 기억 공간의 창출과 유지



다큐멘터리



영화 및 드라마



소녀상 및 기림비

향후 과제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세계 '위안부' 운동 사례를 중심으로

셀리나 홀미셸
조지워싱턴대학교



서론

- 기림비와 같은 물리적 유물은 사회운동의 프레임 형성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 기림비는 대화를 여는 매개체, 의미의 생산자, 집단 기억의 보존자 역할을 한다.



독일 베를린 소녀상 자리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위안부’ 사회운동의 출발점

- 1990년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함
- 일본 정부와 관련 단체들의 지속적인 부정과 반발
- 한국에서의 핵심 운동: 매주 수요일의 집회(수요시위)
- 2011년, 제1000차 수요시위를 맞아 평화의 소녀상 공개



서울에 세워진 최초의 평화의 소녀상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선행 연구

- Framing/Frame Resonance (Goodwin 외, 2000; Benford & Snow, 2000; McEntire 외, 2015)
- Tactical repertoires employed by movement agents (Keck & Sikkink, 1998; Tsutsui, 2017)
- Emotions; transforming objects into specific narratives, imbuing discourse spaces with meaning (Goodwin 외, 2000; Jasper, 2011; Simmons, 2014; Snow 외, 2006)
- Interpretations of past events in alignment with their objectives (Jo, 2022; Power, 2009; Wilke, 2013)
- 관련 사례 연구:
 - 'Rhodes Must Fall' movement (Knudsen & Andersen, 2019; Sunnemark & Thörn, 2021)
 - Civil Rights, BLM Movement (Knudsen & Andersen, 2019; Pelak, 2015)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연구 방법론

- 과정 추적, 인권 활동가 인터뷰
- 이론 구축
- 사례 선정:
 - 미국 (글렌데일)
 - 독일 (베를린)
 - 호주 (시드니; 그림자 사례)



베를린 '위안부' 박물관과 이동식 소녀상 '용이'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미국, 독일, 호주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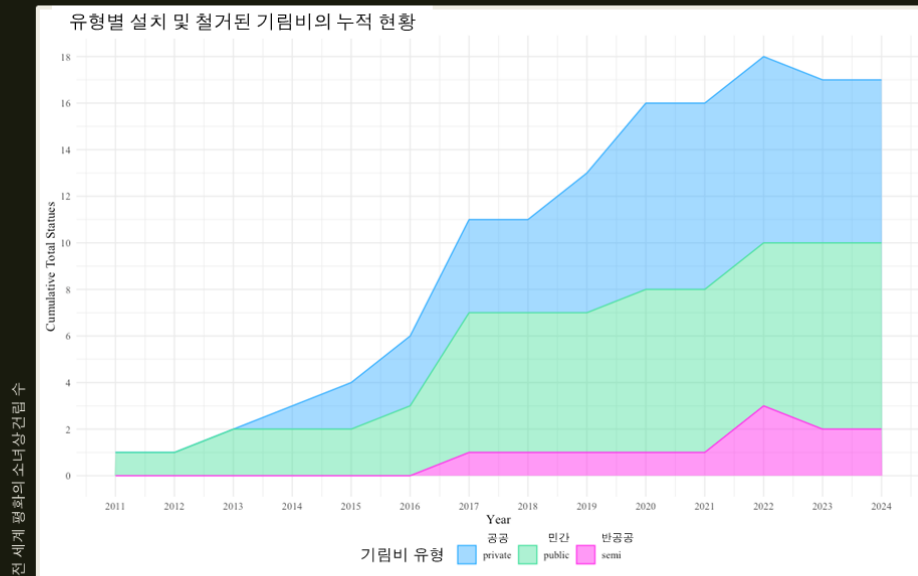
- 한국 외 지역에 설치된 소녀상
- 원형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
- 한국을 제외하고 (최초로) 해외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녀상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평화의 소녀상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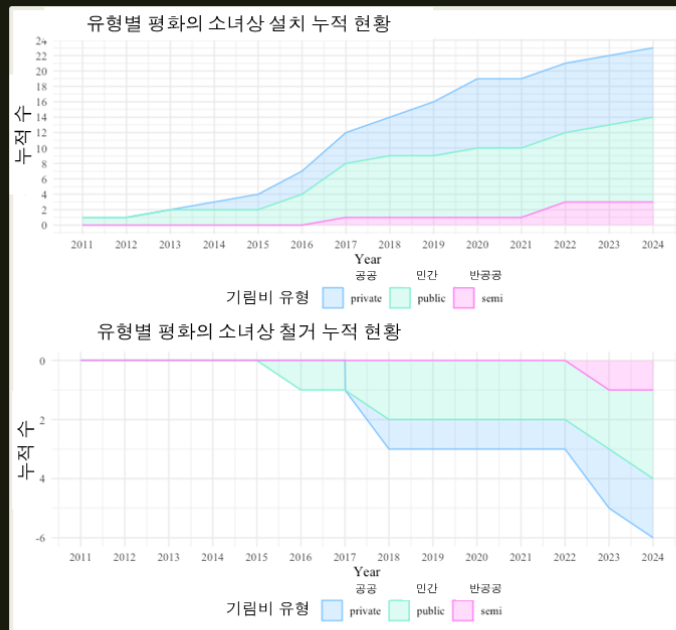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 건립 수

세계로 확산되는 평화의 소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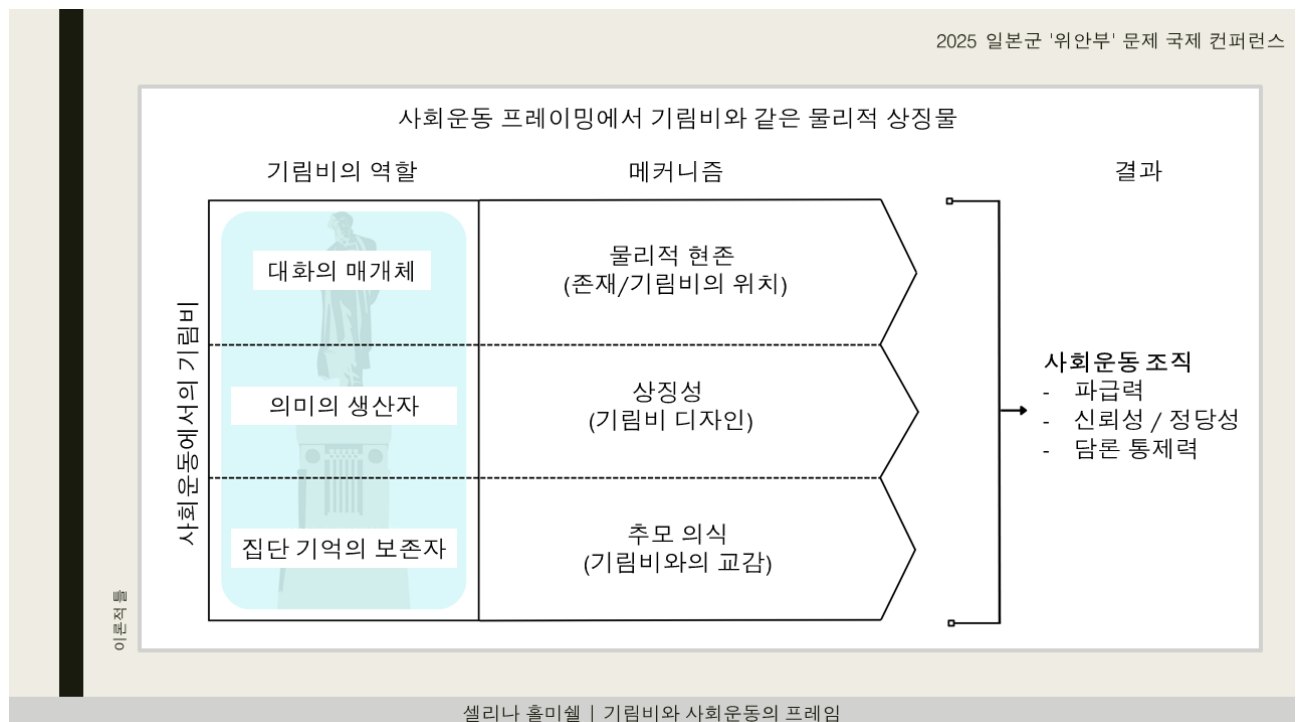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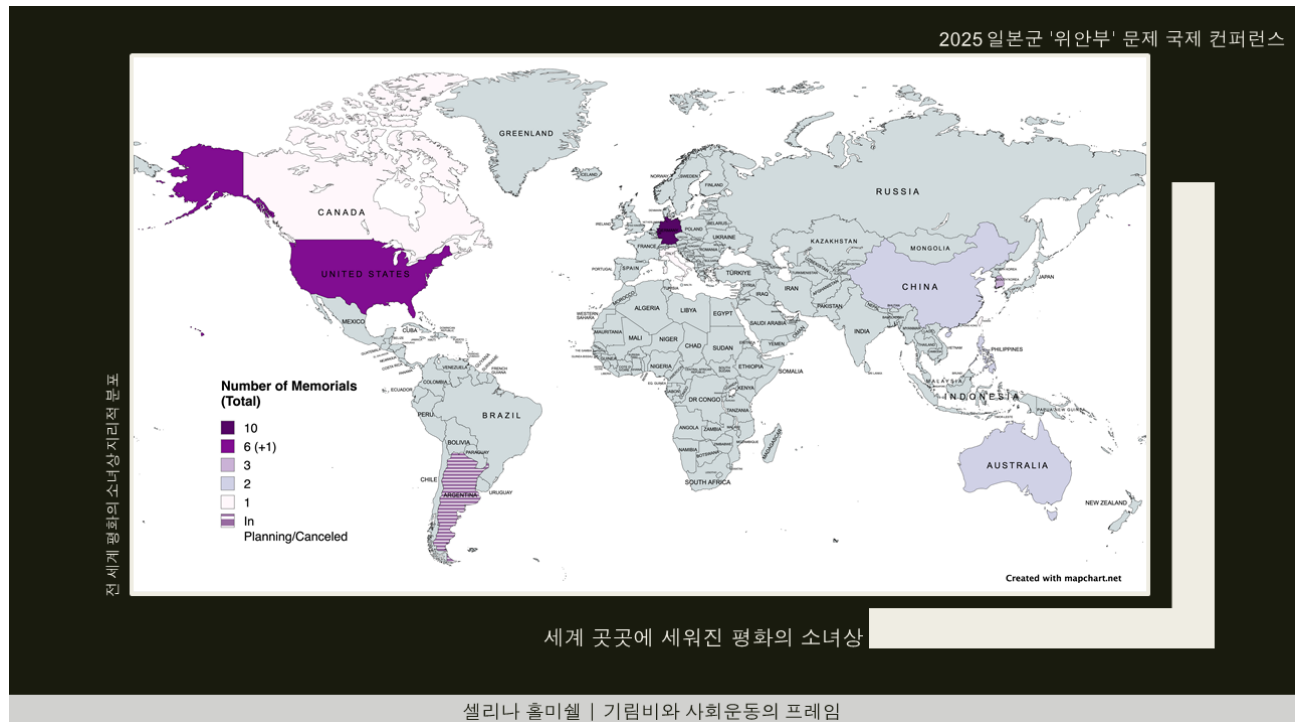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설치 현황별 전 세계 평화의 소녀상 수

세계로 확산되는 평화의 소녀상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대화의 매개체

- “이 평화의 소녀상은 공공장소에 세워졌으니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처음에는 사람들이 ‘소녀상 앞에서 어떻게 추모해야 하나요?’라고 물었지만, 지금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N. Han, 2024)
- “평화의 소녀상을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것은 정당성과 대중의 지지를 의미합니다.” (P. Kim, 2024)
- “평화의 소녀상 앞에 넓은 광장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야 설치를 기념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P. Kim, 2024)



서명운동을 하는 독일 인권 활동가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대화의 매개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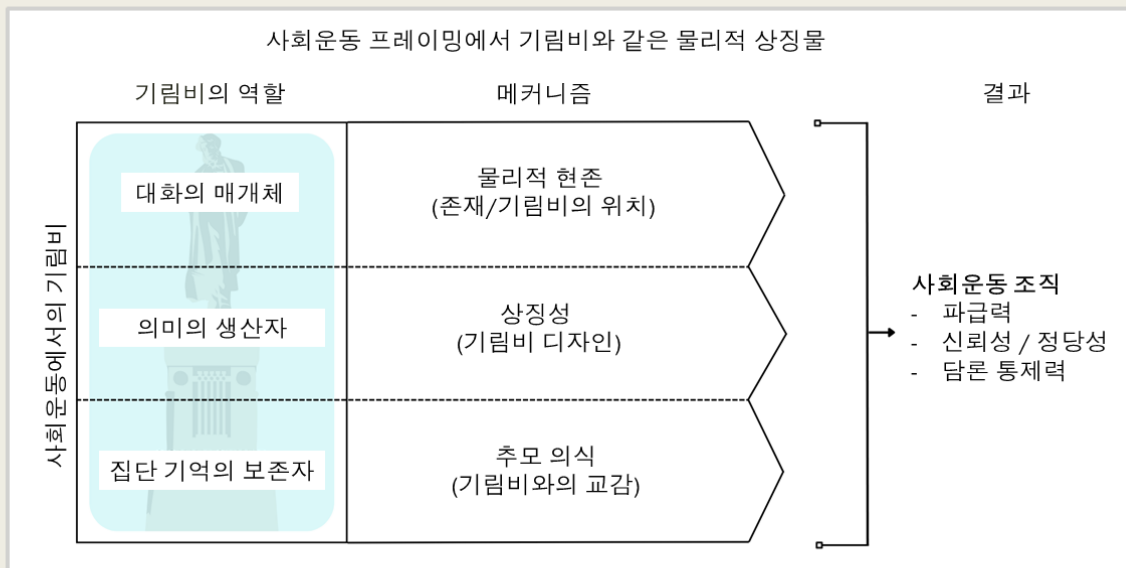
- 구청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 소녀상을 철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교회 뒤편에서 앞으로 옮기는 방법 뿐이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결국 평화의 소녀상은 교회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그 이후로도 일본의 인사들이 저를 찾아와 [...]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압박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끝까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거부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 행동이 결코 반일도, 반일도, 그 어떤 특정한 국가를 향한 ‘반대’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맞서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부당한 억압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W. D. Crews, 2024)



철거를 반대하는 “떠나야한대요” 포스터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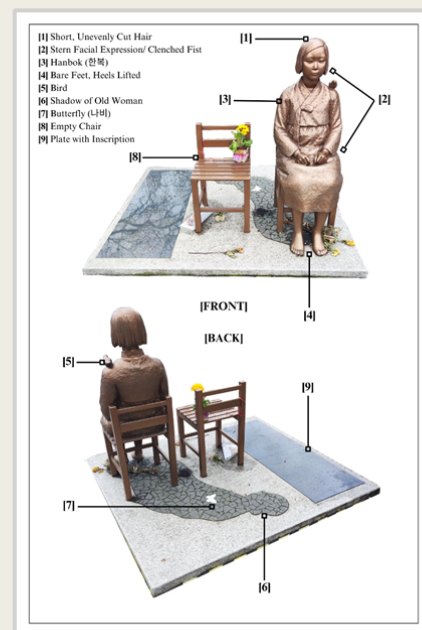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의미의 생산자

- “소녀의 얼굴과 자세, 움켜쥔 주먹, 불안정하게 놓인 발, 어깨 위의 새, 할머니 형상의 그림자, 그리고 빈 의자까지... 이 모든 요소가 당시의 사건을 강렬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P. Kim, 2024)
- “이 소녀는 모든 피해자를 대표합니다.”(P. Kim, 2024)
- “시의회는 우리가 준비했던 기념판 대신 평화의 소녀상을 설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Kim, 2024)



Meaning of Peace Statue Design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의미의 생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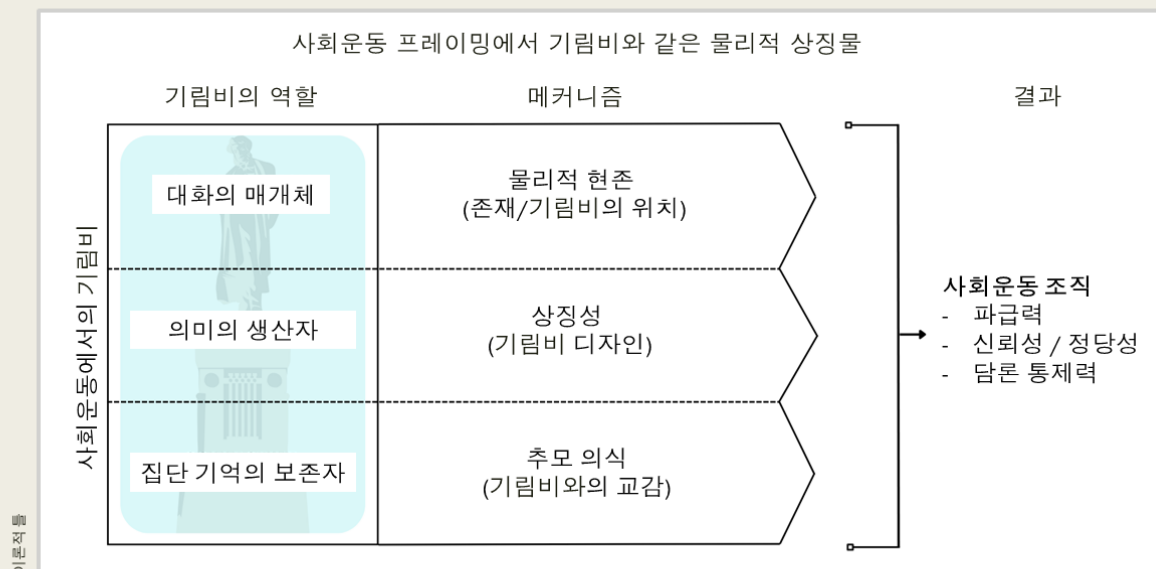


베를린 구청 앞의 인권활동가들과 이동식 소녀상 '용이'

- “평화의 소녀상은 참혹했던 현실을 오히려 아름다운 형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위안부’ 여성들이 말하지 않으면 그 성폭력의 흔적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여줄 수 없는 상처이기 때문에 숨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N. Han, 2024)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집단 기억의 보존자



베를린 '아리' 소녀상 앞 합창공연

- “교사들은 학생들을 데리고 와 평화의 소녀상에 담긴 역사를 가르칩니다. 미술 단체와 [...] 무용 단체가 이 곳에서 공연을 했고, 클래식 앙상블도 [...] 조각상 앞에서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지역 학생들도 찾아 와 음악 공연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아 주변을 청소하고, 꽃 등을 활용해 저마다의 방식으로 추모를 하곤 합니다.” (P. Kim, 2024)
- “지역 주민 할머니들은 매달 둘째 수요일만 되면 늘 이 곳에 모여 추모집회를 진행합니다. [...] 항상 지역단체가 함께 하고, [...] 매주 추모 행사를 이어 나갑니다.” (N. Han, 2024)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집단 기억의 보존자

- “평화의 소녀상이 교회 뒤편에 있었을 당시, [...] 날씨가 몹시 춥거나 비가 오면 [...] 노숙인들은 소녀상에 모자를 씌워주고 목도리를 돌려주곤 했습니다. [...]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다정한 행동이었습니다. [...] 저는 사람들이 소녀상을 매우 좋아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그 고통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 결국 우리 모두가 같은 아픔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W. D. Crews, 2024)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결론

■ 조각상의 역할:

- 대화의 매개체 (물리적 현존/위치)
- 의미의 생산자(상징성/디자인)
- 집단 기억의 보존자(추모/행사 참여)

■ 정책 및 향후 연구에 대한 함의:

- 프레이밍 전략
- 기념비를 둘러싼 논쟁
- 기억의 정치
- 예술과 사회 운동/정치적 행동주의
-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에 대한 성찰



철거 반대 포스터가 걸린 '아라' 소녀상

셀리나 홀미셸 | 기림비와 사회운동의 프레임

2025 세계시민연대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제2부 “국제적 정의의 확장 : 기억에서 규범으로”

토론문

조시현(Cho, Sihyun)

두 발제에서 살펴본 대로 '위안부' 문제가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소녀상 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위안부' 문제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증언과 사료 연구, 역사서술과 담론의 영역에서 또한 문학, 영화, 다큐 등 예술, 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다채로운 활동이 늘어가고 있음도 주목된다. 또한 제3자였던 연합군 병사들의 목격담, 연합군의 포로 심문자료, 가해자들의 증언, 전범들의 자술서 등에도 관심이 기울어짐에 따라 전쟁 중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주제가 심화되는 한편, 식민지에서의 범죄였다는 측면도 점차 부각되어 더욱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있어 '위안부' 문제와 운동이 갖는 영향은 전면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팩트는 여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 법 위반이라는 것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사회 내부에서 부정주의자들이 대두되고, 유엔의 여러 인권기구에서 피해자들의 권리 침해라고 지적되었던 2015년 한일 정부의 이른바 '위안부' 합의의 효력 문제는 현재 한국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그재그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국내법이든 국제법이든 규범의 부족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일본의 행위들은 식민지라는 제약 속에서도 어느 나라에서건 국내법에 따라 강간, 납치,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구성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에 해당했다. 이러한 국내법은 다시 국제법에 의해 강화되어 평화시에도 당시 다음과 같은 국제조약들에 의해 금지된 행위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가해졌다.

- 1904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정
(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
- 1910년 백인노예매매의 진압을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
- 1921년 국제연맹에서 체결된 ‘부녀와 아동의 인신매매의 진압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 1926년 ILO의 노예제금지협약
(Convention to Suppress the Slave Trade and Slavery)

- 1930년 ILO의 강제노동금지협약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여기에 인도에 반한 범죄와 전쟁 중의 전쟁범죄 등 국제관습법의 원칙들이 이미 존재했다.

당시의 국제법은 식민지 문제를 회피했지만, 국제연맹, 국제노동기구, 시민운동 등을 통해 이러한 국제규범이 지켜지도록 감시하는 활동들도 있었다. 가령 국제연맹의 하부기관이었던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에 관한 자문위원회(the Advisory Committee on the Traffic of Women and Children)는 1930년에 중국의 여러 도시와 식민지 조선, 일본에서 공창제도에 관한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일본의 공창제가 사실상 인신매매에 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였다.¹⁾ 당시 만주를 침략했던 일본은 결국 1933년 3월 27일 국제연맹을 탈퇴했고, 바로 이 시기에 일본군 '위안부' 또는 위안소 제도가 정형화되었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국들은 전쟁범죄 조사 활동을 토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도 극동국제군사재판과 각 연합국들에 의한 전범재판을 진행했지만, 이러한 재판들은 전시 강간과 강제매춘/성매매 문제에 대한 몇몇 사건들을 제외하고는 '위안부'들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이들에 대한 범죄행위를 비껴갔다. 마찬가지로 침략전쟁을 일으킨 일본과 전후에 평화 관계를 복구하려고 했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나 이후 피해 국가들과의 개별적인 국교 수립과 배상 문제의 처리에서도 '위안부' 문제가 다루어진 적은 없었다.

이러한 법적 측면들은 유엔, ILO는 물론 2000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²⁾에서도 다루어졌고, 일본의 책임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명확하게 거듭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규범의 존재와 그 규범이 현실에서 가진 힘의 괴리를 문제 삼고, 그 사이의 거리를 줄여가야 하는 것은 '위안부' 문제가 제기하는 정의의 부채라고도 할 수 있고, 지금까지의 운동이 성공적이었다고 만족할 수만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한 규범이 어떻게 생겨났고, 왜 지켜지지 않았는지, 지금 여기의 정부가 법적 책임의 추구를 회피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묻고, 전쟁 중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호소를 보편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은 우리의 현재 질서와 다가올 미래에 물음표를 던지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1) League of Nations, Commission of Enquiry into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to the East, Report to the Council, Geneva, 1932, p. 96. 小野沢あかね, 「近代日本社會と公娼制度 - 民衆史と國際關係史の視點から -」, 吉川弘文館, 2010, 183頁.

2)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for the Trial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Case No. PT-2000-1-T, The Prosecutors and the Peoples of the Asia-Pacific Region v. Hirohito et al., Judgement, 4 Dec. 2001; 번역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옮김,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판결문: 히로히토 유죄』, 2007.

2025 세계시민연대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경계를 넘는 연대:
폭력의 증언에서
평화의 언어로



제3부

현재로의 전환: 전시 성폭력과 지속 가능한 연대

과거사로 인식되던 '위안부' 문제를 현재 진행형의 성별 기반 폭력으로 재구성하고,
미래 연대의 방향을 모색

사회

김은실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명예교수

발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평화 시기의 제도적 성폭력

Caroline Peta Norma | 로열멜버른공과대학교 글로벌·도시·사회학부 선임강사

토론

심아정 | 독립연구활동

Nozomi Tanaka |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현재로의 전환: 전시 성폭력과 지속가능한 연대

“위안부” 문제가 단순한 역사적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살펴보고, 앞으로 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

Caroline Nor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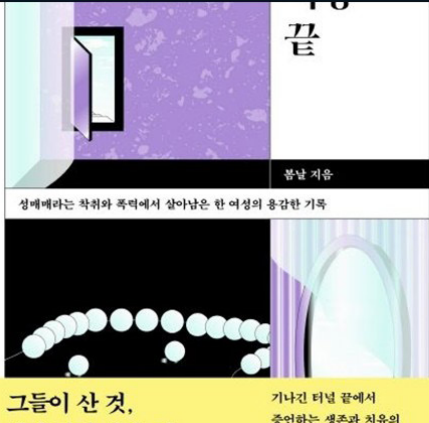
caroline.norma@rmit.edu.au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연대'

-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이하 2015년 한일 합의)는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연대하고, 성폭력에 맞서 목소리를 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이 움직임은 전 세계적인 #Me Too 운동에 앞서 일어났으며, 곧이어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인근 공용 화장실에서 23세 여성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그 이후 '위안부' 문제는 여성과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문제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어 인식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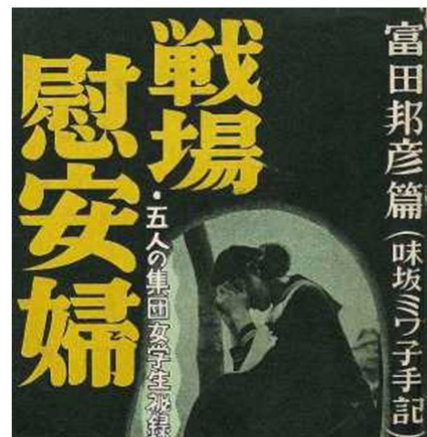
한국에서의 '지속가능한 연대'



- 2018년: 몰래카메라 촬영과 음란물에 맞선 몰카 반대 시위
- 2018년: 외모 규범에 저항한 "탈코르셋" 운동
- 2018년: #스쿨미투 시위
- 2019년: 버닝썬 사건
- 2020년: N번방 사건(2004년 성매매특별법 제정 및 성매매 근절 성과 선행)
- 2019년: 성매매 생존자의 회고록 출간 (이후 일본어와 영어로 번역)
- 2022년: 주한미군 기지 주변 성매매 피해 생존자들의 민사소송 승소

일본 여성들: 과거와 현재의 '잊혀진 피해자들'

- 전쟁 시기 군 위안소에 동원된 일본인 여성의 최초 증언은 '위안부' 역사 서술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 1944년, 가고시마 출신 17세 소녀 '미와코'는 일본 해군 함정을 타고 오가사와라 제도로 보내져 군인들을 위한 성매매에 강제로 동원되었다.
- 도미타 쿠니히코(편), 『전장 위안부: 아지사카 미와코 수기』, 후지서방, 1953년로 출간되었다.



일본에서의 '지속가능한 연대'?

- 2015년 한일 합의에 반대한 일본 내 여성주의자들은 좌파 자유주의자들로부터 "전후 화해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 2017년, 도쿄의 전시성폭력피해여성행동센터(VAWW-RAC)는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현재 여성들을 성폭력에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과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 2017년 말 이토 시오리의 『블랙박스』 출간을 계기로, 2018년 일본에도 소규모 미투 물결 도래.
- 2022년,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 제작을 위한 여성 강제 동원을 규제하는 법 제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냄.



과거와 현재의 생존자들의 연대

- "일본인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피해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기억해야,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는 성차별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 [Nishino]
- "오늘날 젊은 여성들이 성 산업에 유입되는 맥락을 더 폭넓게 살펴봐야 한다. 그들의 선택 배경, 빈곤 정도, 그리고 매춘을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 구조까지 고려해야 한다." [Onozaw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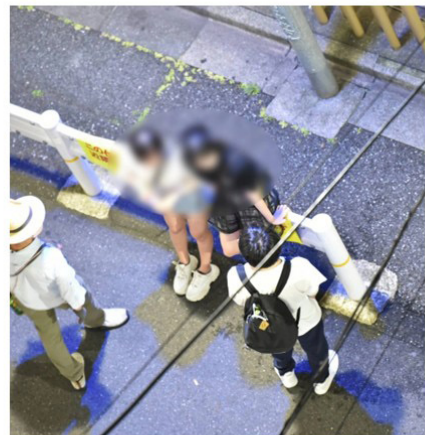
여성 성노예제 배후산업에 맞선 작은 승리들

- 여성을 강제로 동원하는 산업 규제 강화 (2022)
- 성매매 업소 운영자 대상 코로나19 보조금 지급 거부 - 대법원 판결로 확정 (2025)
- 호스트클럽 포주들에 대한 제재 (2025)
- (이미 법률상 불법화 된) 성매매 고객 처벌 조항 제정을 위해 일본 중의원 자유당 의원들은 성매매방지법 개정을 의회에 촉구 (2025년 4월)



현대 일본의 '신(新) 위안부'

- 해외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되는 일본 여성의 증가
- 국내에서 수천 명의 일본 여성과 소녀들 매춘 알선하는 호스트·스카우트 네트워크의 확대
- 일본 내 외국인 남성 성관광객이 증가하였으며 성매매 업주들은 이들을 주요 고객으로 간주



결론

- 2차 세계대전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벌어지는 광범위한 매춘과 성착취 인신매매는 동아시아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 동아시아의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성적 지배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전쟁'과 '식민화'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 정의를 위해 싸워온 할머니들은 점차 우리 곁을 떠나고 있지만,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으로 동아시아 페미니스트 연대를 구축해 가부장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시대적 문제의식으로 다시 만나는 일본군 '위안부'문제 - 근절주의 페미니즘과 반성매매운동 너머의 연결'들'을 제안하며

캐롤라인 노마 발표문에 대한 토론문

심아정(독립연구활동가)

1. 프롤로그

발표자는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평시를 포함한 다른 성폭력 피해자들의 역사와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야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적 문제로부터 현대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로 발전”했으며, 이러한 변화가 제시하는 연대의 방향성으로서 2015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전개된 #미투운동과 반성매매운동 등이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접속하게 되는 지점들을 짚는다. 이에 더해 “최근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위안부' 운동은 역사의식이 사라지고 현대적 연대의식이 더 강해졌다”고 말한다. 이러한 발표자의 지적은 역사의식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역사의 지층과 단층을 동시대적 문제의식으로 되짚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로 받아 안고 싶다.

오늘의 토론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담론의 장(場)에서 식민주의와 제국에 대한 비판과 당대의 문제의식이 깃든 페미니즘이 이항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각각의 논의에서 결코 결락될 수 없는 관계임을 명확히 하고 싶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현대의 반성매매운동과의 연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발표자의 제안 너머, 다른 연결'들'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제껏 충분히 가시화되어오지 못한 여러 층위의 동시대적 문제군(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와 어떻게 만나고 어긋나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연결'들' 속에서 '학술 운동'을 포함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 교차적으로 접속하고 확장될 수 있는 여러 방향'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학술운동'이라는 명명은 낯설다. 연구는 운동이 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운동이란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운동이라고 할 때 떠올리게 되는 것은 수요집회와 소녀상, 피해자 지원 활동 등이다. 이러한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운동'은 여러 층위에서 여러 주체들이 자신의 '현장'으로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예컨대, 자료를 열심히 찾아 나서고, 찾아낸 자료를 함께 읽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에 대해 격론을 벌이고, 치열한 논쟁 속에서 공동의 언어와 사유를 버려내고, 이러한 과정과 결과물을 공유하는 공론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함께 확보한 문제의식이 현재 여성들의 안전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현재화하는 작업들 또한 운동의 현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학술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을 밝혀둔다. 연구자들에게 책상은 다른 아닌 치열한 현장이다. 따라서 연구자와 활동가 혹은 연구와 운동의 분리를 논쟁할 것이 아니라, 여러 현장'들'이 접속하고 서로의 현장에 귀 기울이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해야 할 때다.

2. 일본인²⁾ ‘위안부’는 누구인가?

- 가해국 여성들의 피해를 말하지 못한 2000년 여성법정과 1970년대 우먼리브운동

발표자는 1991년 김학순의 증언으로 본격화된 ‘일본군’ 위안부 운동, 특히 일본 내 ‘위안부’ 지원운동에서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옹호가 배제되어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의 가장 큰 요인으로서 일본인 ‘위안부’였던 이들의 매춘 전력(前歴)을 문제 삼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사회 인식을 문제 삼고 있다.

김학순이 등장한 시기, 일본에서는 스즈키 유코(鈴木裕子)와 송연옥 등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공창제의 역사를 짚어낸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여성사의 관점에서 후지메 유키(藤目ゆき)와 아하시타 영애(山下英愛) 등도 합류했다. 하지만 이들의 관점은 전후 보상운동의 고조와 확대 속에서 후경화되어 발언을 삼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마저 생겼다고 한다.³⁾

2000년 12월 8일부터 닷새 동안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성노예전범여성국제법정’(이하, ‘2000년 여성법정’)⁴⁾을 돌아보며 송연옥은 일본인 ‘위안부’도 피해자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제언에 당시 사무국 내부의 반대와 저항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⁵⁾ 이를 두고 후지메 유키는 법정 개최에 협조적인 일본 시민의 압도적 다수가 오로지 가해국 일본의 ‘가해’에만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인의 ‘피해’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소극적인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한다.⁶⁾

결국 공소 사실에는 일본인 ‘위안부’ 피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는데, 천황과 일본 정부에 대해 전쟁범죄의 일부로써 일본인 ‘위안부’ 피해에 대해 소(訴)를 제기한 것은 일본 국내에서도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하지만 정작 일본인 ‘위안부’는 단 한 명도 증언석에 서지 않았다/못했다. 후지메 유키는 이러한 사실이 “일본인 ‘위안부’ 피해의 가벼움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복합적 억압의 독특한 무게를 역설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⁷⁾고 강조한 바 있다.

법정 셋째 날, 후지메 유키가 일본 측 검사단의 전문가 증인 중 한 사람으로서 일본인 ‘위안부’에 관해 증언했을 때, 다음과 같은 말들이 나왔다.

2) ‘일본인’ 위안부를 언급할 때, 단일한 ‘일본인’이라는 정체성을 상정하는 것을 경계하고 싶다. ‘가해국’ 여성들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전쟁 중에 오키나와의 유곽과 위안소에 갇혀 성적인 노예상태가 되었던 오키나와의 여성들을 그저 ‘일본인’이라든가, ‘가해국’ 여성으로 범주화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경각심은 점령지, 식민지, 중주국 여성들의 피해 경험의 경로와 내용을 인식하기 위함이며, 이들 경험의 다름을 인식한다는 것은 피해를 위계화하려는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지은은 ‘통치의 방식’에 주목한다. ‘교차적 시각은 일본인 위안부가 식민지나 점령지 여성에 비해 ‘덜’ 고통스러웠거나, 혹은 그 반대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마이너리티 사이의 비교와 경합을 유발하는 것은 권력이 즐겨 사용하는 통치의 방식이라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으며, “일본인 위안부가 ‘국민’으로 호명되는 순간을 살펴보면, 기지촌 여성들이 ‘양갈보’라 멸시받으면서도 ‘달려 버는 애국자’로 추켜세워졌던 장면이 겹쳐진다. 어느 쪽에서나 소외된 여성들이 ‘국민’ 대접을 받는 순간은 언제나 국가가 그녀들을 착취하고 이용할 때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자면 여성을 국가/민족에 따라 분할하고, 위계 짓고 경합하게 하는 것은 통치의 방식이라는 것이 선포해진다”는 것이다. 이지은, 『제국의 분할통치를 넘어』, 『프레시안』, (2021/05/01).

양현아는 피식민지 여성들과 식민지인이 아니었던 여성들의 위안부 피해를 비교하는 것에 대한 신중함에 대해 “피식민 조선 여성들이야말로 모집과 운송, 관리가 가장 용이했던 대상이었고, “일본군 위안소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할 수 있었던 것 또한 조선 및 대만과 같은 피식민 지역의 존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분석”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특성에서 식민지성은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에 본질적인 요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언급이 식민지인이 아니었던 여성들의 피해 혹은 위안소와 같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식과는 다른 성적 피해를 사소화하거나 등급화하는 것이 아니”며, “그런 피해들은 ‘다른’ 성격의 성적 피해로서 다른 내용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양현아, 『일본군 성노예제에서 자행된 재생산폭력(Reproductive Violence)』, 『법과 사회』 65호, 2020년, 45-46쪽.

3) 후지메 유키, 『여성사로서 일본군 위안부 연구와 일본인 위안부의 불가시화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내셔널리즈엄과 성동원, 그 연속과 단절 : 국가의 성관리 체제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2023년 8월 11일) 166쪽. <https://www.hflib.kr/#/search/detail/226777?offset=10>

4) 2000년 여성법정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민간법정이었지만, 가해국 일본의 정부와 히로히토 천황에게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묻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남북한은 공동기소장을 제출했고, 중국, 타이완,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동티모르 등 각지의 검사단이 일본군 성노예 제도를 고발했다. 64명의 피해 생존자와 구 일본군 가해 병사 2명이 증언을 했고, 법학자나 역사학자도 전문가로서 증언석에 섰다.

5) 송연옥, 『일본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궤적과 전망: 여성주의와 탈식민주의 관점에서』, 『2025년 하반기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자료집-일본군 위안부 연구의 궤적과 전망』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2025년 8월 22일) 6-7쪽.

6) 후지메 유키, 앞의 동북아역사재단 자료집, 166쪽.

7) 후지메 유키, 『일본인 위안부 문제의 공소와 그 의의』, 『당대비평』, (생각의나무, 2001년) 199쪽.

일본 측 검사단: 일본인 '위안부'들은 '위안부'가 되기 전에 이미 공창, 즉 매춘부였습니다. 증인의 생각으로는 그런 여성들이 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후지메 유키: 아니오, 그녀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군'위안부'로서 당했던 폭력과 지배는 피해자의 전력(前歴)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시 당초 일본의 공창제도는 그 자체로 대단히 폭력적인 것이며 나아가 군국주의적인 제도입니다.⁸⁾

2000년 여성법정 이후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여러 번 제출되었지만, 이 법률에서도 피해자를 '구 호적법의 규정에 따른 본적을 가지고 있던 자 이외의 자'로 정의하여 보상 대상에서 일본인 여성은 제외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편으로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라는 틀에서 아시아의 피해에 관심을 두는 역사 인식의 전환이 있었던 시대에, 다른 한편으로 일본인 '위안부'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⁹⁾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¹⁰⁾

가해국 여성들의 피해를 말한다는 것의 어려움은 1970년대의 우먼리브운동¹¹⁾에서도 발견된다. 68혁명의 세계적 흐름 속에서 일본에서도 베트남전쟁 반전운동으로 생겨난 '가해자의 논리'가 전학공투회의(이하, 전공투) 운동의 '자기부정의 논리'와 짝을 이루며 등장했던 때가 있었다. 전공투에 참여했던 여학생들은 운동 내부의 남성 우위에 반발하여 성차별을 고발했고, 이것이 1970년대 일본의 우먼리브운동으로 이어졌다. 1970년에 결성된 '그룹 싸우는 여자들(ぐるーぷ闘うおんな)'은 공동육아, '낙태' 금지법 개악 반대, 출입국관리법안 반대투쟁 등 1970년대 중반까지 일본 여성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가해자로서의 일본인'이라는 주체화를 내걸었던 당시 운동의 흐름 속에서, 우먼리브의 여성들 또한 자신이 '가해국 일본의 여성'이라는 입장을 성찰하기 위해 '위안부로 강요된 조선인 여성'이라는 수사를 뼈라에 등장시켰다. 그러나 당시의 뼈라나 벽보에서도 일본인 '위안부'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가해자의 논리'는 자칫 피억압자로서의 자아를 보지 못하게 만들 우려가 있음을, 가해국 국민이라는 덩어리가 전혀 균질적이지 않음을, 일본인 여성들 사이에서도 전쟁에 대한 경험이 달랐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는 함정이 있다.

한편, 1970년 9월에 만들어진 여성들의 모임, '침략=차별과 싸우는 아시아 부인회의'는 일본인 '위안부'를 주요한 쟁점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이를 문제시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관련 자료에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전후 미군의 '위안부'로서 가장 하층의 여성들이 동원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며, 특수위안시설협회(RAA)¹²⁾에서 점령군을 상대했던 여성들이 "본국 내의 최저변 여성과 피억압 민족의 여성"을 '위안부'로 삼았다"는 언급도 보인다.¹³⁾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1970년대 일본의 페미니즘 운동 내에서 일본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다거나 구체적

8) Fight for Justice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0년 법정 관련 영상을 참고할 것. 번역은 필자에 의함. <https://archives.wam-peace.org/wt/all-schedule> 심아정, 「여성민간법정을 통해 본 여성들의 초국적 연대: "증언과 목격의 연쇄"를 중심으로」, 도미야마 이치로 외 지음, 『폭력에 대항하는 법-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언어, 기억, 그리고 연대』(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2025년) 226-228쪽.

9) 과거 「전시 성적 강제 피해자 문제 해결 촉진에 관한 법률안」에 공산당 의원으로 관여했던 요시카와 하루코는 법안에 일본인 '위안부'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반성으로 2016년에 조사팀을 꾸려 한 군의관이 조카딸에게 남긴 여성들의 명단을 단서로 일본인 '위안부' 조사를 시작했다. 2023년에는 그 성과가 『日本人「慰安婦」を忘れない』(鴨川書房, 2023년)라는 책으로 출간되었다.

10)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리서치액션센터, 『일본인 '위안부'-애국심과 인신매매』(논형, 2021년) 5쪽.

11) 우먼리브운동은 여성해방운동(Women's Liberation Movement)의 우먼과 리버레이션을 붙여 만든 약자로,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전반에 걸친 특정 시기의 운동을 가리킨다.

12)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의 약자.

13) 木下直子, 『「慰安婦」問題の言説空間』(勉誠出版, 2017), pp.152-153.

인 운동과 성찰이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민간 성 착취 제도’와 ‘민간 성노예제’라는 용어로는 드러낼 수 없는 공창제의 본질

발표자는 “전쟁 중 할머니들이 견뎌낸 것은 남성의 성적 권리에 대한 근본주의적이고 극단적인 형태의 권리”였으며, “여성들을 노예화하는 조직은 일본에서 유래”했고, 이는 근대사와 근세사/막부체제 전반에 걸쳐 여성과 소녀들을 매춘에 동원하는 기관을 유지해 온 “일본 남성들의 헌신”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발표자는 저서 『위안부는 여자다』에서도 “페미니스트 학자들 사이에서 엿보이는 ‘군사적 환원주의’에 맞서려 했다”고 집필 이유를 밝히고, “군사적 환원주의는 전시 성폭력이 근본적으로 군국주의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며, 이러한 관점은 위안소 제도가 전쟁 전과 전쟁 후에 벌어진 여자에 대한 폭력 및 학대와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⁴⁾ 또한 위의 책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가 다양한 측면에서 어떻게 민간 성 착취와 연결되었는지를 부각할 것이며, ‘군 성노예제’라는 표현 대신에 ‘민간 성노예제’라는 표현을 쓰겠다” 말하고, “이 표현이 피해자들의 관점에서 상업적 성 착취를 정확히 설명한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¹⁵⁾

그러나 위와 같은 발표자의 의견에는 섣뜻 동의하기 어렵다. ‘공창제’ 대신 ‘민간 성 착취 제도’라는 표현을, ‘군 성노예제’ 대신 ‘민간 성노예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가려지는 것은 다름 아닌 ‘국가(일본제국)에 의한 성의 관리와 통제’라는 공창제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근대의 공창제는 서구의 군사주의와 식민주의와 결부되어 발달했고, 나폴레옹 전쟁, 크림 전쟁, 보어 전쟁, 아편 전쟁, 미국-필리핀 전쟁과 같은 19세기의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제국과 그 식민지로 확대되었다. 일본은 19세기 후반의 개국과 함께 이러한 유럽 유래의 제도를 채택하여 종래부터 있던 공창제를 근대적으로 재편성했다. 또한 공창제는 식민지 조선과 대만, ‘개척’이라는 이름 하의 홋카이도, ‘처분’이라는 이름 하의 오키나와에 이식되었다. 식민지와 점령지 뿐 아니라 본국 일본에서도 군대가 주둔하는 곳마다 여성들이 동원된 엄연한 역사가 있다.

하야시 요코(林葉子)는 공창제란 애초에 군대를 위해 근대화되었고, 식민주의를 본질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아시아에서의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부상한 것이 아니며, 비극을 초래한 원인은 이미 근대 공창제도 그 자체에 깃들어 있다고 주장한다.¹⁶⁾ 발표자가 전쟁 전과 전쟁 중 전쟁 이후를 관통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 남성들의 헌신”이나 “민간”으로 상징되는 남성 업자, 남성 지배 엘리트, 성구매자를 강조하는 것만으로는 공창제의 본질을 드러내기 어렵다. 남성들의 공모는 군사주의와 식민주의라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일본 제국의 기획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 다른 의미에서 ‘위안부’ 징집에 공창제 업자를 동원했다는 사실을 면밀히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위안’이라는 발상은 전시뿐 아니라 전쟁 전이나 전후에도 정부 각료나 경찰관 등 치안권력을 가진 남성들과 인신매매 업자들 사이에서 공유되었고, 모집 방식과 동원 대상 또한 전시에 위안소가 했던 방식과 동일한 맥락에 있다. 발표자가 평시의 민간 성 착취 제도를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측면을 부각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강조는 군과 국가, 경찰 권력으로 대표되는 ‘공적’ 책임을 면피하고 이를 ‘민간’ 업자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 업자들의 활동을 세세하게 살피는 과정은 오히려 이들이 피해 여성의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와 맺고 있던 공모를 드러내고, 군이나 정부 혹은 경찰의

14) 캐롤라인 노마, 『“위안부”는 여자다』(열다, 2020년), 350쪽. 원제는 The Japanese Comfort Women and Sexual Slavery during the China and Pacific Wars.

15) 캐롤라인 노마, 위의 책, 46쪽.

16) 林葉子, 『性を管理する帝国』(不二出版, 2017) pp.9-10.

기록에서 이들이 업자와 어떻게 연동되어 움직이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군과 정부, 경찰, 내무성 등의 구체적인 책임 또한 추궁할 수 있다.

여성을 전차금으로 몰아매 매춘을 강요하거나, 속여서 매춘을 시키는 '관습'이 일본 사회에 뿌리 깊게 존재해왔고, 이를 '범죄'라고 보는 인식이 일본 사회에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시에 군이나 국가가 업자들을 이용하여 '위안부'를 징집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사회적 공모'를 강조하는 발표자의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은 '국가(일본제국)에 의한 성의 관리와 통제'라는 공창제의 본질을 가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근절주의 페미니즘이 최선일까 – 일본 폐창운동의 한계를 통한 재고(再考)를 요청하며

발표자는 2015년의 '위안부' 합의 이후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 담론이 2017년 일본에서 터져 나온 #미투운동, 반성매매운동과 접촉하게 되었고¹⁷⁾, “‘위안부’ 운동은 역사의식이 사라지고 현대적 연대의식이 더 강해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운동들의 접촉의 지대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다름 아닌 지난 역사 속에서 일본의 폐창운동이 가지는 치명적인 한계다.

후지메 유키는 일본 근대사 연구자들이 일본의 폐창운동을 과대평가하는 역사관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근대 일본에서 폐창하는 현들 속출하며 폐창운동이 진전되던 시기에 일본군 '위안소' 제도는 그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설치되고 운영되었다. 위안소 제도를 '전시 공창제'라고 말할 수 있다면, “1930년대의 일본이 폐창으로 가는 흐름에 있었다”는 시각의 허구는 곧바로 폭로된다. 일본의 폐창 운동가들은 위안소 제도를 목청 높여 반대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일본의 폐창운동이 점령지와 식민지로 확대되었다는 얘기는 소문으로도 들은 바 없다.

폐창운동가들은 예기와 창기를 '추업부'로 보고, 국외 '추업부'를 대일본제국의 해외 팽창의 방해물로 간주하면서도, '추업부'들에게 그러한 선택밖에 남겨두지 않은 사회적 불의에 관해서는 시종일관 무관심했다.¹⁸⁾ 일본군 '위안부' 정책이 실시되는 기간 동안 일본의 폐창 단체는 순결보국운동을 제창하며 군대의 성병예방에만 의욕을 보였고, '아메리칸 플랜'을 성병 방지의 이상적인 대책이라 찬양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정책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켰다.¹⁹⁾

안베 유헤이는 『유곽의 총파업』²⁰⁾에서 일본 유곽의 여창기들이 처우개선을 위해 벌였던 1920년대의 집단도주와 1930

17) 2015년의 '위안부' 합의 이후 2017년에 시작된 일본의 #미투운동과 이전부터 해오던 반성매매운동, 그리고 여러 성 착취 산업에 대한 반대운동이 결합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발표문에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 발표자가 일본군 '위안부' 운동에서 현대적 연대의식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연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 이후 두 운동의 접점과 연결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18) 후지메 유키, 『성의 역사학』(삼인, 2004년) 409쪽.

19) 아메리카 플랜이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성병의 원인이 여성에게 있다는 전제 하에 미국이 군대의 보호를 위해 병영 5마일 내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체포하여 '시민권을 정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후지메 유키, 위의 책, 400-401쪽. 아메리카 플랜을 통해 정지될 수 있는 시민권이란 이른바 '추업부'로 의심되는 여성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는 '형벌'이 아니라 '예비검속'의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한국에서 시행되었던 윤락행위등방지법 제7조 1항 국가는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여자'(要保護女)를 선도 보호하겠다는 것을 떠올리게 한다.

하타 이쿠히코 등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위안부는 공창이다(당시 공창은 합법이었고, 따라서 국가의 책임은 없다)”라는 공격에 맞서 '위안부' 지원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위안부는 공창이 아니다(당시에도 위안부 연행은 불법이었다.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대항담론을 내놓은 바 있다. 요시미 요시아키 등 위안부 '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운동의 방향성에 영향력을 끼치는 담론을 생산하는 연구자들은 “위안부는 공창이 아니다”라는, 즉 공창과 '위안부'를 구분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1) 폐창 규정의 유무, 2) 적용 가능한 법이 시민법인지 전시법인지, 3) 평시인지 전시인지. (이와 관련된 논의는 송연옥, 후지메 유키의 글이 담긴 앞의 동북아역사재단의 자료집을 참고할 것).

그러나 이러한 구별 기준만으로는 식민지 여성들 뿐만 아니라, '추업부'로 불린 일본의 여창기들에게 이런 기준이 실제로 유효하게 적용되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이러한 주장을 했던 요시미 요시아키 등의 연구자들이 자신이 관찰해왔던 관점에 대해 변화가 생겼다면, 그러한 변화의 계기는 무엇이고, 누구의 연구에 영향을 받았으며, 어떤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인지 밝히고, '위안부'와 공창을 구분하기 위해 과거에 제시했던 세 가지 기준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거나 한계를 인정하는 작업 또한 공론의 장이나 지면을 통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위안부' 운동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자라면 더욱더 이러한 번곡점에 대한 설명 책임이 있다. 이에 더해 위와 같은 논의에서 '위법성'을 따지는 것의 한계 또한 말해 두고자 한다. 공창제 뿐만 아니라 위안소 또한 사실상 여러 법령으로 성폭력이 합법화된 상태에서 운영되었다. 따라서 위업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합법화된 국가폭력을 문제 삼는 시각에서 더 깊은 논의가 요청된다.

20) 안베 유헤이 지음, 번역공동체 엠티 옮김, 『유곽의 총파업-해방과 노동의 경계에서』(여이연, 근간). 원제는 山家悠平, 『遊郭のストライク性たちの二十世紀序説』(共和国, 2015)

년대의 파업을 조명하면서, 상황의 진전과 함께 정작 당사자들의 주장이 후경화되어간 점을 문제 삼는다. 요구를 내걸고 ‘파업’을 일으킨 순간에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주목을 받았지만, 이내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강한 협력자들이 전면에서 ‘대변자’로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1930년대 들어 유곽 내 여성들이 파업에 대한 협력을 외부에 요청하면서, 폐창운동이나 노동운동 측의 요구와 당사자들의 요구 사이의 어긋남이 생겨났다. 협력자들에게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루주의 부정을 고발하려는 당사자들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후 창기들은 ‘노동조건의 개선’이라는 애초의 목표를 ‘폐업’으로 변경했다. 유곽 여성들이 도움을 청하며 의지했던 폐창운동과 노동운동 측에서 ‘파업’이 아닌 ‘폐업’을 주장했을 때, 창기들이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자유폐업만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폐창운동의 단호한 슬로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곽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부당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 속에서 유곽 여성들이 상황 개선을 요구하며 일으킨 쟁의는 당대에 정당한 노동운동으로 평가받지 못했다. 그러한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유곽 여성들이 잠시나마 쟁의의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유곽 밖의 정보를 손에 넣어 계약만으로 이후의 삶을 계획하거나 자유폐업을 결의하며 동료들과 의논한 덕분이었다.²¹⁾

유곽에서 일한다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도 긍정적인 노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창기를 대상으로 한 당시의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파업’이라는 수단을 이용하기는 했어도, 자신을 ‘노동자’로 규정하는 예창기의 모습은 당시의 신문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안배 유혜이는 긍정할 수 없는 ‘노동’이라 하더라도 생존을 위해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던 여성들에게, 루주의 부정에 대한 규탄과 착취에 대한 이의제기는 비록 그것이 유곽이나 매춘으로부터의 직접적인 ‘해방’으로 곧장 실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을 통해 살아갈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해방을 향한 과정’이었다고 말한다.²²⁾

해방 직후 해외로 동원되었던 많은 조선여성들이 귀국하였다. 끝내 귀국하지 못했거나 귀국하지 않은 이들도 존재했다. 그러나 송연옥은 일본군 ‘위안부’의 경험을 가지고 돌아온 여성들이 생활 방도를 찾지 못해 다시 매춘을 하게 된 것을 당시 신문기사들을 인용해 언급하면서, ‘귀국’만으로는 여성들을 구제할 수 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해방 이후 공창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한 조선부녀총동맹(이하, 부총)은 공창제를 사회구조와 분리하지 않고, 당사자의 인권회복이라는 새로운 시점과 계급적인 관점에서 ‘생활옹호’ 투쟁을 했다. 부총은 주로 주부, 노동자, 농민에 조직적인 기반을 두었고, 공창뿐 아니라 사창의 해방을 요구하였으며, 폐업한 여성들의 생활지원에 힘썼고, 당시 미군 병사의 성폭력 고발 등의 활동을 노동자와 주부의 생존권과 같은 층위에서 전개했다. 그러나 미군정의 좌파 탄압으로 1947년에 부총 멤버는 체포되거나 월북하여 실질적인 활동이 중단되고 만다. 이후 폐창운동은 대부분 고학력자로 식민지 정책에 협력했던 우파 여성들에게 위임되어 부총의 명칭도 ‘부녀국’으로 바뀌었고, 여자경찰도 창설되었다. 근대의 현모양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

21) 성매매/성노동 당사자들의 권리운동은 여러 겹의 차별과 혐오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에 다채로운 사회 운동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차차 활동가 유원의 연대성명은 100년 전 일본에서 세 차례에 걸쳐 익명으로 투고한 어느 창기의 말과 만나 우리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제공한다. 성노동자가 되는 데는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주, 장애, 질병, 학력, 빈곤, 나이, 성정체성,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가족형태 등의 이유 말입니다. 차별금지법에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는 바로 그 조건들이요. 어떤 이주 여성은 출신국가와 사용하는 언어가 밝혀지면 괴롭힘을 당해 일자리를 잃고 성노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여성홀리스는 당장 오늘 내일 먹고 잘 곳을 구하기 위해 성노동을 해서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얻기도 합니다. 장애인 노동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장애여성도 최저임금보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성산업에 진입합니다. 어떤 여성 청소년은 폭력적인 가정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조건만남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노동자들은 이미 차별의 결과로서 존재합니다.(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유원), 2022년 5월23일 차별금지법 제정 기자회견문 중에서. <https://sexworkproject.tistory.com/14>

평범한 사람은 우리 창기의 마음을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이런 사회에 들어온 것은 상당한 장애(障害)를 입은 결과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창기라 부르며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고 다르게 취급하며 차가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두 교통과 빈민의 결과이지 단지바람이나 운락의 결과만은 아닙니다. 폐창운동이 활발해진 것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요. 실로 우리 모두에게 신의 구원의 목소리입니다. 창기의 처우개선과 함께 교양의장도 있었으면 합니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만 빌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약하지만 우리도 펼쳐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926년 히로사키 기타 유곽의 어느 창기), 山家悠平, 앞의 책, p.122.

22) 山家悠平, 앞의 책, pp.230-231.

던 부녀국 멤버들에게 생계를 위해 매춘을 하는 존재는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이었다.²³⁾

부총이 전개했던 '생활옹호' 투쟁의 맥락에서 보자면, 일본군 '위안부' 운동과의 접촉면을 가지는 일본의 반성매매운동의 성과로서 발표자가 나열한 여러 사례 중 "2025년에 성매매업소 운영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코로나19 보조금의 합헌성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승소"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급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경제적 대책으로 마련되었다. 간사이 지방에 있는 무점포형 성풍속업체들은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사업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지속화 급부금'과 '집세 지원 급부금' 제도의 대상에서 자신들이 제외되는 것은 '법아래 평등을 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지난 2025년 6월 16일 '법아래 평등을 정한 헌법에는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5명의 판사 중 1명은 반대 의견).²⁴⁾

2019년 일본의 경찰청은 성풍속업 관련 특수영업으로 등록된 업소가 31,956개소이며, 파악된 종사자 수만 해도 30만여 명이라고 발표했다. 제3자라 불리는 업소 종업원, 운전기사, 관리인 등을 포함하면 관련 종사자 수는 5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⁵⁾ 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하는 업소가 코로나19 사업자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혹자는 급부금을 둘러싼 논쟁에서 업자와 여성들을 구분해서 지원하자는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상황은 그렇게 깔끔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부 업소에서 여성들에게 제공하던 숙소가 폐지되면, 기본적인 주거 등 일상에 직접적 타격을 받는 이들이 속출하게 된다. 관련 업종 종사자 수만 고려해 봐도, 이는 엄청난 규모의 주거 문제에 해당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또한 '상업적 섹스' 혹은 '성 착취'로만 상상되어온 성산업의 현장에 주거권, 건강권, 자녀들의 교육권, (탈가정 청소년을 포함한) 가정폭력, 약물사용, 감염병 등 여러 문제들이 교차하며 유기적으로 얽혀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2년에 열렸던 관련 재판에서 '법아래 평등을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 '우리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해 달라'는 업체/업자들의 주장에 대해 일본 정부는 "성풍속업은 본질적으로 불건전하다.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제까지 업자와 성구매자에 집중되어 왔던 비판의 잣대를 국가로 옮겨볼 것을 제안한다. 국가가 성풍속업을 "본질적으로 불건전하다"고 공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와 효과를 초래하는가.

재판이 열리고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6월 1일 다치카와(立川)시의 한 모텔에서 19세 남남성이 파견형 풍속점에 근무하던 30대 여성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살해동기를 묻자 그는 "풍속업을 하는 인간은 없어져도 된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죽어도 된다)"고 진술했다.²⁶⁾

4월의 재판과 6월의 살해사건에 대해 일본의 쿼어 이론가 시미즈 아키코(清水晶子)는 "일본 정부가 성산업에 대한 차별적 견해를 공언하는 것은 편견을 키워 혐오범죄의 토양을 만들 수 있다. '본질적으로 불건전하다'는 법정에서의 국가 측 주장과 '풍속업을 하는 인간은 없어져도 된다'는 다치카와 살인사건 용의자의 발언은 맞닿아 있다"고 말한다.²⁷⁾ 이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다. 오래된 창부차별의 내력과는 이어져 있는, 국가가 성산업에 대해 혐오를 양산하고

23) 송연옥, 「폐장에서 보이는 연속과 단절-식민지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송연옥/김영 편저, 박해순 옮김, 『군대와 성폭력-한반도의 20세기』(선인, 2012년) 298, 307쪽.

24) 5명의 판사 중 재판장을 맡은 미야가와 미쓰코(宮川美津子) 판사는 무점포형 성풍속업체를 제외하면 성풍속 사업자나 파견되는 종업원이 사회적으로 뒤떨어진 존재라는 평가나 인상을 주고 이를 고정화할 우려가 있다며 위헌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コロナ給付金 “無店舗型の性風俗業は対象外”は合憲 最高裁」, NHK(2025/06/16).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616/k10014836631000.html>

25) まいもく (148) 「性風俗業者が給付金を受け取れないのはなぜか?」, 毎日新聞 <https://www.youtube.com/watch?v=dWGnnWJb36I> (최종검색일: 2022/06/16).

26) 심아정, 「『반란의 매춘부』 이후,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할 것인가, 『여/성이론』 통권 제46호(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22년) 159-160쪽.

27) 清水晶子, 「セックスワークをフェミニズムはどう捉えるか」, 『VOGUEと学ぶフェミニズム Vol.14』 <https://www.vogue.co.jp/change/article/feminism-lesson-vol14> (최종 검색일: 2022/06/09)

추동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다.

공창제와 위안소 제도와의 관련 속에서 이뤄지는 논의에서 최우선적인 관심사는 여성들의 ‘안전’과 ‘생존’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들 둘러싼 지금-여기-우리의 논의 또한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지 않나. 빈곤과 국경의 문제, 이동의 자유, 노동권, 재생산권리, 건강권,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추방의 위협 없이 일할 권리, 취업 방안, 더 나은 복지의 제공,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비혼모 지원 서비스 등 불안정한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어떤 모델을 법제화하더라도 여성들의 삶은 성산업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의 최고재판소 합헌 판결의 사례를 반성매매운동의 성과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에는 신중한 유보가 필요하다.

5. 반성매매운동 너머의 연결‘들’을 제안하며

일본인 ‘위안부’와 공창제를 둘러싼 논의는 일본에서도 여전히 논쟁 중에 있고, 일본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공론장이 드물다.²⁸⁾ 일본인 ‘위안부’ 여성들이 놓여 있던 사회적/경제적 취약성의 근간에 군사주의, 제국주의, 신민주주의, 자본주의, 가부장제, 계급성, 정상가족이데올로기 등이 버티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재생산 능력과 자율성에 가해진 폭력’이라는 관점으로 일본인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것 또한 가능할 것이다.

양현아는 ‘재생산 능력과 자율성에 가해지는 폭력’을 의미하는 ‘reproductive violence’의 한국어 번역어로 ‘재생산 폭력’을 제안하고,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 주로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하거나 섹슈얼리티에 가해진 성폭력으로 인식되면서 재생산폭력은 상대적으로 덜 주목된 젠더폭력의 주요 양상임을 지적한 바 있다.²⁹⁾

공창제는 낙태금지령과 병행되어 실시되었다. 이러한 근대 일본의 성 관리/통제 정책은 결혼제도를 지탱하고 이성애주의를 강화하는 것이었고, 유곽과 위안소는 이러한 이성애주의를 강화하는 시설이기도 했다. 따라서 페미니즘 관점에서 공창제를 문제 삼을 때, 결혼제도와 정상가족주의 비판, 강요된 남성성과 이성애주의 또한 함께 다뤄질 수 있다. 낙태 금지’와 더불어 전후 만주에서 귀환하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일본여성들을 대상으로 내려진 ‘낙태명령’ 또한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피해여성들 자신의 바람으로 ‘임신중지’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불법 임신’이라는 진단명으로 호명되었던 소련군의 강간에 대한 임신중지는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국가의 기획이기도 하고, 소련군에게 위안시설을 만들 어준 만주 개척단 남성 간부들의 개입도 있었으며, 가족 이데올로기와 남성성의 보전 강박 등이 중첩되어 모색된 것이기도 하다. 여러 인터뷰 자료들을 보면 당시 ‘불법 임신’으로 태어나는 ‘혼혈아’는 국가에는 패전을 가시화하는 살아있는 증거로서, 남성에게는 남성성을 위협하는 침략자로서, 여성에게는 성폭력 피해의 낙인으로서, 가족에게는 재통합을 방해하는 존재로서 인식되고 있었다. 성폭력을 전쟁에 수반되는 어쩔 수 없는 비극으로 간주하는 통상적인 인식은 이렇듯 폭력을 둘러싼 다양한 층위와 행위자의 존재를 비가시화하고 피해여성이 입은 낙인에 대한 이해 또한 가로막는다.³⁰⁾

패전 직전 소련군의 참전으로 대혼란을 겪었던 만주 재류 일본인들은 소련군이 들이닥치면 일본인 여성은 강간을 당할 것이라는 불안이 커져, 소련군에게서 일본인 부녀를 지키기 위해 ‘희생해 줄 여성들=여자특공대’를 편성하자는 의견을

28) 관련 논의는 송연옥, 『제국 일본의 침략전쟁과 성 정치: ‘위안부’와 ‘공창’을 관통하는 군사주의』, 『역사연구』 52호(역사학연구소, 2025년)와 번역 출간될 宋連玉, 『植民地「公娼制」に帝国の性政治をみる—釜山から上海まで』(有志社, 2023년), 박정애, 「어째서 공창과 ‘위안부’를 비교하는가-전쟁이 된 역사, 지속되는 폭력」, 『위안부』, 더 많은 논쟁을 할 책임-민주주의와 망언의 적대적 공존을 넘어』(휴머니스트, 2024년), 吉川 春子, 『日本人「慰安婦」を忘れない』(鴨川書房, 2023)를 참고할 것.

29) 양현아, 앞의 논문, 34-35쪽.

30) 심아정, 「여성민간법정을 통해 본 여성들의 초국적 연대」 ‘증언과 목격의 연쇄’를 중심으로, 앞의 책, 246쪽.

성매매여성들에게 종용했고, 이에 열세 명의 여성들이 '자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록도 남아있다.³¹⁾ 소련군에 의해 여성들이 강간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창부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이 여성들을 이른바 '성의 방파제'로 삼은 일본인들의 공모에 대한 언급이 드물다는 것은 매우 문제적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해국 일본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라는 수사로 뭉뚱그려질 수 없는 경험들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전시 성폭력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남성과 LGBTQ+를 향한 폭력은 지금도 유엔 안보리에서 선언이나 성명문의 형태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여성에 대한 평시의 차별과 성 착취가 전시와 전후에 연속되어 나타난다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했던 발표자의 주장을 조금 더 밀고 나가보자면, 호모포비아나 트랜스포비아의 대상이 되어 LGBTQ+가 평시에 노출되어 온 차별과 혐오는 무력분쟁이 발발할 경우 이들을 더욱 취약한 조건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들이 차별의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존재 자체가 법적/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나라에서 분쟁이 발생을 경우, '교정 강간'의 위험도 있다. 즉, 이들이 그 지역에서 우세하고 권위 있는 규범에서 이탈하고 있다면, 그 규범을 준수시키기 위해서 성폭력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에서도 법적/도덕적으로도 LGBTQ+의 존재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성폭력 피해를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고, 경찰에도 신고할 수 없으며, 병원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다.³²⁾ '국가에 의한 성의 관리와 통제'라는 점에서 공창제를 문제 삼는 논의의 연장선상에서도, 군사주의와 함께, 현재 진행형의 여러 전쟁'들' 속에서 이 사안에 대해 더 깊은 논의와 적극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한국은 베트남전쟁 참전국이다.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운동의 물결 속에서 2018년에 개최된 민간법정, 베트남전쟁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실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베트남 시민평화법정)은 2000년 여성법정을 롤 모델로 삼아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가해국 수도의 서울에서 열렸는데, 피해 생존자이자 증인석에 선, 같은 이름의 두 응우옌티탄이 여성이었지만, 전시성폭력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다.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서 베트남시민평화법정의 약식 판결문³³⁾에는 법정에서 다뤄지지 못한 '성폭력'에 대해 인지하고 이에 대한 추후의 진상조사를 권고하는 주문이 기입되었다.³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전시성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국내 연구는 드물다.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에 주력해온 한베평화재단의 아카이브 자료³⁵⁾에 따르면, 한국군 학살 피해 자료를 통해 전시성폭력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시성폭력 피해자의 숫자와 이름이 확인된 건 총 19개 사건으로 피해자는 79명(이름이 확인된 희생자 11명)이며 희생자 숫자나 이름은 없지만 전시성폭력이 언급된 사건을 총 27개"였다. 이 자료는 민간인학살 사건 자체에 맞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피해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³⁶⁾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전지(戰地) 강간을 비롯한 여러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주월한국군사령부의 공식 통계가 이미 공개되어 있고,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전지강간에 대해 유죄를 확정

31) 니시노 루미코, 「일본인 '위안부'의 처우와 특징: 성노예를 정당화한 내셔널리즘과 '성의 방파제'론」,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리서치액션센터, 번역공동체 잇다 옮김, 『일본인 '위안부'-애국심과 인신매매』, (논형, 2021년) 148-149쪽.

32) 上野友也, 「戦場のLGBT —戦時性暴力の被害と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おける対立」, 『平和研究』 59巻, 2023 pp.5-6.

33) 해당 주문 내용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주 문】 2. 피고 대한민국에게 1964년부터 1973년까지 사이에 베트남 지역에서 피고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살인, 상해, 폭행, 성폭력 등 일체의 불법행위가 일어났는지 여부에 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2018년 4월 22일에 선고된 약식 판결문 중). 베트남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공식블로그 참조.
<https://blog.naver.com/tribunal4peace>

34) 심아정, 「민간인학살이라는 단일쟁점을 넘어, 겪지 않은 자들의 베트남전쟁-에코사이드 개념의 확장과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애도의 가능성」, 『역사와 책임』 통권 16호(민족문제연구소, 2025년).

35) 한베평화재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ovietpeace.org/b/archive03/6715>

36) 박주연, 「전시성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연대도 계속 돼야 한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2022/03/08) <https://www.ildaro.com/9293>

하고 처벌한 한국 대법원 판결³⁷⁾도 찾아볼 수 있다.

전쟁이나 내전으로 인해 전시성폭력을 피해를 입은 난민신청자 여성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고국을 떠난 이들이 한국 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유들이 난민인정을 위한 단독 사유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언급해 두고 싶다.

여성에 대한 성 착취와 노예화를 지탱해 온 이들의 군상과 시스템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작업은 제도로서의 위안소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어떠한 그물망 속에서 가동하고 있었는지, 페미니즘, 군사주의, 식민주의, 제국주의를 횡단하는 연구 속에서 수행될 것이 요청된다. 일본인 ‘위안부’라는 존재들과 ‘위안소’제도를 가능하게 한 ‘공창제’라는 일본제국의 기획, 그리고 이에 가담한 여러 주체들의 면면을 뒤늦게 마주하고, 이를 지금-여기의 여성‘들이 겪고 있는 젠더기반폭력과 어떻게 접속해야 할지, 관점과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는 공론장의 기획을 모색하면서 어떻게 ‘문제화’해 나갈 수 있을지, 역사적 사료와 현재적 운동 현장‘들을 오가는 섬세한 물음을 던질 것을 우리의 과제로서 제안한다.

37) 전지강간교사,준강간추행,치상,전지강간,전지강간미수 [대법원 1970. 4. 28. 선고 70도449 판결]

【원심판결】 제1심 주월사령부보통, 제2심 국방부고등 1969. 12. 27. 선고 69고군3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각 미결 구금 일수 중 각 95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전략) 군형법 제84조 제1항 소정의 “전지강간”죄 해당행위는 전지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전지에서 부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니, 같은 견해를 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전지강간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중략)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는 모두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군법회의법 제437조, 형법 제57조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민문기(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주재항.

2025 세계시민연대로 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 컨퍼런스

제3부 현재로의 전환: 전시 성폭력과 지속 가능한 연대

토론문

Nozomi Tanaka

서론

저는 한국전쟁과 일본의 미군기지 문제를 연구 주제로 삼아 왔습니다.

오키나와(Okinawa)의 미군기지 문제를 접하고 나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가나가와(神奈川, Kanagawa)에 위치한 미군기지를 조사한 것이 연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시기에 일본의 미군기지가 단순한 패전국 점령군의 주둔지가 아니라 반영구적 성격의 기지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주변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중심으로 박사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후쿠오카(Fukuoka), 구레(Kure), 사세보(Sasebo), 요코스카(Yokosuka), 오키나와(Okinawa) 등 일본 전역의 미군기지를 방문 조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미군기지 주변에서 언급되는 하우스 메이드(house maid), 기지종업부, 팡팡걸(pangpang girl) 등 다양한 여성들의 존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미군기지와 전후 일본 여성의 삶 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번 Caroline Norma 선생님의 논문 발표에 토론자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공분야는 아니지만 이번 논문을 통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발표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대 일본과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성산업 및 여성 억압 구조와 연결시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위안부 문제를 현재의 성폭력·성착취 문제와 연계시킴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폭넓은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발표자는 위안부 문제를 단지 역사 속에 머무는 사건이 아니라 “위안부 문제는 역사적 문제에서 오늘날 여성에 대한 성폭력(contemporary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의 문제로 발전하였다” (the ‘comfort women’ issue has evolved from an historical problem to one of contemporary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라고 지적하며, 이를 여성 인권 문제와 연결했습니다.

본론

첫째, 한국 사회에서의 흐름을 살펴보면 발표자가 지적한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 사건(Gangnam Station murder), 몰카 시위(Molka protests), N번방 사건(Nth Room case) 등과 연결되며 새로운 여성 운동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를 잇는 분석은 중요한 기여이지만, 동시에 시대적 맥락과 조건의 차이를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훨씬 이해가 높을 것 같습니다. 위안부 제도와 현대 성산업이 동일한 구조적 억압으로만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각기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으면 더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발표자는 피해자 범주의 확장을 강조했습니다. Nishino는 “일본인 위안부(prostituted Japanese ‘comfort women’의 피해를 명확히 인정해야 한다)” (we must clearly recognise and acknowledge the victimisation of prostituted Japanese ‘comfort women’)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본인 피해자, 미군 기지촌 여성, 현대 성산업 종사자까지 포괄하려는 중요한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집단 간의 공통점뿐 아니라 차이점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된다면, 피해 경험의 다층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연구영역이 훨씬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발표문은 지속 가능한 연대, 즉 “sustainable solidarity”라는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저도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새롭게 이해하게 된 내용입니다. 발표자가 주장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여성 연대가 발전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가 단순한 상징적 지지를 넘어, 실제 제도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특히 한일 간에는 역사 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차노미즈 여자대학과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연구소 등의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공동연구를 했지만, 역사 인식이나 여성운동에 대한 시각 차이로 지속적인 연구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식민지 경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역사인식의 차이도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연대는 많이 이루어져 온 것도 사실입니다. 시민운동과 전후보상운동의 측면만이 아닌, 정부 간 제도적 노력, 사회적 인식, 그리고 국제 연대의 구체적 사례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

발표문은 마지막에 “오늘날 일본 여성들의 광범위한 성매매와 인신매매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성과 소녀들에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The widespread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of Japanese victims today should ring warning bells for women and girls in East Asia, just as it did before the Second World War)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연대의 필요성을 일깨우는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발표가 제시하는 문제의식—즉,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 과제’이자 동시에 ‘현대적 과제’로 바라보는 관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동시에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례 비교, 구체적 자료 분석, 그리고 제도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병행된다면, 동아시아 여성 인권 운동이 더욱 심화된 논의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각주

저는 이 토론문에서 [일본군]위안부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학문적으로 표현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당사자가 이 용어를 고집하고 있는 측면과 일본 내에서는 보편적인 위안부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경향이 있기에, [일본군]위안부 시설의 특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연표

날짜	내용
1991. 8. 14.	김학순(당시 67세),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본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음을 밝히며 생존자로서 최초 공개 증언
1991. 12. 6.	아시아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군인·군속 강제동원 피해자와 김학순을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3명) 등 35명과 함께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일명 아시아태평양 전쟁 한국인희생자 보상청구사건)
1992. 1. 8.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시작
1992. 7. 3.	외무부, 2월 25일~6월 25일 사이 내무부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접수된 정신대 피해자 신고건수는 모두 390건이며, 이 가운데 근로정신대가 235명, 일본군 '위안부'가 155명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발표
1992. 7. 6.	가토 고이치(加藤紘一) 일본 관방장관,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에 일본 정부가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연행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다는 내용의 일본 정부 1차 진상조사 결과(자료 127건 포함)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는 담화 발표
1992. 7. 31.	한국 정부, 외무부 등 17개 정부 부처로 구성된 '정신대문제실무대책반'이 1992년 1월부터 실시한 조사결과와 1992년 7월 발표된 일본 정부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일제하 군대위안부 실태조사 중간보고서'를 발표하고 '위안부' 모집에 강제력이 행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일본 정부에 대책 촉구
1992. 8. 1.	서울에서 '제1차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홍콩, 일본 등 6개국 참가 (~1992.8.11.)
1992. 1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주, 버지니아주 북부의 한인연합감리교회(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에서 WTTG-TV에 '위안부' 피해를 증언
1992. 12. 9.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의 전후보상에 관한 국제공청회'에서 남북한, 중국, 필리핀, 대만, 네덜란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증언. 네덜란드 피해자 얀 루프-오헤른(Jan Ruff-O'Herne) 최초 공개 증언 이루어짐
1992. 12. 25.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과 근로정신대 피해자 7명,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며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소송 제기(일명 관부재판)
1993. 4. 2.	마리아 로사 헨슨(Maria Rosa Henson) 등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8명, 일본 도쿄지방법판소에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1993. 4. 5.	일본에 거주 중이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의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 제기. 금액을 청구해달라는 재판소의 요청에 따라 1995년 5월 19일에 1억 2,000만엔을 추가로 청구
1993. 7. 2.	UN 인권소위원회 '중대한 인권침해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특별보고관 테오 반 보벤(Theodoor Cornelis van Boven), 「인권과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및 회복의 권리에 관한 연구」 보고서 UN인권위원회에 제출
1993. 8. 4.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일본 관방장관, 위안소 설치·운영과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관여했음을 시인하는 일본 정부의 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뜻을 전하는 담화 발표(일명 고노 담화)
1994. 1. 25.	네덜란드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포로 피해자 등 7명, 일본 정부를 상대로 도쿄 지방재판소에 소송 제기
1994. 11. 22.	국제법률가위원회(ICJ),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위한 행정기관 설치 및 입법 조치,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제소 수용 등을 권고하는 최종보고서 발표

날짜	내용
1995. 7. 3.	UN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 린다 차베즈(Linda Chavez), 「전시 하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연구보고서」 제출
1995. 7. 19.	일본 정부,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국민기금) 공식 발족
1995. 8. 7.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731부대 희생자 유족 등 15명, 일본 도쿄지방법판소에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 제기
1995. 8. 15.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일본 총리, 전후 50주년을 맞아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하는 담화 발표(일명 무라야마 담화)
1995. 9. 15.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4회 UN 세계여성대회, 베이징 선언 및 행동 강령 채택. 전시 하 여성폭력을 전쟁 범죄이자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의 필요를 명시한 내용이 포함됨
1995. 12. 3.	일본 도쿄에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국민기금)에 반대하는 국제회의’ 개최
1996. 1. 4.	UN 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 UN 인권위원회에 「전쟁 중 군대 성노예제 문제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일본 조사 보고서」 제출
1996. 3.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ILO 제29호 강제노동협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 제출. 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언급한 첫번째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CEACR) 보고서.
1998. 4. 27.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에게 90만엔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령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일명 관부재판)
1998. 8. 8.	UN 인권소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및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특별보고관 게이 맥두갈(Gay J. McDougall)의 보고서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
2000. 9. 18.	한국, 중국, 타이완,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5명, 미국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제기
2000. 10. 31.	UN 안전보장이사회,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 1325호’ 채택
2000. 12. 8.	일본 도쿄 구단회관에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 법정(2000년 법정) 개최. 3일 간의 심리를 거쳐 히로 히토 천왕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일본 정부에게 국제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판단(~2000.12.12.)
2001. 3. 29.	일본 히로시마 고등재판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일명 관부재판)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냈던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판결
2001. 12. 4.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최종판결. 히로히토 천황에게 유죄 선고
2002. 10. 15.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기각

연표

날짜	내용
2002. 12. 11.	한국 국회,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2003. 3. 25.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일명 관부재판)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 확정
2003. 3. 28.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송신도가 공식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 확정
2003. 6. 27.	미 DC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주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외국주권면제법(FSIA)을 근거로 기각한 하급 법원의 결정을 확정
2004. 2. 13.	서울 행정법원, 일본강점하 피해자들이 한일협정 관련 57개 문건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일본을 상대로 소송 중인 원고 53명에게 한일협정 문건 중 손해배상 청구권 관련 5개 문건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2006. 2. 22.	미 연방대법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주 등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사건을 종결
2006. 7. 5.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09명,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받았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2007. 3. 31.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 기금', 사업 종료하고 해산. 이후 디지털 기념관 <'위안부' 문제와 아시아 여성 기금>(www.awf.or.jp) 개설
2007. 4. 27.	일본 최고재판소,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의 납치와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1972년 중일 공동성명을 들어 청구권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
2011. 8. 3.	한국 헌법재판소,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
2011. 12. 1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제1000회 수요시위 개최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
2014. 1. 15.	미국 하원에서 존 케리(John Kerry) 국무부 장관이 일본 정부에게 2007년 미국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독려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4년 미국 행정부 통합 세출법안 통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미국 의회의 정식 법안에 포함된 최초 사례
2015. 12. 28.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기자회견 갖고 양국 간에 이루어진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발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총리대신 자격으로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하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는 내용 등이 담김
2016. 2.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12월 28일 이루어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교섭문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제기

날짜	내용
2016. 3. 7.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 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회피·축소하는 언행을 중단하고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
2016. 3. 2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및 생존자 가족 등 41명,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2016. 5. 31.	8개국 1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국제 연대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 2천744건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본부에 등재 신청
2016. 7. 28.	2015년 12월 28일 이루어진 한일 양국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화해·치유재단' 설립
2017. 10. 31.	유네스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타이완 등 9개국이 공동으로 신청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해 보류 결정
2017. 11. 14.	UN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서 일본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의 있게 사죄하고 피해자에게 보상하라고 권고
2017. 11. 24.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8. 8. 3.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5년 한일 양국 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아니라고 지적 하여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지속적 해결 노력' 권고하는 보고서 공표
2018. 11. 19.	UN 강제실종위원회, 일본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사실과 자료 등의 은폐, 이행되지 않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배상,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비판하며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
2018. 11. 21.	여성가족부, 한일 양국 간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 사업 종료 및 해산 추진을 발표
2019. 5. 21.	일본 외무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유가족이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조장하며 한국 정부에 소송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 전달
2019. 12. 27.	헌법재판소, 한일 양국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
2021. 1. 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 1월 8일 오전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2023. 6. 1.	대한민국 대법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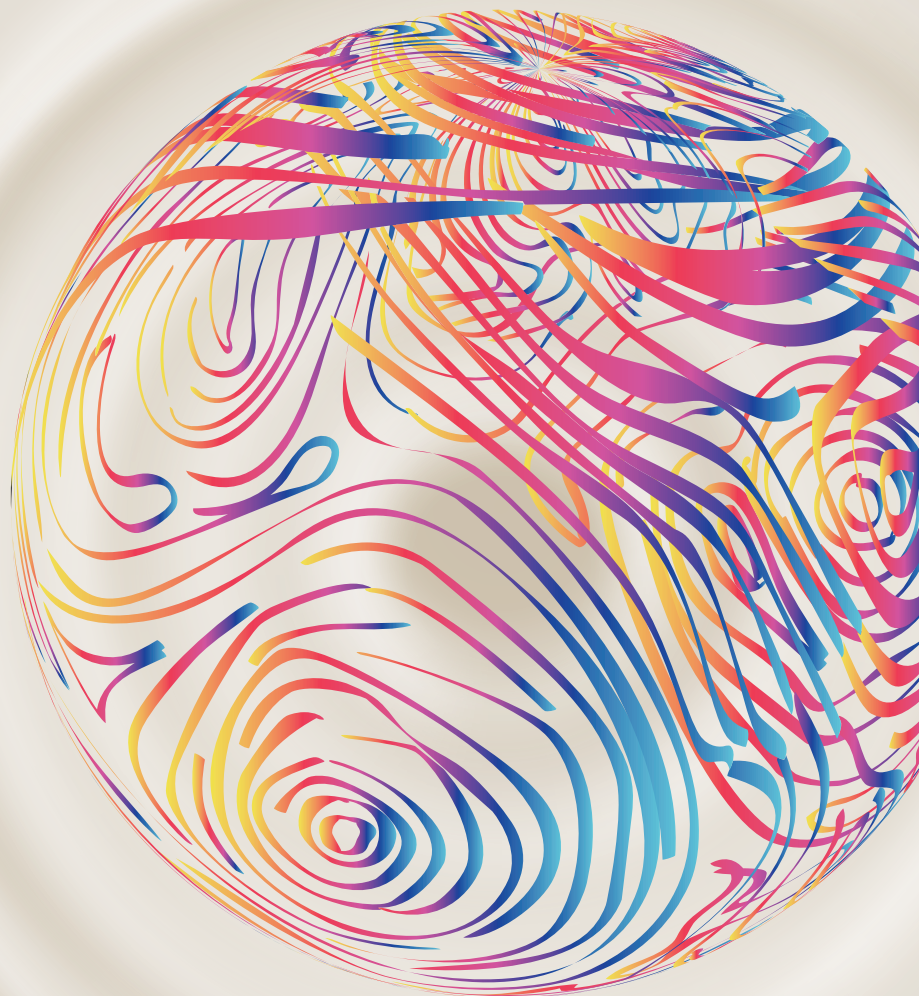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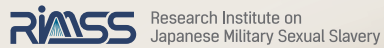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Global Citizenship and Solidarity

Echoes Across Borders:
From Voices of Pain to the
Language of Peace

2025. 9. 26.(FRI) 13:00~18:00

Peace&Park Convention 3Fl. Royal Hall
The War Memorial of Korea



CONTENTS

Overview	88
Statement of Purpose	89
Greeting	91
Program	92
Speaker Introduction	94

Session1 – The Beginning of Justice: The Arena of Law and Testimony

Legal Struggles and the Foundations of Testimony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Chair : Hyunah Yang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Presentation

Japan’s Wartime Sex Slavery: Unresolved Atrocity, Asia Unifier, Portal to Regional Peace	102
---	-----

Barry A. Fisher | Lawyer, Fleishman & Fisher

Presentation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Domestic Litigation for Military Sexual Enslavement in Korea and Beyond	112
--	-----

Timothy Webster | Professor of Law, Western New England University

Discussion

	118
--	-----

Gwangok Ryu | Lawyer, Law Firm Yangjae

Session2 –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Justice: From Memory to Norms

From a National Issue to a Global Discourse on Women’s Rights

Chair : Heisoo Shin | Chairperson,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Presentation

The Creation and Utilization of Opportunity Structures for Transnational Activism on WWII Sexual Slavery in Asia	126
---	-----

Mary M. McCarthy |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Drake University

Presentation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Evidence from the Global ‘Comfort Women’ Movement	134
---	-----

Celina Hollmichel | Ph.D. Candidate in Political Scienc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Discussion

	144
--	-----

Sihyun Cho |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Colonial Justice

Session3 – Shifting to the Present: Wartime Sexual Violence and Sustainable Solidarity

Reframing the “Comfort Women” Issue as Contemporary Gender-Based Violence and Envisioning Future Solidarities

Chair : Eun-Shil Kim |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Presentati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institutionalized gender violence in peacetime	148
---	-----

Caroline Peta Norma | Senior Lecturer, School of Global, Urban and Social Studies,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Discussion

	154
--	-----

Ajung Sim | Independent Research Activist

Discussion

	168
--	-----

Nozomi Tanaka | Ph.D. Candidate,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wha Womans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Global Citizenship and Solidarity

Echoes Across Borders:
From Voices of Pain to the
Language of Peace

OVERVIEW

T i t l e :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Global Citizenship and Solidarity

Theme : Echoes Across Borders: From Voices of Pain to the Language of Peace

D a t e : 2025. 9. 26.(fri) 13:00 ~ 18:00

Venue : Peace&Park Convention 3Fl, Royal Hall The War Memorial of Korea

STATEMENT OF PURPOSE

What insights can be gained from the trajectory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known as the so-called “comfort women” system, as it has advanced through global civic solidarity? Beginning with the first public testimony of Ms. Kim Hak-sun in 1991, more than three decades of cross-border solidarity have since unfolded, further expanding into a multi-disciplinary approach that transcends academic boundaries.

The 2025 International Conference, held under the theme “Echoes Across Borders: From Voices of Pain to the Language of Peace”, has been organized as a forum for researchers and activists worldwide to reflect o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rom the perspectives of memory and justice, and to revisit the path of solidarity built by global citizens. This conference will examine how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far from being a matter of the past, continues to challenge us as a contemporary human rights concern.

The conference will revolve around the following three core themes.

Session I: The Beginning of Justice: The Arena of Law and Testimony

This session revisits the history of legal struggles for accountability i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examines its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norms. It highlights how survivors have pursued legal battles in the face of state denial and silence, and considers the role of global civic solidarity in this process. Furthermore, it reflects on how accumulated cases have come to shape and occupy a place within the global human rights agenda.

Session II: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Justice: From Memory to Norms

This session offers a multidimensional view of the universality, particularity, and contemporaneity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rough examples of responses and solidarity within global civil society. It examines how this singular case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nd norms concerning wartime sexual violence, and addresses the key issues embedded in the shift of perception toward such violence.

Session III: Shifting to the Present: Wartime Sexual Violence and Sustainable Solidarity

This session re-examines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once regarded solely as a matter of historical past, as a pressing human rights concern of today. It explores how this issue—intertwined with dimensions of state, gender, class, and race—speaks to future generations in the 21st century, and discusses pathways toward sustainable solidarity moving forward.

The 2025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serve as a forum to affirm that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has transcended the past of any one nation or group, expanding into a matter of justice and norm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our hope that the global civic solidarity born from survivors’ testimonies will be remembered with future generations, and that it will continue as an enduring international movement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wartime sexual violence.

Research Institut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Strategic Projects Team

GREETING

The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WHRIK), through its Research Institut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ill hold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Global Citizenship and Solidarity on September 26, 2025.

This year's conference, held under the theme "Echoes Across Borders: From Voices of Pain to the Language of Peace," aims to reflect on how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as been internationalized through global civil society solidarity, and to examine its significance in the present day.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 not merely a historical event. In 1991, survivors broke decades of silence with courageous testimonies that transformed personal suffering into a collective call for social responsibility. What began as a national reckoning in Korea and Japan has since evolved into a global movement, driven by solidarity among civil societies. Over the past 35 years, survivors, activists, and scholars have worked together to reframe this issue—not as a historical issue confined to one nation, but as a global human rights concern that continues to shed light on violence against women.

Since 2023, the Institute has hosted international conferences as part of a three-year initiative under the theme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through the Lens of Civil Solidarity." Concluding the three-year initiative, the 2025 conference will be held under the central theme of "Global Citizenship and Solidarity." Through this gathering, we aim to reflect on the challenges and responsibilities left to us by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for global cooperation in addressing wartime sexual violence—guided by the principles of memory, justice, accountability, and peace.

We sincerely hope this conference will serve a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reflect on how the historical truths voiced by survivors have inspired concrete action within global civil society, and to pass on messages of remembrance and peace to future generations.

We deeply appreciate your interest and active participation, and we look forward to your meaningful engagement.

Thank you.

Shin Bora President,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Global Citizenship
and Solidarity**

**Echoes Across Borders:
From Voices of Pain to the
Language of Peace**

2025. 9. 26.(FRI) 13:00~18:00
Peace&Park Convention 3FL. Royal Hall
The War Memorial of Korea

PROGRAM

Time	Program	
13:00 ~ 13:30	Opening address	
	Keynote Speech	Empathy and Solidarity: The Transformative Power of Shared Grief In Pyo Cha Writer

Session 1

The Beginning of Justice: The Arena of Law and Testimony
Legal Struggles and the Foundations of Testimony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ime	Program	
13:40 ~ 15:00	Chair	Hyunah Yang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Presentation	Japan's Wartime Sex Slavery: Unresolved Atrocity, Asia Unifier, Portal to Regional Peace Barry A. Fisher Lawyer, Fleishman & Fisher
	Presentation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Domestic Litigation for Military Sexual Enslavement in Korea and Beyond Timothy Webster Professor of Law, Western New England University
	Discussion	Gwangok Ryu Lawyer, Law Firm Yangjae
	Q&A	
Coffee Break		

Session 2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Justice: From Memory to Norms

From a National Issue to a Global Discourse on Women's Rights

Time	Program	
15:10 ~ 16:30	Chair	Heisoo Shin Chairperson,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Presentation	The Creation and Utilization of Opportunity Structures for Transnational Activism on WWII Sexual Slavery in Asia Mary M. McCarthy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Drake University
	Presentation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Evidence from the Global 'Comfort Women' Movement Celina Hollmichel Ph.D. Candidate in Political Scienc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Discussion	Sihyun Cho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Colonial Justice
	Q&A	
Quiz Break		

Session 3

Shifting to the Present: Wartime Sexual Violence and Sustainable Solidarity

Reframing the "Comfort Women" Issue as Contemporary Gender-Based Violence and Envisioning Future Solidarities

Time	Program	
16:40 ~ 18:00	Chair	Eun-Shil Kim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Presentati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institutionalized gender violence in peacetime Caroline Peta Norma Senior Lecturer, School of Global, Urban and Social Studies,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Ajung Sim Independent Research Activist
	Discussion	Nozomi Tanaka Ph.D. Candidate,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wha Womans University
	Overall Discussion	
18:00	Closing	

SPEAKER INTRODUCTION

Keynote Speech



In Pyo Cha

Writer

Main Experience

- Winner of the 14th Hwang Soon-won Literary Award for Emerging Writers (2025)
- Selected as Required Reading by the University of Oxford, Korean Studies Department (2024)

Achievements

- 『The Mermaid Hunt』 (2022)
- 『Someday, If We Look at The Same Star』 (2021)
- 『Goodbye Hill』 (2009)

Session 1



Chair

Hyunah Yang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Main Experience

- President, Korean Society for Gender and Law
- Commissione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President,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mong Other Roles

Publications

- 『Envisioning Equality, Difference, and Justice』 (2019)
- 『The Road Not Taken: Toward Feminist Legal Studies』 (2004)
- 『Goodbye Hill』 (2009)



Presentation

Barry A. Fisher

Lawyer, Fleishman & Fisher

Main Experience

- Counsel for Minorities in the German and Austrian Holocaust Settlements, as well Class Counsel on all of the German, Austrian, and Swiss Holocaust Cases.
- Leading Counsel on behalf of Chinese, Korean and other Asian victims of the Sexual Slavery and Slave Labor systems of wartime Japan, including as Court Counsel, Speaker at International Conferences, Author of Scholarly Articles.

Achievements

- International Lawyer of Year Award (2021)
- NogunRi Peace Prize (2008)
- Amicus Poloniae Award (1997)



Presentation

Timothy Webster

Professor of Law, Western New England University

Main Experience

- Clerked in Boston, Practiced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in Tokyo and New York
- Advised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in Beijing and Chongqing
- Taught Asian Law for the Past Twenty Years, at Yale Law School, Case Western Reserve, University of Paris, National Taiwan University, and Other Institutions in Asia, Europe, and North America.
- Scholarship Appears in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Stanford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Discussion

Gwangok Ryu

Lawyer, Law Firm Yangjae

Main Experience

- Member, Committee for the Settlement of Past Affairs,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Member, Special Committee on Human Rights for Victims of Japanese Colonial Rule, Korean Bar Association
- Legal Counsel for the Compensation Lawsuit Against the Government of Japan on Behalf of Survivo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Legal Counsel for the Compensation Lawsuit Against the Government of Korea on Behalf of Survivo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Legal Counsel for the Compensation Lawsuit Agains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Korea on Behalf of Survivo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Legal Counsel for the Constitutional Petition Against the Government of Korea Filed by Survivor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PEAKER INTRODUCTION

Session 2



Chair

Heisoo Shin

Chairperson,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Main Experience

- Executive Director, UN Center for Human Rights Policy
- Executive Director, National Movement for the Eradication of Prostitution
- Executive Director, Korean Women's Hot-Line
- Co-Representativ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KWAU)

Achievements

- The 10th BICHUMI WOMAN AWARDS (Haeri Prize) (2010)
- 1st World Women's Human Rights Award (1996)



Presentation

Mary M. McCarthy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Drake University

Main Experience

- Professor of DRAKE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DES MOINES, IA, USA
- Coeditor of ASIA-PACIFIC JOURNAL : JAPAN FOCUS
- Associate Professor of DRAKE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DES MOINES, IA, USA (2013-2021)
- Assistant Professor of DRAKE UNIVERSITY,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DES MOINES, IA, USA (2007-2013)



Presentation

Celina Hollmichel

Ph.D. Candidate in Political Scienc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Main Experience

- Finnemore University Professor Fellowship,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chievements

- Completed CITI Program,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 Completed the North Korea Program at the GW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 HARVARD UNIVERSITY A.B. cum laude in Government & East Asian Studies
- The Harvard Weatherhead Center for International Affairs Williams/Lodge International Government and Public Affairs Fellowship



Discussion

Sihyun Cho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Colonial Justice

Main Experience

-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Colonial Justice
- Research Fellow,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2016–2020)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aw, Konkuk University (2006–2015)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Law, Sungshin Women's University (1997–2006)

Publications

- 『The Battleship Island: The War That Has Not Ended』, Co-authored with Min-chul Kim et al. (2017)
- 『The 2015 Agreement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Must Be Reconsidered』, Co-authored with Chang-rok Kim et al. (2016)
- 『A Reexamination of Historic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Under International Law』, Co-authored with Kim Bu-ja et al. (2009)

SPEAKER INTRODUCTION

Session 3



Chair

Eun-Shil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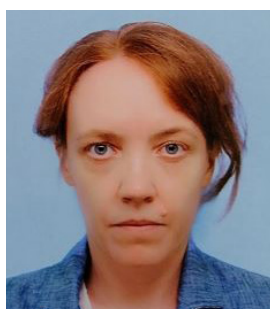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Main Experience

- Board Director, Korea Foundation for Women
- Chairperson, Seoul Gender Equality Committee
- President, The Association of Asian Women's Studies
- Visiting Professor, Freie Universität Berlin, Germany

Publications

-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 Responsibility to Engage in Further Debate』, Co-authored with Eun-sun Kwon et al. (2024)
- 『Feminism in the Age of COVID-19』, Co-authored with Hyun-young Kwon-Kim et al. (2020)



Presentation

Caroline Peta Norma

Senior Lecturer, School of Global, Urban and Social Studies,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Main Experience

- Visiting Researcher, Hitotsubashi University
- Senior lecturer (tenured), School of Global, Urban and Social Studies, RMIT University
- Visiting Associate Professor, Hitotsubashi University (2024-2025)
- Lecturer (tenured), School of Global, Urban and Social Studies, RMIT University (2011-2017)

Achievements

- Discovery Early Career Research Award (2017-2020)



Discussion

Ajung Sim

Independent Research Activist

Main Experience

- International Law ×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omen Seminar Team
- Co-Researcher, Translation of the Judgments and Indictments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 Principal Researcher, Translation of the Proceedings of the Japanese National Diet (2014-2016) (Research Institut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 Co-Researcher, 2025 Kim Bok-dong Research Support Project of the Korean Council: Annotation and Content Development of Testimony Videos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Survivors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Achievements

- 『Law Against Violence: The Issue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Language, Memory, and Solidarity』, Co-authored with Ichiro Tomiyama et al. (2024)
- 『Internment, Isolation, Deprivation: Refugees and Camps in East Asia』, Co-authored with Ji-young Shin et al. (2024)



Discussion

Nozomi Tanaka

Ph.D. Candidate,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wha Womans University

Main Experience

- Research Fellow, New Era Asia Peace Academy (NPA), Japan
- Steering Committee Member of the Japanese Side of the Peace and Diplomacy Public Diplomacy Center (PPDC) (2024-2025)
- Member of the Japanese Side of the PPDC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he Democracy Movement Memorial Project (2021-2023)
- Research Fellow, Ewha Womans University Research Project, Korea Research Foundation (2023-2024)

Achievements

- Selected as the Best Master's Thesis at the Graduate School of Peace Studies and Research, Gessen Women's Gakuin University, Japan, (2021)
- 『A Reexamination of Historical Disputes Between Korea and Japan Under International Law』, Co-authored with Kim Bu-ja et al. (200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Global Citizenship and Solidarity

Echoes Across Borders:
From Voices of Pain to the
Language of Peace



Session 1

The Beginning of Justice: The Arena of Law and Testimony

Legal Struggles and the Foundations of Testimony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Chair

Hyunah Yang | Professor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Presentation

Japan's Wartime Sex Slavery: Unresolved Atrocity, Asia Unifier, Portal to Regional Peace

Barry A. Fisher | Lawyer, Fleishman & Fisher

Presentation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Domestic Litigation for Military Sexual Enslavement in Korea and Beyond

Timothy Webster | Professor of Law, Western New England University

Discussion

Gwangok Ryu | Lawyer, Law Firm Yangjae

Japan's Wartime Sex Slavery: Unresolved Atrocity, Asia Unifier, Portal to Regional Peace

Barry A. Fisher, Fleishman Fisher, Los Angeles

Introduction

We are now 25 years into this 21st century, and 35 years ago, in the final decade of the last century, historic American court developments triggered massive litigation and multinational negotiations that resolved Holocaust-era claims against Japan's war time allies—Germany and Austria. As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attorney for ethnic, racial, religious, and political minorities, I served as a class action lawyer on all the American court Holocaust-related cases. I was a member of an 8-nation negotiation team, and I, along with country representatives, personally signed the multinational German and Austrian treaties that resulted along with complicit Swiss bank in settlements of over \$10 billion.

Upon those settlements 25 years ago, Europe moved forward into the 21st century, with Germany, the war's perpetrator, having been reunited by 1990. But Asia remained a prisoner of the war and its colonial past. Korea is still divided to this very day, 80 years after the war and nearly 40 years after Germany's reunification. And to this day, Japan still refuses resolution, dragging its last century of horror deeper and deeper into this new century. In its wake, it has triggered court cases in the U.S., Japan, the PRC, and the ROK, mass demonstrations, and political action blocking Japan from a permanent seat on the U.N. Security Council, and much more.

As is universally known, the horror of Japan's atrocities was of enormous scope, with Chinese, Koreans, and others subjected to massacres, rape, Unit 731 biological and chemical warfare, and Auschwitz-like "medical experiments." And of a scope and dimension unprecedented in world history: slave labor and sexual slavery. In massive slave ship operations on a scale unseen in the world since the horrendous African slave trade centuries ago, Japanese ships with cargoes of thousands of women, children, and men, including POWs from many nations, were taken from Korea, China, the Philippines, Burma, the Dutch East Indies/Indonesia, and elsewhere. These human shiploads crisscrossed the vast Pacific region that Japan controlled. Those who survived these death ships were taken wherever Japan's government wanted sex slaves and laborers, including factories, coal mines, and Japan's military sex slave brothels, all with the complicity and profiting of Japan's railroad and maritime companies paid by Japan's treasury filled with the looted assets of conquered nations.

Germany's wartime atrocities were short in duration compared to Japan's, whose so-called Asian Pa-

cific War, covering most of Asia and the Pacific region, began with its September 18, 1931, invasion of China. The Asian Pacific War then merged with World War II and ended in 1945. But that 1931 invasion of China was launched from Korea, which Japan had already brutally controlled for over 25 years, beginning with its savage murder of the beloved, unifying Korean Queen Min.

In 1999, while I was still involved in Washington, Berlin, and Vienna shuttle diplomacy, I turned to the Japanese victims of German parallel crimes. I knew that like the Holocaust cases, required would be the creation of a multinational team of lawyers, experts, activists, and victims. I'll shortly explain what I did, but first, I want to speak briefly to my motivations that drew me to focus on the challenges of Japan's wartime crimes— particularly the sex slaves—and to do so entirely pro bono and unpaid.

My Motivations and the Start of a Movement

Like the birthplace of my own mother, Poland, which for centuries was the war-torn crossroads between hostile nations, my sympathies are with Korea, a historical victim caught between China and Japan. Much of the entire war-filled 20th century, from 1900 to the present, including the Russo-Japanese War and two World Wars, is explained by the way each conflict concluded with treaties that devastatingly impacted Korea and Poland, both entirely excluded from negotiations about their fate. These include the 1905 Japan/Russian Portsmouth Treaty, which rendered Korea Japan's possession; the 1939 Hitler/Stalin Pact carving up Poland between Germany and Russia (like Japan's eliminating Korea's leader to take control, Russia murdered Poland's leadership in the Katyn Forest Massacre); and the 1945 Yalta Agreement, which decided the post-war fate of both the Polish and Korean people. As to the latter, this included Koreans who had long before fled Japan's occupation but were living in China or Soviet lands, those in Japanese slave labor, or those in the Peninsula's north—all trapped, frozen in their diaspora from returning to a unified Korea or even to the peninsula's south. This included Koreans worldwide who had long before fled war and occupation, yearning to return. And as I will underscore later, I'm convinced it's those millions of the Korean diaspora living in the U.S. and throughout the world today who are, in fact, the potential vast power if organized to help win the cause of the sex slave victims and Korea tong il—unification. (Polish history also includes a huge diaspora beginning with it being annexed by the Russian Empire with parts going to the Austro-Hungarian empire until end of First World War, and includes a period of Polish history called the Great Emigration).

As for my motivations, of all the war crimes issues, I was particularly drawn to those in sexual slavery (parallel to, but no comparison to German death camp inmate sex slavery). I expected universal sympathy and multinational support from all the sex slave victim countries, including the ROK, DPRK, PRC, Taiwan, the Philippines, the Netherlands, Indonesia, and elsewhere. I also expected universal support from the countries and human rights groups that supported the victims of Japan's war partners, Germany and Austria. I saw it as a unifying issue for the ROK, DPRK, the PRC, and the ROC/Taiwan. I expected solidarity and,

optimistically, even a potential steppingstone for Korea's reunification.

I was also drawn to the extraordinary injustice of falsified wartime history, like Holocaust denial, as after the war, the East/West Cold War quickly began, and Korea and truth became victims. Japan's brutal Korea abuse was suppressed, history books were fictionalized in Japan and Korea, and even the truth of what happened in the south before the Korean War and atrocities during the war, such as No Gun Ri, were whitewashed as truth became a victim of the war, with history this time written by the conquered, not victor.

So with these motivations, and while still working on the Holocaust matters, I turned to the Japan wartime issues. Towards the end of 1999, I made contact with Chinese and Korean victim advocates in California, including the politically powerful international Chinese diaspora group, the GA—Global Alliance for Preserving the WW2 History in Asia—an excellent model for diaspora Koreans. In September 1999, GA leader Ignatius Ding of the San Francisco area and I flew to Tokyo and met with activist lawyers and redress group leaders to introduce the strategy of forming multinational teams of lawyers, scholars, activists, and victim groups to create coordinated legal and political strategies addressing Japan's wartime crimes. The Japanese lawyers we met had already filed cases in Japan for eight years, starting in 1991, on behalf of the courageous Korean sex slave victim Kim Hak-Sun, but with frustratingly limited success, and they were dubious of Ding and me. This view began to change soon after, in December 1999, when I returned to Tokyo for the International Citizens' Forum on War Crimes and Redress, an historic three-day conference at which I was the only American speaker as right-wing crowds outside the building blasted megaphoned opposition.

Perhaps a sign of future problems was that an ally in the Holocaust cases, the powerful Wiesenthal Center and its leader Rabbi Cooper refused to support, speak or attend this Tokyo conference.

After the conference in the last days of 1999 there was a sudden breakthrough in negotiations with Germany and I flew to Berlin to join a conference with U.S. Secretary of State Madeleine Albright and German Foreign Minister.

The New Century and Litigation

Then the eventful and optimism-filled new century year of 2000 began. Until then, victim groups in China existed largely only under government-approved radar, and at the beginning of 2000, I flew to Beijing to privately meet with several academics, lawyers, and important activists, including the extraordinary Wang Xuan. Change came quickly. In March 2000, Shanghai Normal University's remarkable Professor Su Zhiliang, having just created the university's Chinese Centre for Comfort Women Research, was permitted to hold the PRC's very first-ever Japan war redress conference on any issue, this first focusing on sex slavery and denominated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Chinese Comfort Women. I was the only American invited to speak.

There I met scholars, lawyers, and activists from the PRC, ROK, DPRK, ROC/Taiwan, the Philip-

pires, the Netherlands, and elsewhere. There I sat at meals between the surprisingly friendly chatter of North and South Koreans, like out of Park Chan-Wook's movie of that same year 2000, Joint Security Area. And I was introduced to North Korean music that, as an ethnomusicology-trained musician, opened a window of understanding into the deep DPRK-Russian relationship. It's where my dialogue with North Koreans led to a first of several meetings in Pyongyang, including windows to the North's soul at the Kumsusan Palace of the Sun's inner sanctum and to Juche, its mind and heart. Discussions at Professor Su's conference also led to my helping form and actively participating in what became known as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Council for Redress (the ISCR), with representatives from the PRC, ROK, DPRK, Taiwan, the Philippines, the Netherlands, and elsewhere. The ISCR coordinator was the gifted Japanese activist Arimitsu Ken, who I worked closely with for many years in strategy meetings and litigation.

The year 2000 continued to be very significant. For months, I concentrated on preparing the first U.S. court Japan sex slavery case, working with lawyers and victim groups in the ROK, PRC, Taiwan, and the Philippines, collecting and reviewing over 100 victim statements and preparing the landmark Hwang v. Japan class action case on behalf of 15 representative sex slave victim plaintiffs: six Korean, four Chinese, four Filipina, and one Taiwanese. The case was filed in Washington in 2000 on the historic memorial date of Japan's invasion of China from Korea, September 18. We filed simultaneously with demonstrations at Japan's U.S. Embassy and a heavily attended world news presentation at the U.S. National Press Club.

To help coordinate with victims, I worked with groups including the Chinese diaspora GA, Korean groups, including The Council for the Women Drafted for Military Sexual Slavery and House of Sharing, where I met with victims and explained the litigation. I also worked with Philippines organizations, both the Lila-Pilipina and the Asian Centre for Women's Human Rights and I had help from many in the U.S., including my long-time friend and colleague on sex slave issues, author and filmmaker Dai Sil Kim-Gibson.

The lawyer teams included those of Japan's prominent former national bar associations president Kohken Tsuchia, including my friend Takahashi Tohru; ROK's Chang, Wan-ik, and Choi Bongtae, who became known as my brother; PRC's Sun Jing and Kang Jian; and ROC/Taiwan's Wang Ching-Feng, who later became Taiwan's Minister of Justice. Before the end of 2000, working on the Hwang case, I met with lawyers and witnesses at Tokyo's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 Military Sexual Slavery, which provided specific evidence supporting the revelatory 1990's seminal work of Japan's courageous Professor Yoshimi Yoshiaki.

I might add that 2000 was the year of the very controversial settlement of the Japan court case against the Kajima on behalf of Chinese Hanaoka massacre victims including the Spartacus- like slave laborer revolt leader Geng Zhun who I met with when we both spoke at a Beijing University conference.

The Unjust Ending: U.S. Government Opposition

Turning to what did, in fact, happen in the Hwang sex slave case, it was an absolute opposite from the Holocaust cases. Shockingly unexpected was that the U.S. government's 2001 beginning Republican party Bush administration aggressively intervened and took Japan's side in every case and against Japan's victims, including in Hwang. This was all profoundly different from the experience of the victims of German and Austria. Both encouraged by the United States, recognized their past and paid significant compensation. As the author of the very important book *Rape of Nanking*, Iris Chang, and I wrote together in a commentary published in American newspapers about the U.S. government's opposition to the Comfort Women case, we wrote: "these women expected the U.S. government to view their claims with sympathy and to help them negotiate a resolution with Japan." And we underscored that while supporting international laws against sexual human trafficking and women's rights in international fora, the U.S. applied a complete double standard, turning its back on Asians while supporting European victims.

My first dramatic experience with this U.S. government position occurred in the early months of the Bush administration in a case I led, Jeong v. Onoda, filed on behalf of an elderly Korean man living in Los Angeles—a slave laborer for a Japanese company during the war in a place now in the DPRK. After the war, the company became a giant international conglomerate that owned a major Los Angeles hotel. Soon after the September 11, 2001, New York World Trade Center attack, when I had a hearing in the case, a lawyer from Washington, somehow able to fly despite greatly limited flights, made a very dramatic appearance demanding to be heard, instructing the judge to rule for the Japan side. But this state court conservative Republican party member judge still ruled for us, with quick retaliation by way of his removal from President Bush's federal court appointment list.

The case is particularly noteworthy for a couple of reasons. While categorically refusing to assist in any of the decade of redress cases in Japan, the DPRK assisted me in my meeting with Jeong case witnesses in Pyongyang, and our team of lawyers in Tokyo assisted when we won the historic court order forcing the Japanese company to reveal its wartime records held in Tokyo archives. Also, when the case was on appeal, I contacted two of my colleagues, one of America's most conservative law professors and one of the most liberal— Jack Goldsmith (now Harvard Law professor, previously Bush White House Counsel) and Erwin Chemerinsky (now Dean, U.C. Berkeley Law School)—who joined together in a powerful friend of court brief in support of the slave laborer. We still ultimately lost based on the same grounds as in the Hwang case, which I'll explain shortly but first I want to mention some other cases involving multinational redress group and lawyer cooperation, including one I also filed in Los Angeles ultimately having the same fate as Hwang.

Zhang v. Mitsui was a California state court case I brought in 2005 on behalf of Chinese slave labor victims, including 6 elderly disabled men living in Heibe and Hainan provinces who came to Los Angeles for their depositions from remote villages along with their Beijing lawyer Sun Jing, who worked

with activist Wang Xuen and the GA.

In 2002 one of the prominent Japanese lawyers I met in my 1999 first meetings in Tokyo, Kohken Tsuchia, working with experts, including my Los Angeles neighbor and friend Unit 731 expert Professor Sheldon Harris, represented Chinese victims of the Harbin, China secret Japan military Unit 731 biological and chemical warfare center. He won in a Tokyo court unjustly without compensation damages but did secure a court declaratory judgement determination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as responsible for spreading deadly pathogens and undertaking horrendous so-called medical experiments, cultivating anthrax, typhoid, cholera and dropping plague infected insects over Chinese villages, including Yiwu where I along with Chinese activist Wang Xuen met with victims and witnesses. A new Chinese film in this the 80th year since the war ended with the release date of the Japan invasion memorial date September 18 is 731 Biochemical Revelations with interviews of 95-year-old Hideo Shimizu who had been a young Japanese soldier assigned to Unit 731.

The last I'll mention is a 2014 China court case. I had researched and long advocated to victim groups, including the GA, that Japan's maritime fleet of death ships carrying human slave cargo should be sued and with GA pressure a case was filed in the PRC against the Mitsui ship conglomerate involving Japan's confiscation of Chinese ships used for the slave trade. A \$26 million judgement was finalized in 2012 by the China Supreme court but not paid; A Mitsui massive container ship was dramatically seized in 2014 in Shanghai under court order and the case was quickly resolved.

I've spoken generally of the hostile U.S. government position, and now I want to describe the legalistic knives, sharpened over the years after the Jeong case, that were used to execute the "Comfort Women: case. Hwang was litigated for six years in the federal trial and appellate courts, including two trips to the U.S. Supreme Court. During those years, I had meetings at the ROK Foreign Ministry in Seoul, unsuccessfully seeking its supportive filing in the case, including taking a position about the 1965 Japan treaty's absence of any sex slavery inclusion. At practically every stage of the Hwang litigation, the focus was on different facets of the myriad theories and defenses of the case, but ultimately it turned on a single, extraordinary U.S. government claim, as I'll explain.

The case was filed under the Alien Tort Statute, which grants non-U.S. citizens jurisdiction to U.S. federal courts in order to recover for torts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law of nations or a U.S. treaty" and allows non-U.S. citizens to sue other non-U.S. entities as long as th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the defendant. Defenses included whether Japan was immune under the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FSIA) and whether the commercial exception applied. The U.S. government was not a party in the case with the right of participation, but it filed a statement of intervention, its position ultimately swallowed by the Supreme Court. It argued that under the U.S. tripartite system divided between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executive branches, the judiciary must abstain—exclude, dismiss— any dispute involving foreign policy that the executive branch deems sensitive. That such matters are non-justiciable, political issues in the exclusive realm of the President. In Hwang, the U.S. government

argued that to allow the case would be judicial intrusion that could disrupt Japan's "delicate" relations with China and Korea and would impinge upon the ability of the President to conduct U.S. foreign policy. So while the 2nd World War ended with the U.S. dropping an atomic bomb on mostly innocent Hiroshima civilians, the "Comfort Women" case summarily ended, blown up by the U.S. dropping the bomb at the door to any American court by Japan's victims seeking wartime atrocity redress. (A disturbing bookend to an earlier war-related court case in which Japan and the U.S. were on the same side, then not a U.S. court but the first post-war victim case in Japan, Shimoda v Japan. Hiroshima and Nagasaki surviving A-bomb victims sued Japan for money damages based on Japan law providing that Japan's settlement of claims with the U.S. made it liable to them. Japan could win if it argued the U.S. bombings were justified-- it did and won in a decision handed down December 7, 1963, the memorial day of Japan's Pearl Harbor attack)

What happened was part of efforts beginning in the Reagan administration to flex and expand the muscle of presidential power, something at this very moment in history incredibly taken to absolutely astronomical heights by President Trump and so far acceded to by the Supreme Court, exponentially expanding presidential power under the previously fringe so-called Unitary Executive Theory that all elements of the executive branch, military, law enforcement, and more are absolutely controlled by one person, uncheckable by independent or bipartisan agencies. A power to unleash the military in American cities like President Yoon tried here when Trump was elected—suspiciously, to me, somehow coordinated with its Korean version of the Trump stop-the-steal movement and Trump's reference to the Yoon prosecution as a "purge" -now the same rhetoric he's used about the prosecution of his friend Brazil former president Bolsonaro. The news in the U.S. at this moment in history i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filed for an emergency Supreme Court hearing of an appeal court ruling the tariffs unconstitutional, and the argument is what was developed in Hwang and other cases: that courts should not interfere with anything the president does involving foreign relations, including trade and including the 50% Brazil tariff in retaliation for what is happening to Bolsonaro.

Concluding Thoughts: A Path Forward

Lastly, some concluding thoughts. First, I want to emphasize that all of the Japan's wartime victim court cases filed by me and an army of Korean, Japanese, Chinese, and American lawyers were all absolutely central, integral components of an international redress movement involving organizations, activists, political leaders, and lawyers in many countries. All these efforts, whether cases were won or lost, clearly served successfully to raise the historical and political consciousness of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 worldwide of Japan's wartime sex slavery and other atrocities.

The redress movement in the 26 years since I began in 1999 has been multinational and multifaceted. To this day, it has included the Chinese and Korean activists who organized a massive petition with 41 million signatures, blocking Japan from a U.N. Security Council seat. Korean and Chinese NGOs'

work is responsible for U.N. and multinational parliamentary resolutions demanding redress, including the U.S. Congress's 121 resolution, sponsored by Japanese American congressman Honda and what was known as the 121 Coalition—a powerful alliance of American Korean and Chinese NGOs, including the One Korea Forum led by Phyllis Kim and Jeong Yeon-Jin's Historical Justice Now, presently leader of AOK Action One Korea. Worldwide demonstrations have included my participation at Tokyo's Yasukuni Shrine, where forced conscripted Koreans, killed and buried, are to this day refused repatriation to Korean families because of the Shinto belief that soldiers after death continue to protect the emperor.

Particularly successful has been the worldwide “Comfort Women” memorial monument statue movement in Europe, Asia, the Americas, and more, which has drawn highly Japan- financed efforts to defeat it, which nonetheless failed. These monuments now stand in American cities from the Pacific to the Atlantic coasts, with the largest being the San Francisco's 3 Women Column of Strength statue, depicting Korean, Chinese, and Filipina Comfort Women. And included is a smaller one which provoked the biggest court battle— it's in the Los Angeles suburb community of Glendale in a city park and triggered Japan's right-wing groups spending millions of dollars, led by Japan “Comfort Women” denier the notorious Hideaki Kase, who shares the same bed as Holocaust deniers. I worked on this federal trial and appeal case; Japan failed, and the monument stands to this day.

When I began, I saw sincere intent on the part of DPRK officials I met, and I witnessed positive signs, including being present in the Pyongyang hotel banquet room when South Koreans were first permitted to meet relatives and being at the Seoul airport when the North Koreans departed a DPRK Air Koryo plane to meet their relatives. But today, any optimistic view is clouded by serious challenges, including the recent Japanese election right-wing win and President Trump's tilt favoring Japan, including his recent August 25 joint press conference with ROK President Lee, where he ignorantly blurted that the “Comfort Women” controversy is Korea's, not Japan's, problem—a comment similar to his that it's Ukraine, not perpetrator Russia, that's the war problem. Also, his comments that the ROK-leased U.S. military bases should be U.S. property, like Putin's view that Crimea Ukraine-leased Russian military bases should be on Russian-owned land, which he then took by military force in 2012 and annexed to Russia. And I should also add his very recent treating Koreans as mafia criminals working on a billion-dollar Hyundai plant construction compliantly responding to Trump's demand for U.S. investment. Also, and finally, Mr. Trump's again expressed love and support for Putin-controlled Kim Jong-Un and yearning for a fourth bromance visit is a harbinger of a continued divided and militarized Korea. A possible positive development is fallout from the apparent Trump/Putin trade of Ukraine for the Middle East, with Putin withdrawing support for Iran's hegemony, diminishing Iran's reliance on the DPRK as its missile and nuclear bomb testing and development partner. The DPRK might be somewhat freed up to turn its attentions to relations with the South, as was the case in the early 2000s.

These very recent Korean developments portent a doubtful future. Still, I believe that a peaceful Asia future can improve with redoubled efforts to raise historical and political consciousness, atrocity acknowledgment, and reparation demands, recognizing the long victimization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nightmare of division. And at the center is the shared horror of the so-called “Comfort Women” of Korea and other Asian countries. It’s in unity with the millions of Koreans living throughout the world, aided, I would hope, by the ROK government helping form a Global Alliance of Koreans in Diaspora, modeled on and partnered with the China diaspora Global Alliance, that should reach out and join in solidarity to work to resolve the multinational “Comfort Women” issue as an essential key to unlocking the door to a peaceful Asia future and a realization of the yearning of all Koreans worldwide for *tong il*, a yearning expressed in the famous 1932 song known in the diaspora and both North and South Korea, a song I’ve played as a musician— *Tahyangsal- I* (Living in a Foreign Country)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Transnational Sexual Slavery Litigation

Timothy Webster

Professor of Transnational Law

Western New England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Global
Citizenship and Solidarity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War Memorial, Seoul, Korea

September 26, 2025

1

Outline

- Transnational Human Rights Litigation
- Why did THRL fail comfort women in Japan, US?
- Korean decisions: turning point?
- Conclusions

2

Transnational Human Rights Litigation

- Sikkink: “justice cascade” of war redress cases in Japan (1990-2000s), now Korea (2010-2020s)
- Koh: transnational public law litigation resolves structural problems beyond litigants, enshrines values and incorporates international norms
- *With international institutions & legal experts largely on women’s side, why don’t (didn’t) courts find for comfort women plaintiffs?*

3

Why did THRL fail Comfort Women?

- Feminist concerns: law ignored/subordinated women, rarely applied to protect women
- Immunity: sovereign and foreign state
- Timeliness: lack of evidence; prescription
- Treaty Waiver: San Francisco Peace Treaty set example of waiving reparations
- Separation of Powers: redress is for executive or legislature, not the courts

4

Japanese Litigation

Plaintiff	Country	# CW	Filed	Trial	App.	SCJ	Reason for dismissal
Kim Hak-sun	Korea	8/40	1991	2001	2003	2004	Trial: dismissed under sovereign immunity Appeal: rejected sovereign immunity
Ha Sun-nyo	Korea	3/10	1992	1998	2001	2003	Trial: found for plaintiffs on limited theory Appeal: legislative discretion (SOP), but claim survived 1965 Basic Treaty
Henson	Philippines	46/46	1993	1998	2000	2003	Trial: sovereign immunity & prescription Appeal: affirmed
Song Shindo	Korea	1/1	1993	1999	2000	2003	Trial: sovereign immunity Appeal: rejected sovereign immunity
Ploeg	Netherlands	1/8	1994	1998	2001	2004	Trial: waived by Japan-Netherlands Treaty Appeal: affirmed
Li	China	4/4	1995	2001	2004	2007	Trial: sovereign immunity, prescription Appeal: claims survived 1972 Joint Communique
Guo	China	2/2	1996	2002	2005	2007	Trial: sovereign immunity, treaty waiver Appeal: waived, rejected sovereign immunity
Wan	China (Shanxi)	10/10	1998	2003	2005	2005	Trial: sovereign immunity Appeal: no waiver, rejected sovereign immunity
Gao	Taiwan	9/9	1999	2002	2004	2005	Trial: sovereign immunity, prescription Appeal: affirmed
Chen	China (Hainan)	8/8	2001	2006	2009	2010	Trial: sovereign immunity, prescription Appeal: rejected sovereign immunity

American Litigation

- Hwang Geum Joo v. Japan (D.C. Cir. 2005)
 - State immunity, despite *jus cogens* violations
 - 1951 SF Peace Treaty extinguished claims for courts in United States

Korean decisions

- 3/3 K cases vs. J gov succeed
 - Seoul Dist Ct (2021): 2016 가합 505092
 - Seoul High Ct (2023): 2021 나 2017165
 - Cheongju Dist Ct (2025): 2024 가단 52192
- Redeem courts as sites of substantive justice after Japanese and American experiences
- *Jus cogens* exception for in human rights law
- Endorse rule of law in strong terms

7

Problems with Korean decisions

- Cites only sympathetic foreign law (Italy, Brazil, Ukraine): “pick and choose” approach
- Colonialism: illegal or illegitimate?
 - Some war redress cases – 2009 다 68620 (2012) –reject Japanese law *in toto*, apply Korean law
 - CW cases still apply Japanese law of 1940s
- Clarify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8

Conclusions

- Prior courts dismissed CW cases, so Korea's favorable verdicts make strong statement about women's rights, international law and state sovereignty
- Advances global trend to reestablish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after war/colonialism
- Unlikely to bring new round of negotiations
- Cases matter more to global jurisprudence of sexual violence than remedy individual victims

What the “Comfort Women” Victims Achieved—and Failed to Achieve— in Korean Courts

Gwang-ok Ryu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Task Force on the “Comfort Women” Issue, Law Firm Yangjae)

1. When we discuss the legal struggles of the “comfort women” victims, we inevitably center our discussion on “lawsuit for compensation for damage” filed against Japan. In these cases, victims and their bereaved families sought judicial confirmation that “the establishing the comfort station system, the operation of military brothels, and the forcible mobilization of women to labor there against their will” constituted an unlawful act, and that Japan bore legal responsibility. Three such lawsuits have been filed: two in 2016 and one in 2023.
2. In treating these damages suits as emblematic of the victims’ legal struggle, we must keep one point firmly in mind: filing a claim for damages was their “last resort.” To avoid either overestimating or underestimating the outcomes, and to focus solely on the interests and intentions of the parties involved, and to situate the judgments within current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cerning colonial rule and imperialism, we must not forget that this avenue was the victims’ “final option”. The victims long hesitated to bring claims against Japan, not only because of the formidable legal barrier of state immunity, but more fundamentally because they understood that the issue should first and foremost be resolved primarily through diplomatic measures rather than judicial decisions. They waited until the very end for intergovernmental negotiations. (Ironically, this also explains why, as Barry Fisher notes, solidarity with victims’ groups in North Korea, China, Taiwan, and elsewhere remained limited.
3. Here, I’ll give a brief overview of the events that lead the victims to file a lawsuit for damages. Since the story spans more than 20 years (beginning September 5, 2002), any “brief” explanation is inevitably incomplete. I hope the audience will approach the omissions with interest and care.
4. a. Before 2000, the primary arena of the “comfort women” struggle was Japan itself. The victims confronted Japanese society and government directly, supported by civil society actors in both Korea and Japan. They demanded apologies and compensation from Japan through lawsuits and other means. Regarding apologies, government officials expressed remorse, but when it came to compensation, the Japanese government clearly stated that “all issues were resolved under the 1965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Korea’s position

was ambivalent: while it did not explicitly endorse Japan's view, it also refrained from clearly stating that claims by "comfort women" and other colonial-era victims were not encompassed by the Agreement.

- b. On September 5, 2002, 99 victims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cluding victims of "comfort women", submitted a freedom of information request to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emanding disclosure of negotiation records of the 1952–1965 Japan–Korea talks. Their goal was to determine, from those records, whether claims by victims—including the "comfort women"—had indeed been waived under the Agreement. The Ministry rejected the request, citing the risk of causing "serious harm to the national interest."
 - c. On October 11, 2002, an administrative lawsuit was filed to overturn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fusal to disclose information. On February 13, 2004, the court ruled that "some of the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 d. After the court ruled to disclose information, the government chose to disclose all documents, not just a selection. The government also clarified that the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s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had "settled financial and civil claims and obligations", but issues like the "comfort women" problem could not be considered fully resolved by the agreement alone.
5. The Korean government thus acknowledged that the 1965 Agreement had not resolved the "comfort women" issue and that Japan continued to bear legal responsibility. Nevertheless, as a practical policy it announced: "to avoid futile dispute with Japan, we will not demand material compensation." In response, 109 "comfort women" victims filed a constitutional complaint, arguing that the government's refusal to act infringed their constitution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if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of the 1965 Agreement existed, Korea had a duty to seek resolution through diplomatic efforts or other means. The complaint was filed on July 5, 2006 and the decision was rendered on August 30, 2011. That such a commonsense conclusion required more than five years under the name of the judiciary is telling. Of the 109 victims who filed, only 64 lived to hear the Court's decision.
6. The events following the 2011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require careful examination of each one. The Korean government's 2011 request for consultation with Japan, the victims' petition for arbitration against Japan in 2013, and the diplomatic director-level talks between Korea and Japan starting in 2014, among others, still lack a clear understanding of the facts and social evaluation. In particular, I believe it is important to clarify how these events after 2011, collectively known as the "comfort women" agreement, ultimately led to the joint statement issued during the Korea-Japan Foreign Ministers' Meeting press conference on December 28, 2015. Personally,

I follow these events with deep concern, convinced that “tragic history inevitably repeats itself,” though I do not pursue this point further here.

7. a. After the South Korea-Japan Agreement on ‘Comfort Women’ on December 28, 2015, the victims and organizations supporting these victims filed lawsuits questioning the contents of this agreement, lawsuits questioning its fundamental nature, and lawsuits seeking accountability. The first took the form of two disclosure lawsuits; the second, a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he third, an action for damages (with the Korean government as the defendant).
 - b. Both disclosure lawsuit prevailed at first instance, but one case reversed on appeal and at Supreme Courts (Supreme Court 2019두41324). The other case also won at the first trial but, given the prevailing political context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was ultimately withheld from disclosure due to designation as presidential records.
 - c.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2015 agreement was just a political deal without “legal binding force” and that it did not affect the victims’ individual claims for damages.
 - d. Although the initial trial in the lawsuit for damages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was unsuccessful, the case was settled through mediation on appeal. As part of the agreement, the Korean government acknowledged that “the 2015 South Korea-Japan Agreement on ‘Comfort Women’ violated the principle of victim-centeredness and recognized the mental harm it caused to comfort women. The agreement also stated that the 2015 South Korea-Japan Agreement on ‘Comfort Women’ could not provide a genuine solution to the issue. Moving forward, the Korean government pledged to continue working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o restore the dignity and honor of the victims”.
 - e. All these lawsuits were filed in early 2016 and continued until 2023.
8. The final lawsuits were lawsuit for compensation for damage filed directly against Japan. These sought judicial recognition that victims’ individual claims existed and that Japan, as the perpetrator, bore legal liability.
 9. Only after exhausting the 2002 disclosure suits, the 2006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2011 decision, the 2013 mediation, the post-2015 disclosure suits,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nd the damages suits against Korea did the victims bring these claims against Japan. It was not only the legal and social difficulties of suing Japan in Korean courts, but also the deeper recognition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was not one that could be resolved by judicial determination alone.
 - 10 I believe both of the presenters’ remarks also address the main concerns. The primary reason

why the issue of “comfort women” has remained unresolved for nearly 40 years since it was first raised is related to Japan's current international position. Globally, Japan is not criticized as a war criminal country but is instead seen as a victim of war, and it also wields significant influence over neighboring countries as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Although the precise origins are unclear, the 'anti-Japan frame' has consistently caused difficulties for victims and supporting organizations regarding the “comfort women” issue. When victims declare that “Japan is the perpetrator of this incident,” they also feel compelled to add, “We are not anti-Japan.” Victims have had to consider the potential backlash within Korean society before fully sharing their suffering in court. The courts, too, could not ignore this environment.

11. Since the issue of “comfort women” victims was first raised, the victims have persistently demanded apologies and compensation from Japan. Japan has adhered to the form of a “final and irreversible resolution” rather than offering apologies and compensation for the “comfort women” issue. This ongoing effort by the Japanese government even led to an attempt at a “final and irreversible resolution” in 2015. However, we believe that a “final” resolution to the “comfort women” issue means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ally reflects on and remembers the victims’ experiences over time. An “irreversible” resolution indicates establishing as an international norm that any act of violating women's human rights through violence, whether during war or in other situations, is a crime that breaches the rule of law, and such crimes must be punished and legally held accountable. A “resolution” that is not genuinely “final and irreversible” but simply a means to “silence” should no longer be pursued.
12. In line with the two presenters’ assessments, I must remain skeptical about whether we have progressed in terms of “resolution” of the issue of “comfort women” victims. However, at least the victims’ attitude toward accepting this issue has matured, and their perspective on viewing this problem has expanded, which I believe we should evaluate ourselves (since no one else will do it for us).
 - a. As noted repeatedly, what the victims have consistently demanded from Japan, the perpetrator, is “apology and compensation.” Japan has expected that a one-time apology and monetary payment would resolve this issue. The problem was that Japan’s superficial apologies or monetary payments were merely “face-saving,” but through the process of seeking resolution, the victims realized that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comfort women issue begins with “apology and compensation,” which leads to “memory and education.”
 - b. In Korea, victims themselves filed lawsuits to reclaim their rights. The rights they sought were not pre-existing; they established the basis and filled in the content of rights they had never possessed before, proclaiming, “This is our right.” As many people know, the “comfort women” victim issue involves colonial rule and imperialism, women’s human rights, state violence, and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Furthermore, although this problem began on the small land of the Korean Peninsula, it has persisted throughout history and continues today. Through various lawsuits in Japan, the U.S., and Korea, efforts have been made to address universal human problems.

- c.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doctrine, decades of litigation have contributed to the construction of a “jurisprudence of the victim.” Traditional doctrines—state immunity, non-liability for acts during armed conflict, statutes of limitation, rules on state compensation—served as obstacles to victims’ claims. Some of the victims’ arguments were accepted, others rejected, but even those rejected have resurfaced in later cases, with the potential to crystallize into new doctrines.
13. The past forty years have been harsh for the victims. In 2016, when I filed one of these lawsuits, there were 11 surviving plaintiffs. By the time judgment was rendered in 2023, only one remained. Nationwide, only six registered survivors remain alive today. I’m struck by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which has evolved from the years of suffering endured by the victims. I feel a sense of responsibility for the situation, and I hope that the foundation and groundwork laid by the victims will grow into a lasting solution through the collective efforts of those gathered her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Global Citizenship and Solidarity

Echoes Across Borders:
From Voices of Pain to the
Language of Peace



Session 2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Justice: From Memory to Norms

From a National Issue to a Global Discourse on Women's Rights

Chair

Heisoo Shin | Chairperson, Korea Center for United Nations Human Rights Policy

Presentation

The Creation and Utilization of Opportunity Structures for Transnational Activism on WWII Sexual Slavery in Asia

Mary M. McCarthy |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Drake University

Presentation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Evidence from the Global 'Comfort Women' Movement

Celina Hollmichel | Ph.D. Candidate in Political Science,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Discussion

Sihyun Cho | Director, Research Institute for Colonial Justice

A photograph of pink cherry blossoms in bloom, with some flowers in sharp focus and others blurred in the background.

THE CREATION AND UTILIZATION OF OPPORTUNITY STRUCTURES FOR TRANSNATIONAL ACTIVISM ON WORLD WAR II SEXUAL SLAVERY IN ASIA

Mary M. McCarthy, Ph.D., Drake University

Transnational Memory Activism

The Actors

- Transnational agents

The Structures

- Normative change
- The plight of women and girls in conflict-areas

The Processes

- Below and above the nation-state
- Grassroots organization, solidarity and collaboration
- Appeals to the United Nations and foreign governments (both local and national)

The Outcomes

- Creating a counternarrative to the state

The Who: Transnational Agents

- Memory entrepreneurs
 - the agents who pursue the creation of collective or public memory

The Who: Transnational Agents

- Memory entrepreneurs
 - the agents who pursue the creation of collective or public memory
 - “feminist humanitarians” (Soh ([2001] 2015))
 - “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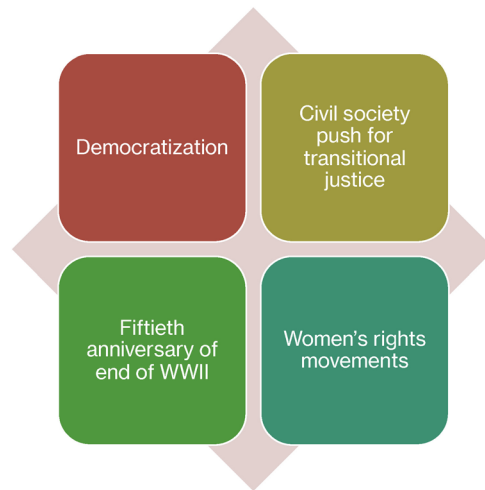
Advocacy Goals

- Change
- Recognition
- Compensation
- Government Accountability
- Honor, dignity

Barriers or Impediments to Achieve those Goals

- “Masculinist sexism”
- Racism
- Lack of support from international law
- No government interested in historical justice for these women
- Historical narrative creation as the purview of the state
- Weak civil societies
- Masculinist discourse

The Structure: The Opening of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Opportunity Structures



The Structure: The Opening of International and Transnational Opportunity Structures

“Women’s rights as human rights”

Recognition of the specific vulnerabilities of women and girls in conflict areas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98)

End of the Cold War

Precedent of UN role in mental health policy changes in Japan

The Process

-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UNCHR)
- UNCHR Sub- Commission Working Group on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
- UNCHR Sub-Commission for the Prevention of Discrimination and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 1996 Coomaraswamy report
- 1998 McDougall report

The Outcomes

“that the practice of ‘comfort women’ should be considered a clear case of sexual slavery and a slavery-like practice in accordance with the approach adopted by releva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bodies and mechanisms” (Coomaraswamy Report 1996).

“the Japanese Government remains liable for grave violations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violations that amount in their totality to crimes against humanity” (McDougall Report 1998).

Changed the discourse at the United Nations and beyond

Narratives that Transcend Borders

- Sierp and Wüstenberg discuss “the construction of narratives that have the power to transcend national boundaries and the role of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actors in driving those narratives to (un)successful representation” (2015: 324).
- Human rights frame
- Human stories

Narratives that Transcend Borders

- Phyllis Kim of Comfort Women Action for Redress & Education (CARE) argues that “the reason why [the comfort women issue] is so powerful is not only because of the merit of the case but also the activism of the grandmas is so moving.”

Narratives that Transcend Borders

- Phyllis Kim of Comfort Women Action for Redress & Education (CARE) argues that “the reason why [the comfort women issue] is so powerful is not only because of the merit of the case but also the activism of the grandmas is so moving.”
- “The hearing was held in a large room, but they could not accommodate everybody. There was spillover into several rooms, and they had to broadcast the hearing there. Deniers spoke with Grandma Lee there. They said something so outrageous as Grandma Lee is lying. She is sitting right there. So outrageous, so heartbreaking. Supervisor [Eric] Mar he almost cried, he did cry. Another member – David Campos – when it was his turn, he said he loves his friends in the Japanese American community and appreciates what people had to say, but he said, shame on you, shame on you, three times, to the deniers. The resolution passed unanimously. That is the power of the grandmas.”

Creation and Maintenance of Transnational Memory Spaces



Documentary films



Feature films and TV
dramas



Statues and
memorials

Continuing Challenges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STATUES & SOCIAL MOVEMENT FRAMING

EVIDENCE FROM THE GLOBAL 'COMFORT WOMEN' MOVEMENT

Celina Hollmichel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Introduction

- What role do physical artifacts, such as statues, play in the framing process of social movements?
- Statues as conversation anchors, meaning-makers, collective memory holders



Peace Statue 'Ari' in Berlin, Germany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Movement Beginnings

- First "Comfort Women" came forward in the 1990s
- Continuously contested by Japanese Government & Groups
- Core Movement in ROK; Wednesday Demonstrations
- 2011: Statue revealed for 1000th Wednesday Demonstration



Original Peace Statue in Seoul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Previous Literature

- **Framing/Frame Resonance** (Goodwin et al., 2000; Benford & Snow, 2000; McEntire et al., 2015)
- **Tactical repertoires** employed by movement agents (Keck & Sikkink, 1998; Tsutsui, 2017)
- **Emotions**; transforming objects into specific **narratives**, imbuing discourse spaces with **meaning** (Goodwin et al., 2000; Jasper, 2011; Simmons, 2014; Snow et al., 2006)
- **Interpretations of past events** in alignment with their objectives (Jo, 2022; Power, 2009; Wilke, 2013)
- Previous cases:
 - 'Rhodes Must Fall' movement (Knudsen & Andersen, 2019; Sunnemark & Thörn, 2021)
 - Civil Rights, BLM Movement (Knudsen & Andersen, 2019; Pelak, 2015)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Methodology

- Process Tracing, Activist Interviews
- Theory-building
- Case Selection:
 - US (Glendale)
 - Germany (Berlin)
 - Australia (Sydney; shadow case)



'Comfort Women' Museum and Mobile Statue 'Yong-i' in Berlin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USA, Germany, and Austr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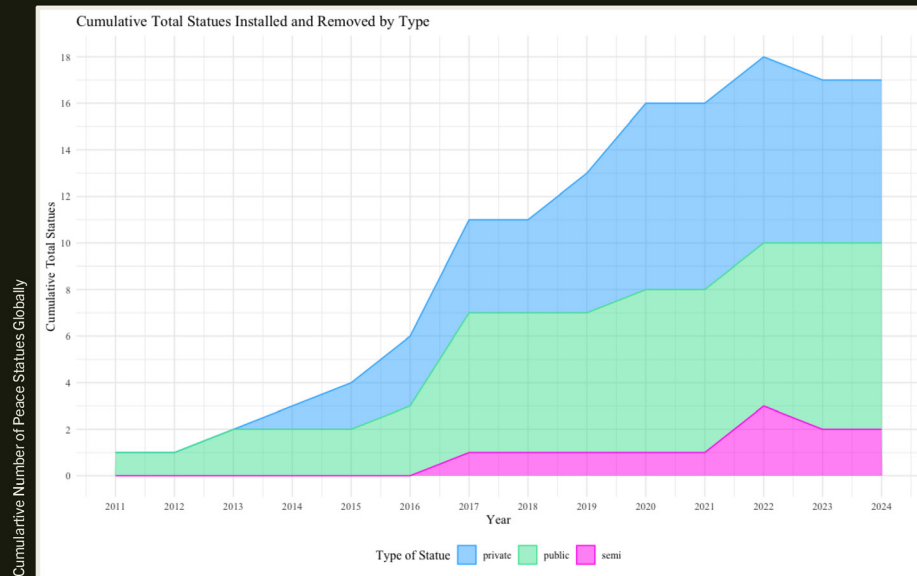
- Statues that are outside of "involved" areas
- Near to identical to the original design
- (First) public locations outside of South Korea



Peace Statue in Frankfurt,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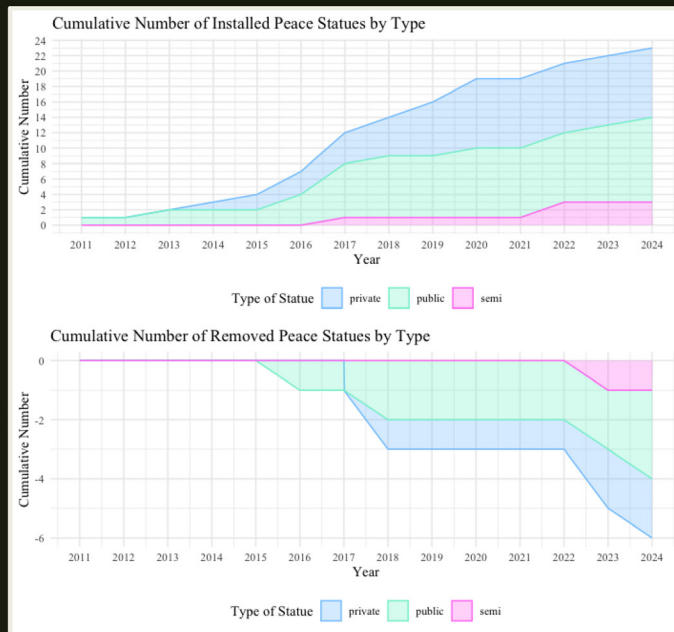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Going Global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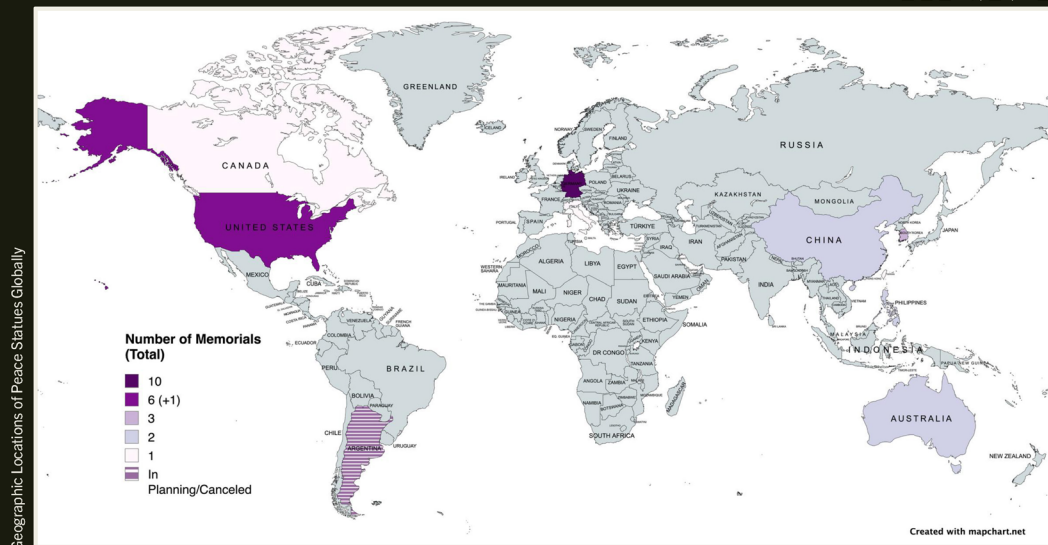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Going Global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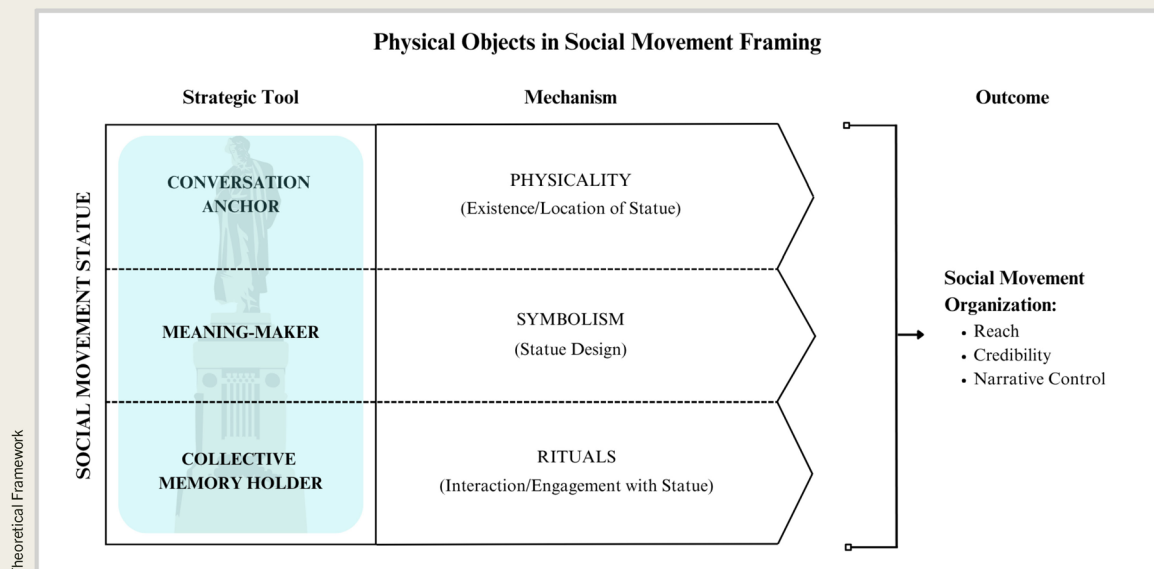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The Peace Statue Worldwide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Conversation Anchor

- "The statue in this public space– it now **belongs to everyone**. [...] In the beginning, people asked us, can we do something at the statue? But by now, they're all doing different things by themselves." (N. Han, 2024)
- "placing the memorial on public property would **symbolize both legitimacy and public support**." (P. Kim, 2024)
- "it was important to have an **open area in front of the statue** for events and gatherings to commemorate the installation and remember the victims" (P. Kim, 2024)



German Activist Collecting Signatures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Conversation Anch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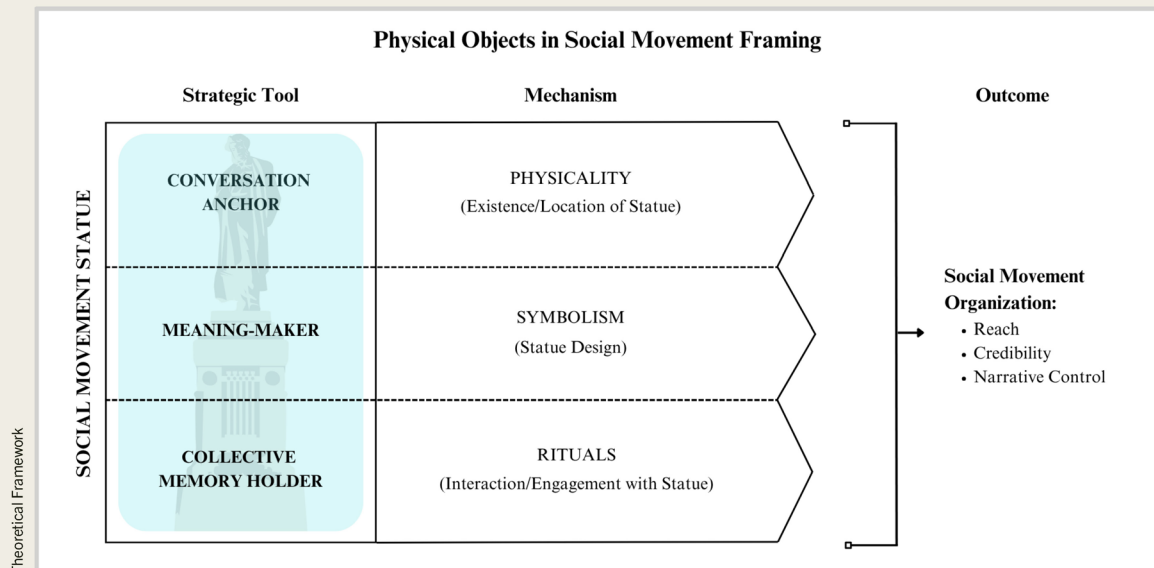
- They went to the church and tried to get the church to order me to take it down, and I said 'no.' And I kept just saying **the only way it will move is from the back of the church to the front**. And eventually we moved it to the front of the church. [Then] a **few Japanese heavyweights came to see me** [...] and roughed me up a bit. But I just said 'no.' [...] And really what I'm saying is: it's not anti-Japanese. It's not anti-American, it's not 'anti-.' None of the stuff I do is anti-any nation. **It's anti-abuse of people by those in power**. That's all it's about. (W. D. Crews, 2024)



"I'm Supposed to Leave" Poster Against Removal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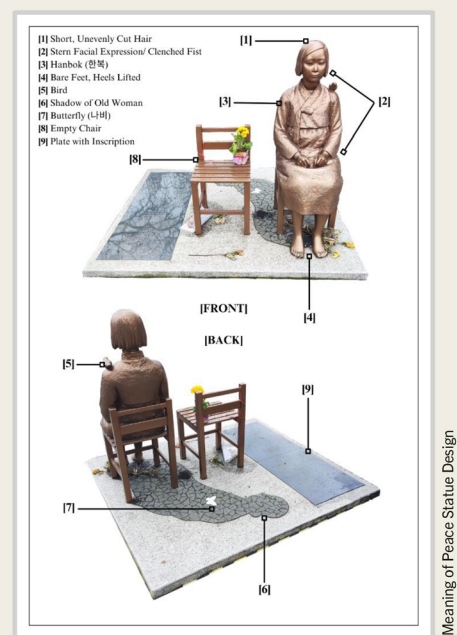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Meaning-Maker

- "The girl's face, posture and the symbolism of her clenched fists, unsettled feet, bird on her shoulder, the shadow in the shape of a Grandma, and the empty chair all **served as powerful, artistic representations of what happened.**" (P. Kim, 2024)
- "the girl **represents** all of [the victims]" (P. Kim, 2024)
- "the City Council [...] **requested** that we bring the **Peace Monument** instead of the [plaque] we had prepared." (Kim, 2024)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Meaning-Ma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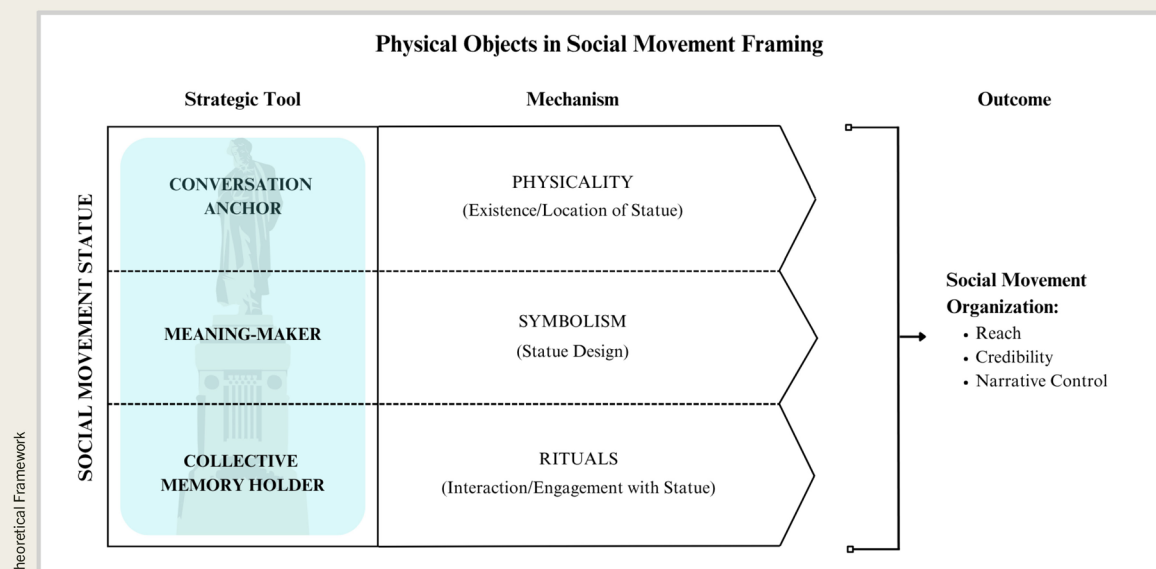


Activists and Mobile Statue 'Yong-i' In Front of the District Hall in Berlin

- "It really reflects the reality in which the statue is beautiful; that **the rape of these women is not visible** [...] if [the women] don't talk about it. They can keep it hidden, because it is a wound that cannot be shown. [...] The reaction was really very positive." (N. Han, 2024)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Collective Memory Holder



Choir Performance at the Statue 'Ari' in Berl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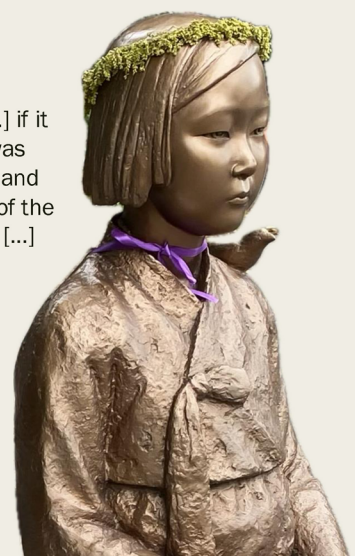
- "Teachers bring students to the site to **teach them** about the history behind the memorial. Art groups [...] and dance groups had **performances** there. A classical ensemble [...] held a small **concert** in front of the statue, and local students have also performed music there. [Locals] regularly visit the site to **clean up** the area, and people often **leave flowers and other tokens of remembrance**." (P. Kim, 2024)
- "The grandmas always do [a **vigil**] **every second Wednesday** of the month. [...] And they enjoy it. There's always a local group, [...] and **they have their ritual every week**." (N. Han, 2024)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Collective Memory Holder

- When the statue was at the back of the church [...] homeless people, [...] if it got really cold, they would **put a hat on [the statue] and a scarf**, or if it was raining... [...] They would **do the most loving things to the girl**, you know, and that was so moving. [...] I think people like it being there. Because a lot of the people I work with are people in real need and they recognize suffering. [...] **We're all suffering together**. (W. D. Crews, 2024)



Celina Hollmichel | Statues and Social Movement Framing

2025 일본군 '위안부' 문제국제 컨퍼런스

Conclusion

- Statues as:
 - *Conversation Anchors (Physicality/Location)*
 - *Meaning-Maker (Symbolism/Design)*
 - *Collective Memory (Rituals/Engagement)*
- Implications for Policy & Future Research:
 - *Framing Strategies*
 - *Contestation Efforts*
 - *Memory Politics*
 - *Art & Social Movements/Political Activism*
 - *Sufficient vs. Necessary*



Statue 'Ari' with Poster against Removal

Session2 -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Justice: From Memory to Norms

Discussion Paper

Cho, Sihyun

As the two presentations have shown,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has unfolded on an international stage, and alongside the Statue of Peace movement, diverse activities have expanded to deepen understanding of the issue. These include testimony and archival research, historiography and discourse, as well as artistic and cultural interventions such as literature, film, and documentary. Increasing attention has also been paid to the testimonies of third-party Allied soldiers, prisoner-of-war interrogation records, perpetrator testimonies, and war criminals' written confessions. In this way, the subject of wartime violence against women has been further illuminated, while the dimension of crimes committed in colonial contexts has also come to the fore. The impact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and movement can thus be regarded as comprehensive, touching upon multiple fields and perspectives.

Nonetheless, the fact remains that the truth of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the illegality of Japan's acts and the attendant responsibility for acknowledgment and apology—has yet to be realized. Moreover, with the emergence of denialists within Korean society, the issue of the validity of the so-called 'comfort women' agreement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in 2015, which was pointed out by various UN human rights bodies as a violation of victims' rights, continues to follow a zigzag pattern even up to the current Korean government.

These circumstances do not appear to be due to a lack of norms, whether domestic or international law. Japan's actions against the victimized women constituted crimes such as rape, kidnapping, and human trafficking under domestic law in any country, even within the constraints of colonialism, and corresponded to wrongful acts or torts that would generate obligations for restitution and compensation. These domestic laws were reinforced by international law, and the following international treaties prohibited acts that were committed against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victims even during peacetime:

- 1904 International Agreement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
- 1910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White Slave Traffic
- 1921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 1926 Convention to Suppress the Slave Trade and Slavery
- 1930 Convention concerning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LO Convention No. 29)

In addition to these, princip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uch as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during wartime already existed.

Although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avoided the colonial issue, there were also activities to monitor the observance of these international norms through the League of Nations,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civil movements. For example, the Advisory Committee on the Traffic of Women and Children, a subsidiary body of the League of Nations, conducted on-site investigations of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in various Chinese cities, colonial Korea, and Japan in 1930, and concluded that Japan's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was in fact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regarding human trafficking.¹⁾ It is well established facts that Japan, which had invaded Manchuria at the time, eventually withdrew from the League of Nations on March 27, 1933, and that precisely during this period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or 'comfort station' system came to stand on its own as a separate type.

After World War II ended, the Allied nations conducted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and war crimes trials by individual Allied n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based on war crimes investigation activities. However, these trials bypassed criminal acts against Japanese Military Sex Slavery despite knowing of their existence, except for a few cases involving wartime rape and forced prostitution/sex trafficking. Similarly, the Japanese Military Sex Slavery issue was never addressed in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which sought to restore peaceful relations with Japan that had initiated aggressive war, nor in subsequent individual diplomatic normalization and settlements of issues related to reparations with victimized countries.

These legal aspects have been addressed by the UN, ILO, and also at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for the Trial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²⁾ held in Tokyo, Japan in December 2000, and Japan's responsibility continues to be clearly and repeatedly confirmed to this day.

The fact that law is not being observed—in other words, questioning and narrowing the gap between the existence of norms and the power those norms have in reality—can be called the debt of justice that the Japanese Military Sex Slavery issue raises, and it is also the reason why we cannot be satisfied with the movement's success thus far. Asking more concretely how such norms came to be, why they were not observed, what reasons now the current government has for avoiding the pursuit of legal responsibility, and what must be done to universally practice the appeal that these norms should be observed even during war, would also take issue with our current order and the future to come.

1) League of Nations, Commission of Enquiry into Traffic in Women and Children to the East, Report to the Council, Geneva, 1932, p. 96. 小野沢あかね, 「近代日本社会と公娼制度 - 民衆史と国際関係史の視点から -」, 吉川弘文館, 2010, 183頁.

2)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for the Trial of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Case No. PT-2000-1-T, The Prosecutors and the Peoples of the Asia-Pacific Region v. Hirohito et al., Judgement, 4 Dec. 2001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Global Citizenship and Solidarity

Echoes Across Borders:
From Voices of Pain to the
Language of Peace



Session 3

Shifting to the Present: Wartime Sexual Violence and Sustainable Solidarity

Reframing the “Comfort Women” Issue as Contemporary Gender-Based Violence and
Envisioning Future Solidarities

Chair

Eun-Shil Kim | Professor Emeritus,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Ewha Womans University

Presentati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institutionalized gender violence in peacetime

Caroline Peta Norma | Senior Lecturer, School of Global, Urban and Social Studies,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University

Discussion

Ajung Sim | Independent Research Activist

Discussion

Nozomi Tanaka | Ph.D. Candidate,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wha Womans University

Shifting to the Present: Wartime Sexual Violence and Sustainable Solidarity

Exploring how the "comfort women" issue has evolved from a historical problem to one of ongo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future of solidar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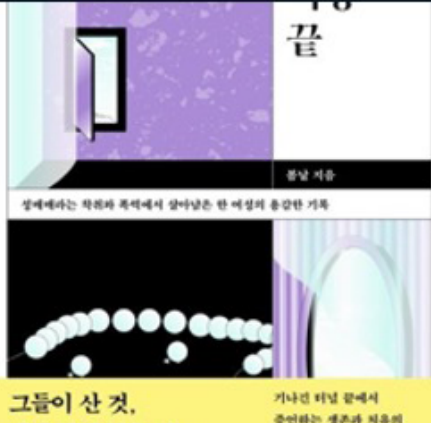
Caroline Norma
caroline.norma@rmit.edu.au

‘Sustainable solidarity’ in South Korea

- The South Korea-Japan December 2015 Agreement provoked action by young women in support of the grandmothers, and against sexual violence
- This preceded the global #MeToo movement, and was soon followed on May 17, 2016 by an incident in which a 23-year-old woman was stabbed to death by a man in a public unisex washroom near the Gangnam train station
- The ‘comfort women’ issue came to be more closely associated with problem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Sustainable solidarity' in South Korea



- *Molka* protests against spy-cam filming and pornography (2018)
- "Throw off the corset" anti-beauty movement (2018)
- #SchoolMeToo marches (late 2018)
- Burning Sun scandal (2019)
- Nth Room case (2020)
- (Preceded by successful action against prostitution in 2004)
- Publication of a prostitution survivor's memoir in 2019 (later translated into Japanese and English)
- Successful civil case by historical survivors of prostitution around US military bases in South Korea (2022)

Japanese women: missing victims, then and now

- The first published account of a wartime military prostitution survivor is almost never referred to in histories of the 'comfort women'
- As a 17-year-old from Kagoshima, in 1944 "Miwako" was trafficked on a Japanese navy ship to the Ogasawara Islands for prostitution by Japanese troops
- Tomita Kunihiro ed, *Senjou ianfu: Ajisaka Miwako shuki* [Battlefield comfort women: The memoir of Ajisaka Miwako], Fuji Shobō, 1953



'Sustainable solidarity' in Japan?

- The South Korea-Japan December 2015 Agreement provoked criticism of oppositional feminists from leftist liberals that they were obstructing postwar reconciliation effort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 The Tokyo-based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Research Action Center (VAWW-RAC) declared in May 2017 that we must "understand schemes that continue to organise women for sexual violence in the present...[as] a means of addressing the problem of the Japanese military's 'comfort women' scheme of the past"
- A modest #MeToo wave hit Japan in 2018 with the publication of Shiori Ito's *Black Box* in late 2017
- In 2022, feminists successfully campaigned for a law restricting pornography producers in their procurement of women for filming



Solidarity Among Survivors Past and Present

- We must "[c]learly recognis[e] and acknowledge[e] the victimisation of [prostituted] Japanese 'comfort women'" as a means of "overcoming the gender prejudice that afflicts the 'comfort women' issue." [Nishino]
- "I really think we need to think more broadly about the context in which young women today might enter the sex industry—what is behind their decisions, their contexts of poverty, and the society they live in which sees prostitution as natural and inevitable." [Onozawa]



Small Wins Against the Industry Behind Female Sexual Slavery

- Restrictions placed on pornographers procuring victims (2022)
- COVID-19 subsidies denied sex venue operators approved in supreme court judgement (2025)
- Restrictions placed on host club pimps (2025)
- Lower house liberal MPs urged parliament to consider amending Japan's *Prostitution Prevention Act* to enact penalties for prostitution customers (who are already criminalized in the Act) (April 2025)



The New 'Comfort Women' of Contemporary Japan

- Japanese women increasingly sex trafficked abroad
- Growing networks of hosts and scouts who coordinate to domestically pimp thousands of Japanese women and girls
- Growing numbers of foreign male sex tourists in Japan, and sex venue operators who see these sex-buyers as lucrative customers



Conclusion

- The widespread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of Japanese victims today should ring warning bells for women and girls in East Asia, just as it did before the Second World War
- Women and girls in East Asia face 'war' and 'colonisation' of a kind in the form of gender-based conflict over sexual dominion
- Fewer and fewer of the grandmothers are with us now to fight for justice, but it is in their name that we can build the East Asian feminist solidarity that will ensure patriarchal history never repeats itself



Revisit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from a Contemporary Perspective: Proposing Connections beyond Abolition Feminism and the Anti-Prostitution Movement

(Discussion Paper on Caroline Norma’s Presentation)

Ajung Sim (Independent Research Activist)

1. Prologue

The presenter argues that “the history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ust be examined in connection with the histories of other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cluding those in peacetime.” She further notes that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as evolved from a historical problem into a contemporary issue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his shift suggests a new direction for solidarity, link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with other movements such as #MeToo and anti-prostitution movements that unfolded in Korea and Japan, which have emerged since 2015. She also observes that “as the number of surviving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dwindles, historical consciousness within the movement has faded, while a sense of contemporary solidarity has grown stronger.” This does not imply that historical consciousness is no longer important, but rather calls for a re-examination of the historical layers and ruptures that allow for contemporary solidarity to be framed through the lens of present-day issues.

In today’s discussion, I would like to clarify that within the context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and its discourse, feminism^{3/4} is infused with critiques of colonialism, empire, and contemporary consciousness^{3/4} is not in a binary confrontation with the issue itself. On the contrary, it is an inseparable part of any discussion surrounding the issue. Furthermore, I would like to propose the possibility of other connections beyond the presenter’s suggestion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should develop solidarity with the contemporary anti-prostitution movement. It is crucial to explore how various layers of contemporary issues—many of which have not yet been fully recognized—intersect with or diverge from the history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rough these connections, I aim to explore multiple directions fo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including the academic movement,¹⁾ to cross boundaries and expand.

1) The term academic movement may sound unfamiliar. Can research itself be considered a form of movement? If so, what do we mean by movement in this context? In Korean society,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typically evokes Wednesday demonstrations, the Statue of Peace, and victim support activities. While these activities are undeniably important, I want to emphasize that a movement should be a field that various agents can claim as their own, operating on multiple levels. For example, the meticulous search for archival materials, the collective reading and discovery of insights, the passionate debates that shape shared language and concepts, the creation of public forums to share these processes and outcomes, and the effort to link this problem-consciousness to contemporary struggles for women’s safety—all of these can also be viewed as sites of movement. It is in this sense that I use the term academic movement. For researchers, the desk is no less than a fierce battleground. Therefore, rather than separating research from activism or researchers from activists, we must explore ways for these different domains to intersect, listen to one another, and mutually influence each other.

2. Who Are Japanese “Comfort Women”?²⁾: The 2000 Women’s Tribunal and the 1970s WomenLib Movement’s Failure to Address the Suffering of Women from the Perpetrator State

The presenter raises a concern about the exclusion of advocacy for Japanese “Comfort Women” from the broader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which gained momentum following Kim Hak-sun’s 1991 testimony, particularly within support activism in Japan. She identifies a key cause as the prevailing social perception in Japan, which, by questioning some victims’ prior involvement in prostitution, seeks to deny them recognition as victims.

When Kim Hak-sun’s testimony brought the issue to public attention, scholars like Suzuki Yuko and Song Yeon-ok argued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was a continuation of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Scholars from a women’s history perspective, including Fujime Yuki and Yamashita Yeong Ae, also contributed to this line of inquiry. However, as the postwar compensation movement gained momentum, their perspective was marginalized, creating an atmosphere in which they became reluctant to speak out.³⁾

Reviewing the Women’s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on Japan’s Military Sexual Slavery (hereafter, the 2000 Women’s Tribunal)⁴⁾ held in Tokyo from December 8 to 12, Song Yeon-ok notes that when she proposed recognizing Japanese “Comfort Women” as victims as well, she

2) When referring to Japanese “Comfort Women,” I wish to avoid conjuring a monolithic Japanese identity. The same caution applies to the term women from the perpetrator nation. For instance, it is difficult to simply categorize Okinawan women, who were trapped in brothels and comfort stations, as merely Japanese or as women from the perpetrator state. This caution acknowledges that the experiences of victims differ across occupied, colonial, and imperial contexts. Recognizing these differences is not an attempt to rank or hierarchize suffering.

Ji-eun Lee focuses on methods of governance and argues that “an intersectional perspective does not compare whether Japanese ‘Comfort Women’ suffered less than women in colonies or occupied territories, or vice versa; rather, we must recall that provoking comparison and competition among minorities is a favored technique of those in power.” She further observes that “when Japanese ‘Comfort Women’ were hailed as nationals, we see scenes overlap with those in which military camp town women were derided as yanggalbo (a slur roughly meaning Western whores) yet simultaneously exalted as dollar-earning patriots. In both cases, the moment marginalized women receive national recognition is precisely when the state is exploiting and using them. From this perspective, dividing, stratifying, and setting women into competition along national or ethnic lines reveals a method of governance” (Ji-eun Lee, “Beyond the Imperial Divide-and-Rule,” *Pressian*, May 1, 2021).

Addressing the need for care when comparing the suffering of colonized and non-colonized women, Yang Hyunah argues that coloniality was essential to the stable and systematic oper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She contends that “colonized Joseon women were the easiest to recruit, transport, and manage,” and that “the wide distribution of military comfort stations across the Asia-Pacific was inseparable from the existence of colonized regions such as Joseon and Taiwan.” At the same time, she points out that “this analysis is not meant to trivialize or grade the suffering of non-colonized women, nor other forms of sexual violence, including comfort stations, distinct from long-term, systematized methods.” These experiences, she notes, “must be recognized on their own terms as sexual violence with distinct characteristics” (Yang Hyunah, *Reproductive Violence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no. 65, 2020, pp. 45–46).

3) Fujime Yuki, “Research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s Women’s History and the Problem of the Invisibility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mmemorating the Memorial Day for the “Comfort Women” Victims of the Imperial Japanese Army: Nationalism and the Mobilization of Sexual Labor, Continuities and Ruptures—State Systems of Sexual Control and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ug 11, 2023, p. 166.

<https://www.hflib.kr/#/search/detail/226777?offset=10>

4) The 2000 Women’s Tribunal, though a people’s tribunal without legal enforceability, held the Japanese government and Emperor Hirohito accountable for their war crimes and contributed to raising international awareness regard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North and South Korea submitted a joint indictment, and prosecutorial teams from China, Taiwan, the Philippines, Indonesia, the Netherlands, Malaysia, and East Timor brought cases against the system. Sixty-four surviving victims and two former Imperial Japanese Army soldiers testified, and legal scholars and historians appeared as expert witnesses.

encountered resistance and objections within the secretariat.⁵⁾ On this point, Fujime Yuki observes that, while Japanese civil society was largely supportive of convening the tribunal, there was a general reluctance to raise the suffering of Japanese victims, as attention focused almost exclusively on Japan's perpetration.⁶⁾

Ultimately, the indictment included the suffering of Japanese "Comfort Women." This is particularly significant as it marked the first attempt to frame the system as a war crime and to bring charges against Emperor Hirohito and the Japanese government.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not one Japanese "Comfort Women" victim was able to, or willing to, testify. Fujime Yuki emphasizes, this absence should not be read as evidence of the lightness of their suffering; rather, it underscores the distinct weight of the complex oppressions they were forced to bear."⁷⁾

On the third day of the tribunal, when Fujime Yuki testified as one of the expert witnesses for the Japanese prosecution team regarding Japanese "Comfort Women," the following exchange took place:

Japanese Prosecution Team: "Japanese 'Comfort Women' had already been part of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before becoming 'Comfort Women.' In your view, does that mean such women are not victims of sexual violence by the military?"

*Fujime Yuki: "No—they, too, are victims. The violence and domination inflicted under th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are not determined by a victim's prior history. From the outset, Japan's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was itself profoundly violent and, moreover, militaristic."*⁸⁾

After the 2000 Women's Tribunal, the Promotion of Resolution for Issues concerning Victims of Wartime Sexual Coercion Act (Bill) was submitted multiple times in Japan. Yet even this bill excluded Japanese women from eligibility for compensation, because it defined victims as "persons other than those who had a registered domicile (honseki) under the former Family Register Act." Part of the background to this exclusion was, on the one hand, a shift in historical consciousness that centered the harms suffered in Asia within the frame of colonial rule and war crimes, and, on the other hand, the fact that no investigation⁹⁾ was conducted into the victimization of Japanese "Comfort Women."¹⁰⁾

The challenge of discussing the suffering of women from the perpetrator state can be seen Women-

5) Song Yeon-ok, "The Trajectory and Prospects of Research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Japan: A Feminist and Postcolonial Perspective," in Proceeding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Research Association (Second Half, 2025): The Trajectory and Prospects of Research 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Research Network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ugust 22, 2025), pp. 6-7.

6) Fujime Yuki, op. cit., p. 166.

7) Fujime Yuki, "The Indictment of Japanese 'Comfort Women' and Its Significance," Dangdae Bipyeong, (Itreebook, 2001), p. 199.

8) See the 2000 Women's Tribunal video on the Fights for Justice website (translation by the author): <https://archives.wam-peace.org/wt/all-schedule>. Ajung Sim, "Women's Transnational Solidarity through the Women's People's Tribunal: On the Chain of Testimony and Witnessing," in Ichirō Tomiyama et al., How to Resist Violenc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Language, Memory, and Solidarity, (Research Institut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2025), pp. 226-228.

9) Yoshikawa Haruko, a Communist Party member who had been involved with the bill, later formed a research team in 2016, regretting that Japanese "Comfort Women" had not been included in the bill. Using a list of women left by a military doctor to his niece as a lead, the team began investigating Japanese "Comfort Women." Their findings were published in a book titled 日本人「慰安婦」を忘れない (鴨川書房, 2003).

10)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Research Action Center, Japanese "Comfort Women": Patriotism and Human Trafficking (Nonhyeong, 2021), p. 5.

Lib Movement¹¹⁾ of the 1970s. Amid the global trend triggered by the May 1968 events in France, the logic of the perpetrator, emerging from anti-Vietnam War protests, became intertwined with the logic of self-negation in the All-Campus Joint Struggle Committees (Zenkyōtō). Femal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Zenkyōtō rebelled against male dominance within the movement, highlighting gender discrimination, which led to the rise of the 1970s WomenLib Movement in Japan. The Women's Fighting Group (ぐるーぷ闘うおんな), established in 1970,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women's rights movement in Japan, leading efforts such as co-parenting advocacy, opposition to stricter abortion laws, and resistance to the Immigration Control Act.

Within the broader movement that foregrounded the subjectivity of the Japanese as perpetrators, women in the WomenLib Movement also sought to reflect on their own position as women of the perpetrator nation, Japan. To this end, they invoked the phrase Korean women forced into "Comfort Women" in their leaflets. Yet, even in those leaflets and posters, there is no mention anywhere of Japanese "Comfort Women." The perpetrator's logic carries the risk of obscuring the selfhood of those who were also oppressed. It overlooks the fact that the population of a perpetrator nation is not homogeneous. Even among Japanese women, experiences of the war were vastly different, a complexity that is often ignored.

Meanwhile, although Japanese "Comfort Women" were not a primary focus of the Asian Women's Conference Fighting Against Invasion=Discrimination, an organization formed in September 1970, records indicate that the group did hold a critical view of the issue, even if limited. Furthermore, the Conference stated that "we must not forget that women from the lowest social strata were mobilized as 'Comfort Women' for the U.S. troops in the postwar period." The group also pointed out that women who served the occupying forces in the RAA¹²⁾ "recruited marginalized women from Japan and women from oppressed nations to be 'Comfort Women.'"¹³⁾ However, these points alone do not suggest that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the Japanese "Comfort Women" was conducted, nor that concrete activism or reflection on the issue took place within Japan's feminist movements in the 1970s.

3. The True Essence of Licensed Prostitution That Cannot Be Conveyed by the Terms Private Sexual Exploitation and Private Sexual Slavery

The presenter argues that "the women who endured the horrors of the war were subjected to a fundamentalist and extreme form of men's rights to exploit women," and that "the organization enslaving these women originated from Japan." This, she states, is deeply connected to "the devotion of Japanese men" who, over the course of early-modern, modern, and Shogunate Japan, maintained institutions that mobilized young women and girls into prostitution.

In her book, *The Japanese Comfort Women and Sexual Slavery during the China and Pacific Wars*,

11) The WomenLib Movement is a portmanteau of the words "Women" and "Liberation" from the Women's Liberation Movement, referring to a specific period of activism in the late 1960s to early 1970s.

12) Acronym for 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

13) 木下直子, 慰安婦問題の言説空間, (勉誠出版, 2017), pp. 152–53.

the presenter explains that the book was written in part “to challenge the military reductionism often found among feminist scholars.” She argues that “military reductionism claims that wartime sexual violence stems fundamentally from militarism,” and that “this perspective overlooks the fact that the system of comfort stations is intrinsically tied to violence and abuse against women before and after the war.”¹⁴⁾ Furthermore, in her book, the presenter emphasizes her intention to “highlight the connections betwee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system and private sexual exploitation in various aspects,” and to “replace the term ‘military sexual slavery’ with ‘private sexual slavery’ to more accurately describe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from the victims’ perspective.”¹⁵⁾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adily agree with the presenter’s argument. By replacing licensed prostitution with private sexual exploitation and military sexual slavery with private sexual slavery, the very essence of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is obscured: namely, the regulation and control of sex by the state (Imperial Japan). Modern licensed prostitution developed in connection with Western militarism and colonialism. It expanded across empires and their colonies through various wars in the 19th century, such as the Napoleonic Wars, the Crimean War, the Boer Wars, the Opium Wars, and the Philippine-American War. With the opening of its ports in the late 19th century, Japan adopted European-derived systems and modernized the existing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This system was then imposed in its colonies—Joseon and Taiwan—and also in Hokkaido under the guise of development and Okinawa under the pretext of disposition. History clearly shows that women were mobilized wherever the Japanese military was stationed, not only in the colonies and occupied territories but also in Japan itself.

Hayashi Yoko argues that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was initially modernized for the military, and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rooted in colonialism, did not suddenly emerge as a full-scale war broke out in Asia. She claims that the origin of this tragedy can be traced back to the modern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itself.¹⁶⁾ While I agree with the presenter’s emphasis on the continuity of violence against women spanning the pre-war, wartime, and post-war periods, highlighting only male brokers, male ruling elites, and sex buyers—symbolized by the devotion of Japanese men or civilians—in this process makes it difficult to reveal the essence of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Meanwhile, it is crucial to thoroughly document the involvement of brokers from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in the conscription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concept of “Comfort” was shared not only during the war but also before and after, among men holding security authority, including cabinet members, police officers, and sex traffickers. The conscription process and the targets of mobilization are directly aligned with the methods used for comfort stations during wartime. The presenter highlights private sexual exploitation during peacetime to underscore these aspects. However, by doing so, the presenter risks redirecting the narrative in a way that shifts public

14) Caroline Norma, “Comfort Women” Are Women (Yeoldabooks, 2020), p. 350. The original title is *The Japanese Comfort Women and Sexual Slavery during the China and Pacific Wars*.

15) Caroline Norma, *ibid.*, p. 46.

16) Hayashi Yoko, *性を管理する帝国*, (不二出版, 2017), pp. 9–10.

responsibility, represented by the military, the state, and police authority, onto private brokers, thus allowing those in power to evade accountability. The process of meticulously examining the brokers' activities can reveal their collusion they had established with the families or village communities of the victimized women. It also allows us to discern how they operated in coordination with the military, government, or police through their records, thereby enabling us to hold the military, government, police, and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specifically accountable.

I agree with the presenter's argument that underscores social complicity, which posits that the military and the state were able to recruit "Comfort Women" by using procurers during wartime. This was possible due to a deeply rooted practice in Japanese society of coercing women into prostitution—whether through advance payments or deception—coupled with the lack of awareness about this practice as a crime. However, at the same time, the very essence of licensed prostitution, the state's regulation and control of sex, must not be obscured.

4. Is Abolition Feminism the Best? A Call for Reassessment by Examining the Limits of Japan's Prostitution Abolition Movement

According to the presenter, since the 2015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the related movement and discourse evolved with the #MeToo movement and the anti-prostitution movement in Japan in 2017.¹⁷⁾ To quote her, "historical consciousness in the movement has faded while a sense of contemporary solidarity has grown stronger." However, one important point to consider as these movements intersect is the fatal limitations of Japan's past prostitution abolition movement.

Fujime criticized that scholars of modern Japanese history tend to overestimate the effectiveness of Japan's prostitution abolition movement. The idea that "Japan in the 1930s was on its way to prostitution abolition" is quickly debunked by the fact that comfort stations were established and operated during this period, functioning as wartime licensed prostitution even as the abolition movement gained ground and many prefectures in modern Japan banned prostitution. This is significant because activists of the prostitution abolition movement never strongly opposed comfort stations. Furthermore,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at Japan's prostitution abolition movement spread to occupied territories or colonies.

The activists of the movement viewed both geisha and prostitutes as women in a disgraceful trade and considered those working overseas as obstacles to the expansion of the Great Japanese Empire. Yet, they were consistently indifferent to the social injustices that left these women with no other options.¹⁸⁾ Whil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policy was in place, Japanese prostitution abolition organizations promoted the Purity-for-the-Nation Movement. Their focus was largely on preventing venereal diseases within the military, and while they praised the American Plan as an

17) The presentation does not provide a specific explanation of how Japan's #MeToo movement, which began in 2017, merged with the pre-existing anti-prostitution and anti-sexual exploitation movements after the 2015 Korea-Japan "Comfort Women" agreement. Since the present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modern solidarity i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and suggests a future direction for that solidarity, a more detailed explanation of the point of the connections between the two movements after 2015 seems necessary.

18) Fujime Yuki, *The History of Sexuality*, (Saminbooks, 2024), p. 409.

ideal national policy for disease prevention, they remained silent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policy.¹⁹⁾

In *The General Strike of the Brothels*,²⁰⁾ Yuhei Yanbe sheds light on the mass escapes of the 1920s and the strikes of the 1930s that geisha and prostitutes in Japanese brothels staged to improve their conditions. He also raises a concern that, as the situation progressed, the demands of the women themselves were pushed into the background. He points out that the moment geisha and prostitutes raised their demands and launched a strike, their claims received attention. However, soon after, allies with strong social standing stepped to the forefront and began acting as spokespersons. As the women sought external cooperation for their strikes in the 1930s, a divergence arose between their demands and those of the prostitution abolition and labor movements. The allies lacked an understanding of the women’s aim to expose the corruption of the brothel keepers in order to improve their situation. Afterwards, the prostitutes changed their initial goal of improving labor conditions to closing the business.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for the prostitutes to make a different choice.

As seen in the resolute slogan of the prostitution abolition movement, “Only voluntary closure is the way forward,” the labor disputes initiated by women in brothels to demand improved working conditions were not recognized as legitimate labor movements at the time. This was due to the perception that working in a brothel was inherently something to be condemned. However, even with these limitations, the women in the brothels were able to briefly become agents of the dispute. This was made possible by their ability to obtain information from outside the brothel, plan their lives after their contracts expired, and discuss voluntary closure with their colleagues.²¹⁾

19) The American Plan was a policy during World War I in which the U.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cause of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lay with women, arrested individuals suspected of being sex workers within a 5-mile radius of military barracks and suspended their civil rights (Fujime Yuki, pp. 400–01). The civil rights that could be suspended through this plan applied only to women suspected of working in what was deemed a disgraceful trade. This was not a punishment but had the characteristics of preventive detention. This policy is reminiscent of Article 7, Paragraph 1 of the former Prostitution Act in Korea, which stated that the state would guide and protect those with a habitual tendency to engage in prostitution, as well as women for whom there is a clear concern of engaging in prostitution due to their environment or sexual conduct. In response to arguments by historical revisionists such as Ikuhiko Hata, who claim that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were simply public prostitutes and that the state bears no responsibility since licensed prostitution was legal at the time, supporter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have put forth a counter-narrative: their forced recruitment was illegal, even at the time, and therefore the state is responsible. Researchers like Yoshiaki Yoshimi, who maintain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movement and influence its discourse, have proposed three criteria to distinguish between licensed prostitution and the “Comfort Women” system: 1. Whether brother-closing regulations existed. 2. Whether the applicable law was civil or wartime law. 3. Whether the time period was peacetime or wartime (For a discussion of these points, see the articles by Song Yeon-ok and Fujime Yuki in the previously cited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proceedings).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se criteria were effectively applied not only to colonial women but also to Japanese women involved in disgraceful trade. If researchers like Yoshiaki Yoshimi have since changed their views, they must publicly explain the reason for this change, identify the research that influenced them, and clarify which arguments they have adopted. Furthermore, it is essential for them to retract or acknowledge the limitations of the three criteria they previously proposed to distinguish between “Comfort Women” and licensed prostitution, doing so through a public forum or publication. Researchers who influence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have an even greater responsibility to explain these turning point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mention that limitations to debating illegality in discussions like this. Both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and the comfort stations were operated under multiple laws that effectively legalized sexual violence. Therefore, rather than focusing on whether the acts were illegal, a deeper discussion is needed from a perspective that problematizes this legalized state violence.

20) Yuhei Yanbe, *The General Strike of the Brothels: On the Border of Liberation and Labor*, translated by Itada as a community for Translators (The Center for Women’s Culture and Theory, forthcoming), originally published as 遊郭のストライキ—女性たちの二十世紀序説 (共和国, 2015).

21) The rights movement for sex workers/sex laborers can be linked to various social movements because it is a form of resistance against multiple layers of discrimination and hatred. In this context, the solidarity statement by Chacha activist Yuwon, which calls for the enactment of an anti-discrimination law, converges with the words of an anonymous prostitute who made three submissions in Japan a century ago, offering us profound insights.

Contemporary surveys of prostitutes show that even the women themselves did not accept working in brothels as positive labor. Despite using the tool of a strike, one cannot find any newspaper articles from that time in which geisha and prostitutes defined themselves as laborers. However, Yuhei Yanbe argues that for women who had to continue in a disgraceful trade for survival, their condemnation of brothel keepers' corruption and their objections to exploitation were a process toward liberation through which they gained the right to live by their own actions, even if this did not immediately lead to direct liberation from brothels or prostitution.²²⁾

Many Korean women who had been mobilized overseas returned after liberation. However, there were also those who could not or did not return. Citing contemporary newspaper articles, Song Yeon-ok pointed out that repatriation alone could not save these women, as many of those with the experience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ere unable to support themselves and had to resort to prostitution. The Korean Women Alliance (hereafter, the Alliance) worked to abolish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The Alliance did not view this issue as separate from the broader social structure and waged a livelihood protection struggle from a new perspective focused on restoring the human rights of the individuals involved, as well as from a class-based perspective. The Alliance's base was primarily housewives, laborers, and farmers. They demanded the liberation of not only licensed prostitution but also unlicensed prostitution, supported the livelihoods of women who had left the business, and addressed issues such as sexual violence by U.S. soldiers at the same level as laborers' and housewives' rights to a livelihood. However, due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s suppression of left-wing movements, key members of the Alliance were arrested or went to North Korea in 1947, which effectively suspended their activities. The prostitution abolition movement was largely taken over by elite, right-wing women who had collaborated with colonial policies. The Alliance was renamed the Women's Bureau, and a women's police force was established. For those who actively embraced the modern "wise mother and good wife" ideology, women who engaged in prostitution for a living were not seen as victims of a socio-structural issue but as subjects in need of rehabilitation.²³⁾

When viewed in the context of the livelihood protection struggle waged by the Alliance, which is

There are many different reasons why people become sex workers, including migration status, disability, illness, educational background, poverty, age, sexual identity, criminal and protective custody records, and family structure. These are the very conditions that anti-discrimination laws stipulate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For example, some migrant women face harassment and lose their jobs after their country of origin and language are revealed, so they resort to sex work. Some women experiencing homelessness turn to sex work to secure the immediate resources they need to survive, such as food and shelter. Because the minimum wage doesn't apply to people with disabilities, some disabled women enter the sex industry to earn more than the minimum wage. Some female adolescents engage in compensated dating to become independent from violent families. In other words, sex workers already exist as a result of discrimination. (Yu Won, a member of the Sex Worker Liberation Action Movement, Scarlet ChaCha, from a press conference statement on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Law, May 23, 2022, <https://sexworkproject.tistory.com/14>). A normal person could never even begin to imagine the minds of us prostitutes. The reason I entered this world is the result of a significant disadvantage I had to endure. The world calls us prostitutes, doesn't truly understand us, treats us differently, and looks at us with cold eyes. This is all a result of suffering and anguish. It is not simply the result of frivolity or immorality. How grateful we should be that the prostitution abolition movement has become so active. It is truly the voice of God's salvation for us all. I hope that, along with improvements to our treatment, there will also be a place for our education. We must not miss this opportunity. I don't believe this is the time to only borrow your strength. Though we are weak, I believe we must also rise up. (A prostitute from the Kita brothel district in Hiroasaki, 1926), 山家悠平, *ibid.*, p. 122.

22) 山家悠平, *ibid.*, pp. 230-231.

23) Song Yeon-ok,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Seen in Prostitution Abolition: From the Colonial Period to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The Military and Sexual Violence: 20th-Century Korean Peninsula*, edited by Song Yeon-ok and Young Kim, translated by Park Hae-soon, (Seonin Publishing, 2012), pp. 298, 307.

linked to Japan's anti-prostitution movement, the presenter's mention of "winning a lawsuit in 2025 to confirm the constitutionality of unpaid COVID-19 subsidies for brothel operators," cited among the various examples listed as an achievement of Japan's anti-sex work movement with connections to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movement, is debatable.

The subsidy system was implemented in Japan as an economic measur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No-storefront sex businesses in the Kansai region argued that their exclusion from the state-provided Sustainability Subsidy and Rent Support Subsidy schemes, which were intended for businesses affected by the pandemic, violated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equality under the law. On June 16, 2025, Japan's Supreme Court ruled that "their exclusion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that guarantees equality under the law," with one of the five judges dissenting.²⁴⁾

In 2019, Japan's National Police Agency announced that 31,956 establishments were registered as special sex-related businesses, with approximately 300,000 workers identified. It is estimated that, if third parties such as staff, drivers, and managers are included, the number exceeds 500,000.²⁵⁾ So, what does it mean that an industry employing as many as 500,000 people was excluded from the COVID-19 business subsidies? While some argue for distinguishing between the owners and the women when distributing subsidies, the reality is that the situation is not so easily separated.

For example, if the housing that some establishments provided were to be eliminated, a significant number of people would be directly impacted, including their basic living arrangements. Even considering only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related industries, this is a matter of a vast housing problem. Moreover, we must also consider that the sex industry, which has often been viewed merely as commercial sex or sexual exploitation, is a site where various issues—housing rights, health rights,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domestic violence (including runaway youth), drug use, and infectious diseases—are organically intertwined. In a related trial held in 2022, in response to claims from businesses and operators that their exclusion from the subsidy violated the constitution's guarantee of equality under the law and that they be recognized as members of society, the Japanese government countered by stating, "The sex industry is inherently unsound. It cannot gain the understanding of the public." It is at this very point that I propose we shift the critical lens, which has until now been focused on operators and sex buyers, onto the state. What are the social implications when a state publicly declares the sex industry to be "inherently unsound?"

On June 1, less than two months had passed after the trial, a 19-year-old male killed a woman in her 30s, who was working at a dispatch-style sex work business in a motel in Tachikawa City. When asked about his motive, he stated, "It does not matter what happens to people who do sex work. They should die and it wouldn't matter (even if they do die.)"²⁶⁾

24) Presiding Judge Mitsuko Miyagawa, one of the five judges, issued a dissenting opinion, arguing that excluding non-storefront sex businesses was unconstitutional. She stated that such exclusion creates the impression that sex business operators and their workers are socially inferior, and there is a risk of this perception becoming ingrained.

"コロナ給付金'無店舗型の性風俗業は対象外'は合憲 最高裁," NHK, June 16, 2025, <https://www3.nhk.or.jp/news/html/20250616/k10014836631000.html>

25) まいもく (148), "性風俗業者が給付金を受け取れないのはなぜか?" 毎日新聞, <https://www.youtube.com/watch?v=dWGnnWJb36I> (Last accessed: June 16, 2022).

26) Ajung Sim, "After The Rebellious Prostitute, What Shall We Do and with Whom?" The Center for Women's Culture and Theory, no. 46, 2022, pp. 159–60.

Regarding the trial in April and the subsequent murder in June, Japanese queer theorist Shimizu Akiko says, “The Japanese government’s public declaration of a discriminatory view of the sex industry can cultivate prejudice and create a breeding ground for hate crimes. The state’s statement that the sex industry is ‘inherently unsound’ and the statement from the Tachikawa killer, ‘people who do sex work should die,’ are directly connected.”²⁷⁾ This is different from explaining a causal relationship. It is a critique of the state’s role in producing and propelling hatred toward the industry, a problem that is also connected to a long history of discrimination against prostitutes.

In discussions related to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and comfort station system, the priority should be on women’s safety and survival. Our discussions today must aim to restore and secure the dignity of the women involved. Given the women’s lives cannot be fully protected from the sex industry without securing other policies to improve unstable lives—including those addressing poverty, borders, freedom of movement, labor rights, reproductive rights, health rights, access to support services, the right to work without the threat of deportation, employment opportunities, better welfare, affordable and stable housing, and support for single mothers³⁴a cautious approach is needed when positioning the Supreme Court’s constitutional ruling as an achievement of the anti-prostitution movement, even if any model is legalized.

5. Possible Connections beyond the Anti-prostitution Movement

While discussions surrounding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remain a topic of debate in Japan, there is still a lack of a public forum for serious discussion of these issues in Korea.²⁸⁾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militarism, imperialism, colonialism, capitalism, patriarchy, classism, and the ideology of the normal family are at the root of the social and economic vulnerability in which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victims were placed. It is also possible to view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from the perspective of violence inflicted on reproductive capacity and autonomy.

Yang Hyunah proposed the Korean term ‘재생산폭력’ as a translation of the term reproductive violence, which refers to violence inflicted on reproductive capacity and autonomy. She pointed out that while gender-based violence is primarily understood as sexual violence mediated by sexuality, reproductive violence is a significant, though relatively overlooked, aspect of gender violence.²⁹⁾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and the abortion ban were implemented concurrently. These modern Japanese policies of sexual regulation and control aimed to sustain the marriage system and reinforce heteronormativity, with brothels and comfort stations also functioning as facilities that

27) 清水晶子, “セックスワークをフェミニズムはどう捉えるか,” *VOGUEと学ぶフェミニズム* Vol.14, Mar 18, 2022, <https://www.vogue.co.jp/change/article/feminism-les-son-vol14>. (Last accessed: June 9, 2022).

28) Related discussions include: Song Yeon-ok, “Imperial Japan’s War of Aggression and Sexual Politics: Militarism Penetrating ‘Comfort Women’ and Licensed Prostitution,” *Historical Research*, no. 52, (Historical Research Institute, 2025); the forthcoming translation of 宋連, “植民地「公娼制」に帝の性政治をみる—釜山から上海まで,” (有志社, 2023); Park Jeong-ae, “Why Compare licensed Prostitution and ‘Comfort Women’: History as Political Strife, Sustained Violence,” “Comfort Women,” the Responsibility for More Debate: Beyond the Antagonistic Coexistence of Nationalism and Hate Speech, (Humanist, 2024); Refer to 吉川 春子, 日本人慰安婦を忘れない. (鴨川書房, 2023).

29) Yang Hyunah, *ibid.*, pp 34–35.

upheld this ideology. Therefore, when we address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from a feminist perspective, we can also discuss critiques of the marriage system, the ideology of the normal family, enforced masculinity, and heteronormativity. Along with the abortion ban, the abortion orders imposed on Japanese women who were victims of sexual violence while returning from Manchuria after the war also deserve close attention. While some of these terminations of pregnancy were performed at the victims' own will, the terminations resulting from rape by the Soviet military, which were labeled as illegal pregnancies, also represented a state plan to control women's bodies. This was intertwined with the overlapping pressures of family ideology and the compulsive obsession with preserving masculinity. Furthermore, there was intervention from male executives of the Manchurian Pioneer Corps, who had established comfort stations for the Soviet military. Many interviews demonstrate that mixed-race children born from illegal pregnancies were perceived by the state as living evidence of defeat, by men as invaders who threatened their masculinity, by women as a stigma of sexual violence, and by families as an obstacle to reintegration. The common perception that sexual violence is an inevitable tragedy of war hides the multiple layers and perpetrators of the violence and obstructs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stigma that the victims endured.³⁰⁾

One record shows that, amid the turmoil caused by the Soviet Union's entry into the war just before Japan's defeat, Japanese residents in Manchuria grew anxious that Japanese women would be raped once Soviet troops arrived. In order to protect Japanese women and girls, some urged sex workers to form a so-called female commando unit of women who would sacrifice themselves. According to the account, 13 women had no choice but to volunteer.³¹⁾ The fact that there is very little commentary on the complicity of Japanese civilians, who, in the course of sexual violence perpetrated by Soviet troops, openly displayed discrimination against prostitutes and treated them as a breakwater for sex, is deeply troubling. In this context, we must not overlook the reality that there were experiences that cannot be subsumed under the sweeping rhetoric of the victimization of women from the perpetrator nation, Japan.

When discussing wartime sexual violence, violence against men and LGBTQI+ individuals is still not explicitly addressed in the form of declarations or statements by the UNSC. Building on the presenter's argument that peacetime discrimination and sexual exploitation of women carry over into periods of war and its aftermath,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discrimination and hostility LGBTQI+ individuals face, in the form of homophobia and transphobia during peacetime, can render them even more vulnerable once armed conflict breaks out. If conflicts were to occur in countries where these individuals are subject to discrimination, and in some cases where their very existence is not legally or morally recognized, they would also face the risk of corrective rape. In other words, if these individuals deviate from the dominant and authoritative norms in a given society, sexual violence may be used as a means of enforcing compliance with those norms. In regions where the very existence of LGBTQI+ individuals is not legally or morally recognized, survivors of sexual

30) Ajung Sim, "Women's Transnational Solidarity as Seen through Women's Private Tribunals: Focusing on the 'Chain of Witnessing and Testimony,'" *ibid.*, p. 246.

31) Nishino Rumiko, "The Treat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the 'Breakwater of Sex Theory,'" Japanese "Comfort Women": Patriotism and Human Trafficking, Violence against Women in War Research Action Center, translated by Itada as a community for Translators, (Nonhyeong, 2021), pp. 148–49.

violence often cannot disclose their experiences even to their families, report them to the police, or access appropriate medical care.³²⁾ In the broader context of critiques of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as a form of state control and regulation of sex, and in conjunction with militarism,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deeper discussion and more active solidarity on this issue amid many ongoing wars today.

South Korea participated in the Vietnam War. In 2018, a people's tribunal was convened amid growing efforts to uncover the truth about the civilian massacres committed by South Korean troops. The tribunal, officially titled the People's Tribunal on War Crimes by South Korean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People's Tribunal on Vietnam War Crimes), was modeled after the 2000 Women's Tribunal. It took place in Seoul, the capital of the perpetrator nation, with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defendant. Two survivors, both named Nguyen Thi Thanh, testified as witnesses. Despite the fact that both witnesses were women, the issue of wartime sexual violence was not addressed. Due to this limitation, the summary ruling of the People's Tribunal on Vietnam War Crimes³³⁾ included a statement acknowledging that sexual violence had not been discussed during the proceedings, and it recommended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matter.³⁴⁾ To this day, in-depth domestic research on wartime sexual violence committed by South Korean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remains scarce.

According to the archives of the Korea-Vietnam Peace Foundation,³⁵⁾ an organization focused on documenting civilian massacres committed by South Korean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data on massacres also sheds light on wartime sexual violence. The records identify "19 incidents in which the number and name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could be confirmed." These incidents involved 79 victims in total, including 11 whose names were known. Additionally, 27 incidents mention sexual violence, though they do not provide the number or names of the victims. This record primarily focuses on civilian massacres, suggesting that the actual number of sexual violence cases is likely much higher.³⁶⁾ Although not widely known, official statistics released by the Headquarters of the ROK Forces in Vietnam already document various acts of violence committed by Korean troops during the Vietnam War, including battlefield rape. In addition, there is a ruling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³⁷⁾

32) 上野友也, "戦場のLGBT—戦時性暴力の被害と国連安全保障理事会における対立," 平和研究, 59巻, 2023, pp. 5-6.

33) The full text of the order is as follows:

[Order]

2. It is recommended that the defendant, the Republic of Korea, conduct a thorough investigation into whether any illegal acts, including murder, injury, assault, and sexual violence, were committed against Vietnamese civilians by the defendant's armed forces in the Vietnam region between 1964 and 1973 (from the summary judgment rendered on April 22, 2018). Refer to the official blog of the Preparatory Committee for the People's Peace Tribunal: <https://blog.naver.com/tribunal4peace>.

34) Ajung Sim, "Beyond the Single Issue of Civilian Massacres, The Vietnam War for Those Who Did Not Experience It: Expansion of the Concept of Ecocide and the Possibility of Mourning That Is Not Tied to the State," *History and Responsibility*, vol. 16, (Center for Historical Truth and Justice, 2025).

35) Korea-Vietnam Peace Foundation Official Website: <https://www.kovietpeace.org/b/archive03/6715>

36) Park Ju-yeon, "'Wartime Sexual Violence' Continues, and So Must Solidarity," *Feminist Journal Ilda*, Mar 8, 2022, <https://www.ildaro.com/9293>

37) *Instigation of Rape in a War Zone, Quasi-Rape Indecency, Bodily Injury, Rape in a War Zone, Attempted Rape in a War Zone* [Supreme Court Decision 70Do449, Apr 28, 1970]

[Original Judgment]

1st Instance: General Military Court, Headquarters of the Republic of Korea Forces in Vietnam

2nd Instance: High Military Cour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Decision 69Do-gun37, decided on December 27, 1969.

that confirmed guilt and handed down punishment in a case of battlefield rape committed by South Korean soldiers during the war.

I would also like to add that female refugee applicants who are survivors of wartime sexual violence from war or civil war, as well as individuals who have been persecuted for being LGBTQ+ and have fled their home countries, are living in South Korean society. However, these reasons are not treated as standalone grounds for refugee recognition in Korea.

Closely examining the people and systems that have sustained the sexual exploitation and enslavement of women is called for to understand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networks in which the comfort stations operated as an institution. This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by traversing feminism, militarism, colonialism, and imperialism. I propose that we ask delicate questions that traverse between historical records and contemporary sites of activism. This is to confront, albeit belatedly, the reality of the licensed prostitution system led by the Japanese Empire, which laid a foundation for Japanese “Comfort Women” and comfort stations. The various facets of the actors who participated in these systems must be examined as well. Furthermore, while seeking to plan a public forum where people with different perspectives can gather for fierce debate, we must figure out how to connect this history with the gender-based violence that women today are experiencing and how to effectively problematize it.

[Order]

The appeals are all dismissed. Of the pre-judgment detention days following the appeals, 95 days for each shall be included in their respective sentences.

[Reasoning]

(Omitted) The act corresponding to the crime of “Rape in a war zone,” as stipulated in Article 84, Paragraph 1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should be reasonably interpreted as not only the act of raping a woman in a war zone by means of violence or intimidation but also the act of having sexual intercourse with a woman in a war zone by taking advantage of her mental or physical incapacitation or inability to resist. Therefore, the original judgment, which took the same view, is justified, and there is no legal misunderstanding regarding the crime of rape in a war zone. (Omitted) Since all arguments lack merit, all appeals are dismissed. Applying Article 437 of the Military Court Act and Article 57 of the Military Criminal Law, the court, with the unanimous opinion of the participating judges, renders its judgment as ordered.

[Supreme Court Justices]

Min Mun-gi (Presiding), Hong Sun-yeop, Yang Hoe-gyeong, Lee Yeong-seop, Ju Jae-hwang.

International Conference on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ssue : Global Citizenship and Solidarity

Session3 – Shifting to the Present: Wartime Sexual Violence and Sustainable Solidarity

Discussion Paper

Nozomi Tanaka (Ph.D. Candidate, Ewha Womans University)

Introduction

I have been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War and U.S. military bases in Japan as my research topic.

My research began when I first encountered the issue of U.S. military bases in Okinawa. This prompted me to investigate the U.S. military bases in Kanagawa Prefecture, where I was born and raised. My doctoral dissertation examines the transformation of U.S. military bases in Japan during the Korean War era, specifically how these bases evolved from temporary stations for occupation forces in a defeated nation to semi-permanent bases. In particular, my research centers on how local communities around these bases were affected by this process.

To explore this, I conducted field surveys at U.S. military bases across Japan, including Fukuoka, Kure, Sasebo, Yokosuka, and Okinawa. During these investigations, I encountered references to various women associated with these bases, such as housemaids, base workers, and “pangpang girls.” These experiences deepened my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S. military bases and the lives of Japanese women in the postwar period. This understanding has influenced my participation as a discussant in Professor Caroline Norma’s paper presentation. Although this topic is not my area of expertise, I gained valuable insights from the paper.

This presentation is significant in that it not only addresses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as a historical event but also connects it to the sex industry and structures of women’s oppression present in contemporary Japanese and Korean societies. A particularly valuable aspect of the presentation is its broad perspective, which links the “Comfort Women” issue with contemporary problems such as sexual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raising awareness of the continuity between past and present issues. The presenter emphasizes that the “Comfort Women” issue is not confined to history, stating, “The ‘Comfort Women’ issue has evolved from a historical problem to one of contemporary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hereby linking it to women’s human rights concerns.

Main Discussion

First, examining the trends in Korean society, as the presenter pointed out, the “Comfort Women”

issue has become a driving force behind new women's movements, connecting with events such as the Gangnam Station murder, the Molka protests, and the Nth Room case. While this analysis linking the past to the present is a valuable contribution, I believe that a more specific comparison of the differences in historical contexts and conditions would greatly enhance understanding. It would be helpful to provide a clearer explanation of whether the "Comfort Women" system and the modern sex industry should be viewed as forms of the same structural oppression or whether they manifest differently under varying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Second, the presenter emphasized the expansion of victim categories. Nishino pointed out that "we must clearly recognize and acknowledge the victimization of prostituted Japanese 'Comfort Women.'" I believe this is a crucial awareness, as it seeks to include not only Japanese victims but also women in U.S. military camp towns and workers in the modern sex industry. If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among these groups were explained more specifically, it would highlight the multi-layered nature of their victimization experiences and significantly broaden the scope of research in this area.

Third, the presentation emphasized the concept of "sustainable solidarity," which I consider the most important concept in this presentation and one that I have come to understand more deeply. As the presenter pointed out, it is true that women's solidarity has developed in different forms in both Korea and Japan. However, the key challenge moving forward will be to explore how this solidarity can move beyond symbolic support to bring about real institutional change.

There are notable differences in historical percep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To my knowledge, researchers from institutions such as Ochanomizu University and Ewha Womans University's Korean Women's Institute have conducted joint research on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over the years. However, due to differing perspectives on history and women's movements, this research has not been sustained. I believe that the differences in how Japan and Korea view their colonial experiences are a significant factor in this.

Despite these challenges, it is also true that significant social solidarity has been achieved between Korea and Japan concerning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I believe further research is needed that goes beyond citizen movements and postwar compensation efforts, expanding to include government-level institutional actions, shifts in social awareness, and concrete examples of international solidarity.

Conclusion

The presentation concludes with the statement, "The widespread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of Japanese victims today should ring warning bells for women and girls in East Asia, just as it did before the Second World War." I see this as a powerful message that connects the past with the present, while also serving as a warning about the ongoing need for solidarity for future generations.

I highly commend the perspective presented in this presentation, which views the "Comfort Women" issue not only as a "historical task" but also as a "contemporary issue." Looking ahead, I hope that future research will incorporate more diverse case comparisons, detailed data analysis, and an exploration of the potential for institutional change. These efforts could lead to more in-depth

discussions and further advance the East Asian women's human rights movements.

Footnote

In this discussion paper, I use the expression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While there are various academic debates regarding terminology, I believe it is important to specify the characteristics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stations. This is because the term is insisted upon by those directly affected, and in Japan, there is a tendency to reduce the issue to a general "Comfort Women" problem.

